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1-12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 남북한 평화공존상황을 중심으로 -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김형찬(미국서부워싱턴대학교)
최영표(동신대학교)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김정래(한국교육개발원)
이명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정현(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머 리 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남북한 상황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본격적인 평화공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교육분야에서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통합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교육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념과 목표의 차이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통합 등 많은 과제가 있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통하여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임무이다.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제도의 통합과 동시에 의식과 가치관의 내면적인 통합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체 수립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공동의 대화와 왕래,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본격

적으로 남북한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요인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추진할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의 공동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상황에서 추진할 교육통합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통합의 과제로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조직의 통합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평화공존 상황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여 통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한 연구진의 노력을 치하한다.

2001년 11월

연구진 일동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1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요 약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은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경제의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수한 기능적인 연계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통합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통합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거쳐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의 평화공존 상황을 통한 국가 연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을 전망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 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육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장차 평화공존 상황에 적합한 교육통합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평화공존 단계의 성격과 교육상황을 고찰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측면의 교육통합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남북한이 모두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단일국가 형성을 위한 통일의 논리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이 국가 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셋째, 통일된 국가만이 그 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에 대한 보완된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와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공존의 제조건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교육은 일차적으로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남북 주민들이 평화의 사상, 평화의 개념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특히 가칭 ‘한민족평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평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교육교류·협력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접근 방법의 하나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즉, 남북한 평화공존상태 또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북연합단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를 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 남북한 상호간의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점으로 보고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은 남북 통합 방안의 하나로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발생 가능한 상황으로 설정하고 검토함으로써 남북한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의 상황에서 통일 노력을 검토하고 있다.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교육이념의 차이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단계이다. 적극적인 평화교육은 남북한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간에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상호 이해와 같은 인지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교육제도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이슈’를 정하는 ‘교육제도의 호환성’ 단계이다. 여기에는 교육체제, 학교제도, 교원의 지위 및 처우, 교육행정체제, 교육지원체제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남북한간의 대학 입학자격인정, 학력인정, 학술교류의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호환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제3단계는 남북한의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육용어의 통합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호환성 단계’이다. 이는 남북 언어를 공통된 교육용어로 활용하는 과정의 교재와 경비 부담 문제,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평가 체제 준거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평화공존상황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몇 가지 하부 영역에서 상호 호환 가능한 변인을 확정적인 변인

으로 하고,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불확정 변인으로 하여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평화공존체제에서 교육제도에 대한 통합 논의는 비정치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교육제도 협력방안은 주로 대학입학자격인정, 학력인정, 학술교류 등 주로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교육통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 교육제도 중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평화공존 상황의 대학입학자격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학 입학자격 인정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I)이며, 둘째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지닌 자를 대학입학자격자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II)이다. 셋째는 일정 수업연한을 대학 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 III)를 생각할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수업연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단계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학생들의 신체 연령이 남한 학생보다 열세를 드러내는 등 학력 편차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칭 ‘대학입학예비고사’ 혹은 ‘대학진학예비학교’ 운영 등을 통해 북한 학생들의 학력을 보완하는 과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 II는 실질적으로 상대 지역에 대한 학업생활 적응과정에 중점을 두어 진학 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보수성이 강해 교류·협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 과외교육비 지출의 과다 현상 등의 부수적인 장애 요소가 있다. 이는 일정 학업수준 미달자 및 부적응 예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기간의 보충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북한 학생에 맞는 평가체제를 갖추어서 해소할 수 있다.

시나리오 III은 수업연한을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업량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학교의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제도 절차, 그리고 교육과정의 중복·결손에 따른 교

육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학력인정 시나리오는 학교교육 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I)와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 II)로 생각할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학교교육 단계를 기준으로 학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학 및 학생지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학생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경우 수업연한으로 정치하고, 남한 학생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 학교교육단계로 정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 단계별로 예비과정 혹은 적응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시나리오 II는 신체적·정신적 연령을 적응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남북한 수업연한 차이에 따른 부적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중복 및 결손 현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 I과 같이 남북한 학생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혹은 일정 기간의 보충 및 적응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북한의 학술교류는 정치적·사회적 변화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술교류는 초기 단계에서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점차 남북 지역에서 직접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한 학술교류는 남북 역사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사실상의 논의가 어렵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학문의 편협성과 이질적인 학문 풍토로 인하여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남북간의 학술 교류시에 진보 세력이 주도하게 될 경우 남북 사회의 보수층을 자극하여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학술교류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술교류 과정에서 남한측의 인내가 필요하며,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간의 인식이나 방법상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체제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학술교류는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첨예한 논쟁점은 회피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술교류는 교류원칙과 기본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술교류는 민주적·인간적·민족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질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학술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과정 통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남북한 교육과정 편제를 비교하여 상호간 특성 및 장단점 등을 분석해야 한다. 남북한 교육과정의 초기 통합단계는 남북한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이념을 다루는 교과서보다는 비교적 이념적 성향이 적은 교과를 중심으로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념 지향적 교과의 통합은 비이념 지향적 교과의 통합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 단계에서 적어도 이들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요구사항, 즉 전통적 정서와 가치, 민주주의 평등 이념 등의 최소 요건들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이 모두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확실하게 협의의 주제와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기본이 되는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남북의 교육과정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교육과정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해서 10년이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한의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한 10년의 교육과정 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남한의 11,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10학년 이후의 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제는 남북한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치나 경제 체제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는 공통의 기본교육과정에 합의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과정 통

합을 위한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수준의 통합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 공존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 그리고 북한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남북 교육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는 제1시나리오(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와 제2시나리오(반관반민 성격의 합의체 방안)로 제시할 수 있다. 제1시나리오는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여 설치하고 있는 기존의 각종 협력기구를 보완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 교육 협력기구를 구성할 경우,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협력 기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육자간 상호 방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 지역의 각급학교 정상화 지원 방안 논의, 남북한 교과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현실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 양측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원 단체 및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2시나리오는 남북한 학제 균등화를 포함한 교육제도 기구와 교과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과서 편찬 기구를 조성하여 교육당국 및 일선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소속된 위원회 혹은 자문단은 각계 원로, 전문가, 및 현장교사 등으로 구성원을 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후원과 협력을 통해 상호 교육 정책 및 행·재정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협력기구에 대한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반관반민의 성격을 분명하게 유지·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 기구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정부간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은 제1시나리오(남한은 현재와 같은 교육행정체제)와 제2시나리오(남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제1 시나리오는 남북한 양측이 지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교류·협력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간 협력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적·물적 자원 배분 및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육협력의 장애를 극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시나리오는 남북한의 특정 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각 지방들의 특색에 맞는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하고, 각종 교육자료 및 학생·교사·교육전문가들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은 교육동질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수준의 통일 시나리오 및 중장기 플랜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침이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정부간 교육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남한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남북 지방정부간의 제도적·이념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협력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교육재정 지원은 북한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명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 지원제도는 국가 수준의 장기 정책 플랜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한측은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동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재 남한의 정부 재정 및 국민총생산 영역을 대체 전환하여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 지원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단계적 과제로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교육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발상의 대전환이 구축되어야 하며,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 그리고 평화 공존을 위한 교육을 먼저 추진·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평화교육에 바탕한 남북한 교류 협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째,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비이념적이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둘째,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 사회의 변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교육 분야의 교류 협력은 남북한이 상호 호혜적인 분야부터 추진해야 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영역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교육과 관련이 깊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분야 교류·협력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북한 교육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환 방문, 공동 행사 개최, 현장 답사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교육과 학술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유사점을 분석하고, 상호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교육 분야 교류·협력 과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 지원사업, 교육학술 관련 기초자료의 교환, 남북한 교육학술자료센터의 설치 운영, 남북한 공동행사의 개최, 남북한 교원 학생의

상호 방문, 남북한 교육발전 협의기구 구성 등은 이런 교류·협력을 위한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업 실천을 통해 상호 신뢰와 교류·협력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각 교육 영역별 통합의 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이질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왜곡과 비방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남북한 교육의 동질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서 발전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북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내용	4
4. 연구 방법	5
II. 남북한 평화공존과 교육의 방향	7
1. 평화공존 체제 구축의 필요성	7
2. 남북한 평화 공존과 평화 교육	10
3. 평화 교육의 방향	12
4. 평화교육의 원리	13
5. 평화교육을 위한 남북 교육교류 단체 설립 및 운영	16
III.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 시나리오 설정	21
1. 남북한 교육통합의 접근 방법 고찰	21
2. 평화공존 상황의 시나리오 설정	24
3.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전개 과정	29
IV.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과제	36
1. 교육제도 통합방법에 대한 검토	36
2.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제도	37
3. 남북한 교육제도 협력 방안	38

V.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과제	57
1. 교육과정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	60
2.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과정 통합	66
3.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을 위한 협력 방안	90
4.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시나리오	94
5. 요 약	100
VI. 남북한 교육행정 통합 방안	103
1. 평화체제 구축과 교육행정 통합론	103
2. 교육행정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104
3. 평화공존 단계와 교육행정통합	107
4. 교육행정 분야의 예상 시나리오	117
VII.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단계적 과제	138
1. 교육공동체 구성의 의의와 단계적 과제	138
2.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140
3.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과제	148
4.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과제	155
VIII. 결 론	169
참 고 문 헌	172
[부 록 1]	175
[부 록 2]	182

<표차례>

<표Ⅲ-1> 교육체제 통합형태	25
<표Ⅲ-2> 교육통합과 평화교육	26
<표Ⅲ-3> 교육통합의 단계	27
<표Ⅲ-4> 교육통합의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	28
<표Ⅲ-5> 평화의 개념적 열개	31
<표Ⅲ-6> 평화의 개념과 평화교육의 양태	32
<표Ⅴ-1> 남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67
<표Ⅴ-2>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 변천과정편제(1986년 개정)	68
<표Ⅴ-3>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1992년)	69
<표Ⅴ-4>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1996년)	70

<그림차례>

<그림Ⅲ-1>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조건과 과제	22
<그림Ⅲ-2> 발생가능한 미래 상황에 관한 이야기 쓰기	2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남북한 상황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본격적인 평화공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정치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수한 기능적 연계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단계에 대한 규정이 남북한은 각각 외교와 국방권을 보유하는 실질적 2개 국가로 존재하면서 비정치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단일 국가를 표방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실질적으로 평화공존 상황에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우선 교육분야에서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표준적인 교육체제를 합의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통합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한의 분단상태에서 배태된 상호간의 의식의 괴리와 정서적인 갈등 현상,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방식의 차이 등을 완전히

2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만약 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민족통합을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실현한 이후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려면 의식과 정서 등의 내면적 측면에서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의식을 심어주기보다는 경계심과 적대감을 심어주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통일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남북한간에는 의식의 차이와 정서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혼란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더욱이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는 남북한의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대단히 많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교육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념과 목표의 차이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하여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집단주의 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통합 등 많은 과제가 있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통하여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임무이다.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제도의 통합과 동시에 의식과 가치관의 내면적인 통합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의 평화공존 상황을 통한 국가 연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전망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 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통합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은 시도되지 않았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 분야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남북한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면서 평화적으로 상호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통합은 남북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상호 이질적인 교육체제와 요소들을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연계해 나가면서 동질성을 증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남북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육체제와 이념의 측면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교육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냄으로써 장차 평화공존 상황에 적합한 교육통합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의 과제로서 우선 교육제도의 상호 연계와 통합을 실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법, 학제,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행정 분야 등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3. 연구 내용

가. 평화공존 단계의 성격과 교육 상황

- 교육통합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평화공존과 통일과정
- 평화공존 단계의 교육 상황 시나리오 설정
- 교육공동체의 본질과 의의

나. 평화공존과 평화교육의 방향

- 평화공존 단계의 교육
- 평화공존을 위한 교육의 방향

다.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과제

- 평화공존 단계의 교육제도 통합 시나리오
- 남북한 교육제도 개편 과제
- 남북한 교육제도 연계 방안

라.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과제

- 평화공존 단계의 교육과정 통합 시나리오
- 남북한 교육과정 개편 과제
- 남북한 교육과정 연계 방안

마. 남북한 교육행정 통합의 과제

- 평화공존 단계의 교육행정 통합 시나리오
- 남북한 교육행정 개편의 과제

- 남북한 교육행정 연계 방안

바. 평화 공존을 위한 교육통합의 과제

- 교육통합을 위한 단계적 과제
-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과제
-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4.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교육통합론, 평화교육론 고찰
- 시나리오 방법론 고찰
- 북한교육 제도 및 실태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연구 계획서 검토 협의회
- 교육통합 방안 수립 협의회

다. 전문가 의견조사 및 시나리오 설정

- 남북 연합단계의 교육통합 과제에 관한 의견조사 실시
 - 북한 교육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실시
 - 대상자 : 50명(북한교육 및 통일교육 연구자)
 - 내용 : 남북 연합단계의 교육통합 과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라. 평화공존의 교육론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 주제 발표 : 마크 긴스버그 교수(미국 피츠버그 대학)
 - 토론 : 김정래(한국교육개발원), 서유경(통일미래연구소),
이정규(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한국교육개발원)
크리스 윌슨(미국 로올라 대학),
 - 일시 : 2001년 7월 9일
 -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대회의실

II. 남북한 평화공존과 교육의 방향

1. 평화공존 체제 구축의 필요성

남한에는 과거 50년 동안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통일 정책도 변화하였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 통일, 또는 수복지구 회복 안, 박정희 정권의 선경제 발전, 후 통일,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 정권의 3단계 통일방안, 그리고 현정권이 내놓은 대북 포용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3단계 통일 방안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두는 애석하게도 북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통일 방안이다. 북한에서도 통일 정책을 추구하여 왔는데 분단 초기에는 무력 통일을 시도하였으며 한국전쟁 이후 정책을 바꾸어 평화통일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북한의 남북통일 3대 현장은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남한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진술된 통일 방안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통일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둘째는,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남북의 기득권층을 어떻게 통일된 국가에 흡수할 것인가 하는 상세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남북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태를 없애고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이룩하여 그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남북이 체결한 여러 결정서나 부속 합의서, 또는 합의서에 평화구축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한다는 6차 원칙에 의한 구체적 안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제주도 평화 선언도 현 한국정부의 평화, 협력을 통한 통일 정책을 한발 더 진전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이런 선언도 결국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념적이며 자기 정당화의 문서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북한이 모두 평화공존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필요성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

다.

우선, 단일국가 형성을 위한 통일의 논리가 갖는 한계점을 들 수 있다. 과거 50년 동안 남북한이 상호 제시한 여러 통일안은 남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된 국가를 이룩하여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민족국가 논리에 기초를 두었다. 민족국가의 개념은 17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정치개념으로 18, 19세기를 거쳐 더욱 그 개념이 고정화되었으며, 이런 개념이 국수주의로 변하면서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의 비극으로 세계를 몰고 갔지만, 과거 일 민족 일 국가 즉,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 일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당위론은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당위론은 ① 단일 민족국가의 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② 통일이 민족국가 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 ③ 그리고 민족의 안전, 발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근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 맥이 꼭 통일국가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가? 유대인의 민족의 맥은 국가가 없어도 이어왔으며, 현재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그 밖에서 사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의 맥을 수천 년 이어오고 있다. 독일 민족도 서독과 동독이 분할된 이전으로 돌아가 살펴볼 때, 독일 통일국가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 민족은 아직도 민족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스위스에 있는 독일민족, 또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독일 민족은 다른 국가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둘째, 통일이 국가발전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그 신빙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 민족통일과 국가 발전은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국가를 만든 민족이 국가 발전을 못 이룬 민족이 있는가 하면, 통일국가를 만들지 못한 민족이 국가 발전을 잘 이룩한 예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 발전은 통일과의 관계가 있는 것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 또는 사회 융합 정도에 더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끝으로, 통일된 민족국가만이 그 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더 가져다준다는 주장이나 가정은 안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의 문제이다. 탄도유도탄, 대륙간 유도탄, 인공위성 등이 공격 및 방어 무기로 제작, 배치되

며, 지구의 거리를 축소하고 목표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20세기 지구촌에서 이런 안보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안전보다는 불안전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남북한의 현재 분단 상태를 성급한 정치 수단으로 해결하여 꼭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의 정당성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는 통일을 지향하되 남북한 상호 공존하는 상황에서 구축되어야 할 평화 공존 체제이다. 더욱이 역사적으로나 다른 민족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여도 두 국가, 두 정부, 두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평화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평등한 입장에서 통일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통일을 허구적 이상에서 현실적인 전략을 생각한다면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상황과 결부하여 언급하여야 할 중요한 남북한의 문제는 평화 체제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남북한 평화 공존 체제의 구축이 지금과 같은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체제를 존속하게 하는 분단 고착의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 방안에는 권력과 경제 이익, 또는 사회 지도를 독점하던 지배층이 과연,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상호 협조하여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궁극적으로 통일해 가기 위한 전제와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일하기 전에 거치지 않고서는 통일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는 냉전의 산물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리고 싫거나 좋거나 분단은 반세기가 넘는 긴 역사 속에서 결국 두 국가, 두 정부, 두 체제를 공고히 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립 체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만, 분단 고착의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은 현 단계에서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남북한 공동체 구축의 노력을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통

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에 존재하는 군사적 대결이 없어지고, 서로 상반된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집단이 와해되어 남북한 주민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의 주민들에게 각기 지금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즉, 남한 주민들은 남한 사회,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를 좀더 정의롭고 좀더 평등하고 번영하는 사회인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2. 남북한 평화 공존과 평화 교육

남북한의 사회가 공동체 구축 노력을 위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냉전대립 → (현 단계) → 화해협력 → 평화공존 → 국가연합(연방제) → 통일]

한반도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가 비우호적 공존에서 우호적 공존의 상황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남북의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라던가 경제, 정치, 사회의 불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우호적 공존상태에서 우호적 공존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이 상호 평화 공존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상호평화 공존은 먼저 자기와 더불어 같이 사는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공존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서로 공존 대상으로 인정하고, 양쪽의 존재를 서로 위협하지 않아야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남북이 서로 국가적 존재, 정부적 존재, 체제적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존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한이 상대 국가를 인정하고 국경을 다시 설정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대사관을 설치하고 영사 업무도 취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평화’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직접적 폭력을 방지하는 ‘소극적 평화’ 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을 방지하는 ‘적극적 평화’를 고려해야 한다. 실지로 소극적 평화는 사회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흔히 냉전시대의 평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구축의 과정은 복잡하여 장기간의 시일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의 현재 비우호적 공전에서 우호적 공존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 그로 인한 북미간의 대결 문제, 남북한 경제 관계, 북일 보상 문제,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치하는 문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런 제반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이 우호적 공존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협조와 화해의 공존으로 진전할 수 있다. 이 협조와 화해의 공존 기간에는 다방면에서 사회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북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데 환경 보호, 어장 공동 개발, 기술 정보 이전, 관광지 개발 등이 사업이 예가 될 수 있다.

넷째, 남북이 상호 공존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평화교육의 필요성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제도상의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람들이 평화 공존을 바라게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 남한의 반공 교육이나 북한의 주체 교육 사상을 초월하여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남북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섯째, 평화 교육은 남과 북이 각 분야에서 상호간의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평화 교육의 방향

우선 평화의 개념을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평화는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과 뜻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 정의로서의 평화는 개인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또는 국제적인 면에서 제일 불리하고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평화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정의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조직적 폭력을 배격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세계에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 비핵화, 군비 축소를 주장하며 모든 전쟁기구와 전쟁 물자 생산 기관에 대항하여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

셋째, 평화는 전쟁을 없애는 행동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또는 국제생활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여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평화의 제 조건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간의 염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꼭 알아야 할 사상, 개념, 그리고 기술과 방법을 학습하게 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가정, 지역 사회 및 세계사회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인간의 의식적이며 이성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교육은 일차적으로 상호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어느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

니다. 평화교육은 모든 사회에서 필요한 학습행동으로 분쟁이 없는 사회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의 문제도 갈등과 분쟁의 관계에서부터 발생된 것에서 시작된다. 남북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남북의 주민들이 평화의 사상, 평화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4. 평화교육의 원리

인간의 역사는 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로운 시기보다는 분쟁의 시기가 많았다는 것이다. 평화교육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 교육은 모든 인간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인과 사회생활에 경험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기술을 학습하여 습득시키는 교육의 형태이다. 다른 분야별 교육 양태와 달리 평화교육은 인간의 의식적이며, 지적, 그리고 감정적 행동을 포함한다. 평화교육은 인간의 이성적인 행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 관리하여 조정하고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동이 모두 다 평화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지금까지 실행된 성공적인 평화교육 경험에서부터 그 원리를 찾아내어야 하는데 요구되는 원리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데에 따른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① 평화 교육은 기본 교육이다.

사람은 누구나 분쟁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려고 하며 사회에 평화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사회 생활에 기본이 된다. 누구는 평화교육이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뜻이다. 사람이면 다 평화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남북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평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평화 교육은 전 생애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모든 시민의 평생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으로 일시적 또는 일회용적인 교육이 아니다. 분쟁이 다양하여 그 빈도와 강도가 다르고 또 분쟁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평화교육은 일생을 통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③ 평화 교육은 조기 교육이어야 한다.

사람은 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개인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발생하며 고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분쟁의 해결을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여 도전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이라던가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세살 때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은 평화교육에는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 평화 교육은 가정 교육이다.

거의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가족 또는 가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집단 속에서 행동을 하면서 경험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지식, 감정, 그리고 습관을 터득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가족이나 가정 속에서 인간 관계를 맺고, 배우게되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⑤ 평화 교육은 지역 공동체 교육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부상조하면서도 그 속에서 분쟁이 야기된다. 분쟁은 가정에서도 생기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서로 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 교육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⑥ 평화 교육은 사회 도덕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교육 대상자들이 자기들의 사회 체제를 학습하여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게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때문에 평화 교육은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적 평화 교육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를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불평등, 부정을 폭로하고 평등과 정의를 이룩하려고 하는 개인을 교육하는 것이다.

⑦ 평화 교육은 다문화적이면서 교차 문화의 교육이다.

인간 사회의 분쟁은 같은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보다, 문화가 상이한 사람들간의 분쟁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 집단과 그 민족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화 교육은 다문화를 배우고, 교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다.

⑧ 평화 교육은 조화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분쟁만을 해결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여 평화를 찾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환경 교육도 될 수 있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자연 회복, 또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도 될 수 있다.

⑨ 평화 교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인간이 과거와 현재에 어떠한 분쟁을 가지고 왔으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였는가, 또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는가를 시간적으로 조명하게 하는 교육이다. 더욱, 평화 교육은 장래를 바라보면서 분쟁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던가, 집단, 또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점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⑩ 평화 교육은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이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의 인권을 억압 또는 박탈하고 서는 그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하게 할 수 없다. 또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을 등한시하는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며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계층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평화를 갖기 힘들다. 평화 교육은 사회의 인권 신장을 통하여 그 사회를 더욱 민주화시키며, 더 나아가서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평화교육을 위한 남북 교육교류 단체 설립 및 운영

: 가칭 ‘한민족평화교육센터’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남북통일은 정치적 흥정의 일회성을 가진 산물이 아니며 오랜 기간을 두고 다듬고 양육하여야 할 과업이다. 통일과 마찬가지로 평화공존도 일회용적 산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업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 특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교육은 요구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평화교육을 남북한 교류의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교육교류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일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교육의 단체는 몇 가지의 전체 조건이 있다. 첫째, 평화교육을 위한 교류단체는 남한이나 북한의 어느 한쪽만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러한 조직을 가칭 ‘한민족평화교육센터’라고 명칭하고 이러한 교육체제를 network식으로 운영하며 육성하여야 한다. 이 network식 운영이라는

말은 어느 한 편이 체제상이나 재정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각 독립하면서도,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더불어 이 network은 사이버 network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셋째로, 이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남북한의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한민족을 한데 묶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한민족 다문화 공동체를 창설하여서 거주지와 문화는 상이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서로 인내심과 이해심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 남북한의 형편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한민족평화교육센터의 사이버 network의 중심을 서울에 두고 운영하며 평화교육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실행하되, 재외동포들도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주최할 수도 있다. 다섯째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를 서울과 평양,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합독립국가에 설치하고 합의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순번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일반학교와 재외동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화교육프로그램은 ‘한민족평화교육센터’에서 책임을 맡고 실행한다.

무엇보다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교원 및 학생이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남북 교원 공동의 학술답사를 위한 모임, ② 학생들의 축제 및 학예행사, ③ 체육대회, ④ 민속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임과 행사는 상호간의 선입견을 벗게 하고 상호이해를 돈독하게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한민족평화교육센터’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남북한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① 평화에 관한 글짓기

남북의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는 생사로서 평화의 정의, 평화의 종류, 평화의 목적, 평화와 인간 평화와 사회,

평화와 환경 평화의 방법 평화를 만드는 기술 등에 관하여 작문을 짓게 하여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② 평화그림 그리기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학생까지 실물화, 추상화, 사생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묘사하고 자기 개인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

③ 평화예술제

남북한 학생들이 음악, 무용, 연극, 발레, 영화 등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그들의 평화에 대한 사상, 평화에 대한 갈망, 평화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표현으로 나타내게 장려한다.

④ 평화 연 날리기

남북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색과 여러 모양, 그리고 크기의 연을 만들어 날리면서 평화를 갈망하는 뜻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행사는 남북학생들간에 길고 빈번한 대화가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남북정부당국이 학생들의 빈번한 접촉을 바라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와 같은 행사는 적절한 교육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만약 남북당국이 이와 같은 기초적 행사보다는 더욱 의미 있는 교육적 행사를 하기 원한다면, 평화토론대회, 분쟁해결을 위한 연극 등도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평화교육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학술교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화교육 자료 교환 및 전시

평화교육은 상호간의 이해를 토대로 증진된다는 점에서 쌍방간의 평화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교환·전시할 필요가 있다. 교환·전시될 내용으로는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 평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평화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및 교구재 등을 들 수 있다. 교환은 남북한간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정하고, 전시는 ‘센터’내에 연중으로 기획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화교육 자료 공동 개발 사업

평화교육이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평화교육 자료의 개발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비정치적이고, 비이데올로기적인 평화교육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은 비정치적인 내용이면서 남북한의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는 분야이므로 ‘센터’에서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남북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남북한의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남과 북이 바뀌가며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는 별도로 공동학술 행사의 일부를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④ 재외 동포의 학술교류

세계 각지에 산재한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

하여 ‘한민족평화교류센터’를 학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무장지대 안에 건립하는 방법일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첨예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평화 증진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건립 규모는 본관을 비롯하여 교육장(강의동), 도서관, 자료전시관, 운동장, 행사장, 놀이시설, 숙박시설, 식당, 기타 편의시설을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Ⅲ.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 시나리오 설정

1. 남북한 교육통합의 접근 방법 고찰

가. 시나리오 상황의 설정

이제까지 남북한 상황에서 남북한 평화공존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과 평화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여기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적 연구기법 중의 하나인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 등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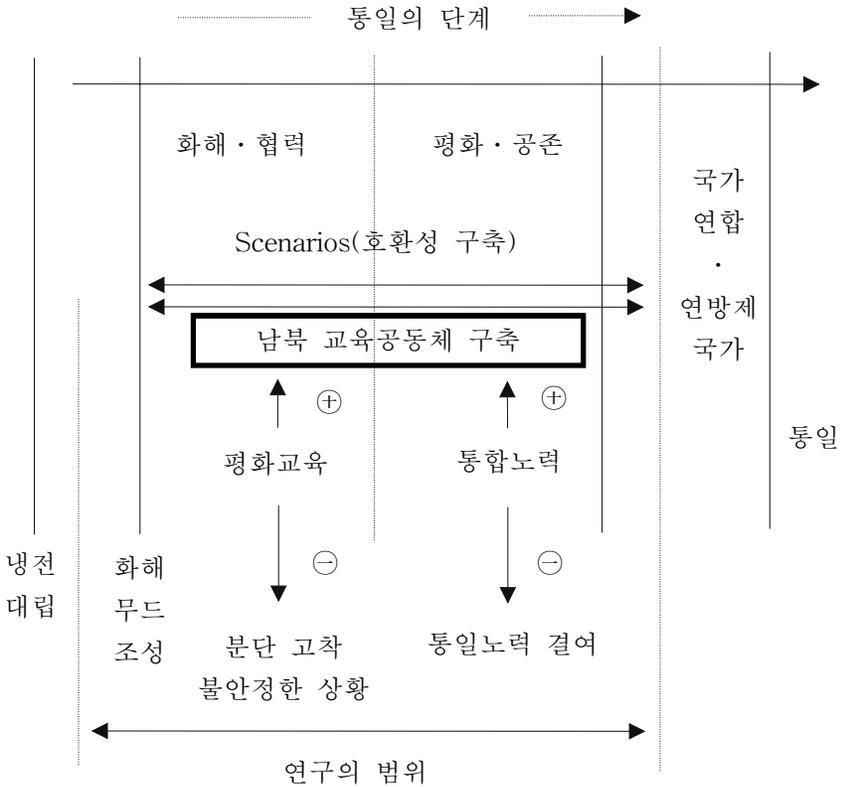
우선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따르는 상황 설정의 난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남북한 평화공존 상태’ 또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북연합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한 평화공존 상태’ 또는 ‘남북연합단계’에 관한 연구진의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 상 현재의 상황을 남북한 상호간의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점으로 보고,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할 상황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단계를, 앞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냉전대립 → (현 단계) → 화해협력 → 평화공존 → 국가연합(연방제) → 통일]

이 단계 중에서 [○ 화해협력 → ○ 평화공존] 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육 통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 조건과 과제를 확인하고자 하고자 한다.

<그림Ⅲ-1>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조건과 과제



앞의 <그림Ⅲ-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화해협력 → ○ 평화공존] 단계에서 교육통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통합이나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 만큼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 즉 평화 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의 호환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적 개념은 ‘남북 공동체’, ‘평화공존’, ‘호환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호환가능성은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에서 확실성의 요인을 확정하고, 불확실성의 요인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채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나. 시나리오 기법

이 연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적 연구기법(Strategic Quality Planning) 중의 하나이다. 이 기법 중에는 시나리오 기법(Scenario Planning)뿐만 아니라 ‘경향외삽법’(Trend Extrapolation),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형태학적 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 ‘미래동향조망기법’(Futuring Tree), ‘조사분석기법’(Survey Method) 등이 있다.

‘시나리오’는 ‘인과관계와 의사결정상황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일련의 가상사건’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은 “시나리오를 다양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여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화된 방법”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법은 의사결정을 그 목적으로 사전에 결정된 환경과 불확실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그럴듯한 미래상황을 제공하거나 혹은 일련의 사건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은 일종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 통합 방안의 하나로 남북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검토함으로써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상황에서 통일 노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에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거나 간주되었던 요소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모종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기법은 조작적 특성을 요구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제한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작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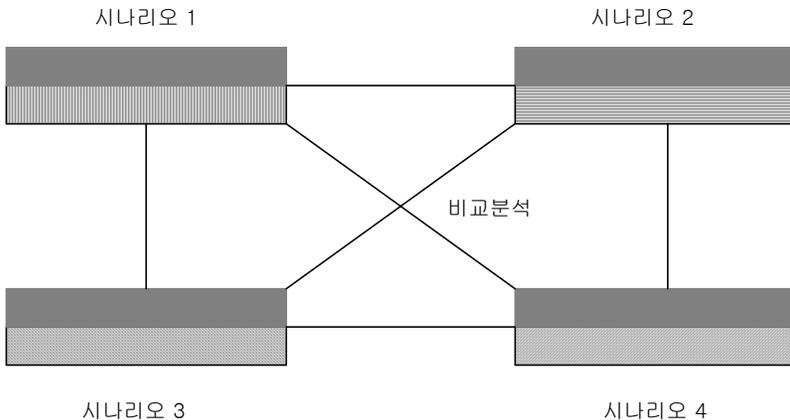
① 미래상황의 다양성을 인지한다. → ② 미래상황의 제한성을 확인한다. → ③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즉 환경적 요인을 범주화한다). → ④

동기를 유발하는 이야기를 개발하고 소개한다. (흥미 유발을 위한 동기유인체제 개발함: 시나리오의 특성상 미래 상황 전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한다) → ⑤ 흥미 유도를 위한 창의성을 발휘(사용)한다. → ⑥ 확실성을 고려한다(예측 가능하면서 불변의 변인을 확정하는 일을 지칭한다). → ⑦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발생 가능한 불확실한 요소가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가정한다). → ⑧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나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과정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⑧번이다. 즉 ⑧번의 조작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성을 공통부분으로 두고 불확실성의 요인을 비교·분석하면서 구성한다.

<그림Ⅲ-2> 발생가능한 미래 상황에 관한 이야기 쓰기

(공통부분과 비공통부분)



2. 평화공존 상황의 시나리오 설정

여기서는 남북한이 어떠한 통합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교육체제 통합

의 형태를 어떠한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의 남북한 통합에 관한 연구가 남쪽 중심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했다는 데에 있다. 체제통합에 따른 교육체제통합의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1> 교육체제 통합형태

(체제) 통합방법	교육체제 통합형태
일방적 통합	남우위적 교육통합
	북우위적 교육통합*
상호협의를적 통합	상호보완적 교육통합
	제3의 형태 교육통합

위의 표에서 북우위적 교육통합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교육통합에다 북한 교육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 다른 형태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표가 시사하는 바는 체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통일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 공동체의 형성이나 교육통합의 방향 제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거의 없다. 물론 교육통합의 방향이나 남북간의 교육공동체의 성격이 위와 같은 남북체제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에 따라 종속적이고 유동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상황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 관계에서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은 남북간의 분단을 전제로 한 공존 체제를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컬어지는 평화교육이란 국가간의 또는 분쟁지역에서의 전쟁예방과 전쟁 발발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남북관계에서 평화교육은 일단 분단을 전제로 하는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이 갖는 특수성이다.

그렇지만, 평화교육이 분단의 고착화라는 부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교육은 그 본래적 목적이 평화의 정착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교육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과 교육통합이라는 두 가지 가능한 변인을 놓고 각각의 적극성 여부를 ⊕와 ⊖로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Ⅲ-2〉 교육통합과 평화교육

	교육통합 ⊕	교육통합 ⊖
평화교육 ⊕	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통한 교류촉진 2단계: 교육제도의 통합 3단계: 교육내용의 통합	일시적, 전략적 분단 상황에서 평화공존: 적극적인 통일노력의 결여
평화교육 ⊖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교육공동체의 구성	분단의 고착 및 불안정한 분단상황의 연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평화교육(평화교육⊕)과 적극적인 교육통합 노력(교육통합⊕)을 전제로 하여 적어도 세 가지 단계의 통합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즉 시나리오의 기법 상으로 보면, 적극적인 평화교육과 적극적인 교육통합이 확실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성으로 놓고, 이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

(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 평화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강조한다. 이해 없는 다음 단계의 통합이란 불가능하므로 남북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2단계: 교육제도의 통합) 다음 단계로서 교육제도의 통합을 모색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교육제도라는 것은 학제, 자격체제, 교원양성체제, 교육행정조직 등의 일체의 교육운영체제를 의미한다.

(3단계: 교육내용의 통합) 여기서 교육내용이라 함은 교육과정학에서 언급되는 교육내용이 아니라 교육을 구성하는 내용을 일컫는다. 남북한의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교육용어, 남북한이 각기 지향하는 교육 목표(수업목표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교육목표), 교육평가체제, 교과목의 수, 교과목의 통합 가능성, 교육설명(교육이론) 체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연구함에 있어서 통합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혼선을 피하고 ‘통합’의 핵심을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의 핵심인 ‘호환성’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단계와 3단계의 통합에서 시나리오를 통하여 남북한 체제에서 사용되는 교육제도와 교육인프라, 자격제도 등과 같은 내용의 호환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Ⅲ-3> 교육통합의 단계

	교육통합 ⊕	교육통합 ⊖
평화교육 ⊕	<p>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통한 교류촉진</p> <p>2단계: 교육제도의 호환성 - 호환 가능한 제도·체제의 연계</p> <p>3단계: 교육과정의 호환성 - 교육내용의 통합</p>	일시적, 전략적 분단 상황에서 평화공존: 적극적인 통일노력의 결여
평화교육 ⊖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교육공동체의 구성	분단의 고착 및 불안정한 분단상황의 연출

위의 단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평화교육’ 단계 중에서 **평화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는 일을 포함하여 평화교육의 목적 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화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일이다.

둘째, **교육제도의 호환성**으로서, 호환 가능한 체제나 제도를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통합 노력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교육제도나 교육체제의 일부는 남북한 당국의 핵심적 당사자가 합의하면 남

북간에 호환 가능한 요소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요인의 예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 학령에 따른 학생교류협력
- * 학력(學歷) 상호 인정 및 교환
- * 직업, 자격, 능력 인증 상호 교환
- * 학생 인적 교류: 학생 자치 활동 차원
- * 교육프로그램 교환: 학점은행제의 맥락에서 학점 인정과 교육계좌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Ⅲ-4> 교육통합의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

교육제도의 호환성	교육과정의 호환성
인력; 행정조직; 재정확보; 교과서 개발 체제; 교원양성, 교원급여 및 운영체제; 교원교류; 교원직급 및 승진 체제; 입학시험 체제; 교육기관의 유형;	(생활·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된 교육적 요인) 교과목의 설치; 교과목의 수; 교과목의 통합; 교육용어, 교육목표진술; 수업진행방식; 교육평가체제; 학생자치활동 조직;

위의 호환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시나리오 기법 상 가장 중요한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변인의 확정되면 이 작업이 즉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

① 확실성: 변동 요인이 별로 없는 요인 중에서 시나리오 작성에 중요한(결정적인) 요인만을 상정한다.

② 불확실성: 다양성, 제한성(범주화), 동기유발, 창의성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요인을 상정한다.

연구의 진행상, ‘남북 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확실성’의 변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교육적 상황에서 “호환 가능한 교육적 변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전개 과정

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교육 전개 과정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가장 먼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교육적) 문제가 각 영역별로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의 세 가지 단계별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확인한다. 남북한간의 교육이념의 차이를 확인한다. 교육행정(지원)체제와 학제를 상호 비교하여 이해한다. 교원의 양성과 수급, 자격제도 등을 비교한다. 이 연구에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이 요구되는 이유는 남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간에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상호 이해와 같은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교육의 의도가 이와 같은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평화교육의 목적과 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평화교육의 요소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해보도록 한다.

평화교육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평화교육’의 개념이 어떤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는 ‘전쟁을 포함하여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전쟁이지만, 전쟁이 없다고 평화롭거나 평화로운 상태가 보장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폭력은 사람이나 재물에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공격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폭력은 제도화된 것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폭력은 지배 세력이 그들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연중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폭력’이다. 이

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지배계층이 사용하는 폭력이나 저항을 ‘아래로부터의 폭력’이라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폭력 또는 피지배계층의 폭력은 그 양상이 쉽게 드러나고, 직접적이며 작고, 국지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위로부터의 폭력은 간접적이며 지속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나더라도 그들 스스로에 의해 합리화되고 묵인되기 때문에 ‘합법적 폭력’이라 한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과 같이 법이나 제도 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가리킨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문화적 폭력’이란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을 이용한 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접적 폭력 행위나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정당화하거나 최소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간주하기 위하여 종교와 사상, 학문, 언어나 예술 등을 사용하는 폭력이다.

폭력의 적극성 면에서 보면, 평화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에 적용하면, 전자는 ‘국가안보’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동원되는 평화의 개념이며, 후자는 사회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평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남북한의 현 단계에서 평화 정착의 단계로 이행하는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분단의 고착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북한 공히 국가적인 번영과 각 개인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목표로서의 평화’와 ‘수단(과정)으로서의 평화’가 그것이다. 이제까지 일반적

으로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되어 왔고 또한 널리 인식되어 왔다. 즉 ‘수단으로서의 평화’는 무시되어 왔다. 이를테면 중동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국지전을 허용하고 용인하는 것은 ‘목표로서의 평화’만을 중시하고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무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단으로서의 평화’ 또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단(과정)으로서 평화’를 달리 설명하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뜻이다. 폭력이 일시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폭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수단으로서 평화’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교육이 남북 분단의 고착에 머무르거나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의 단계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폭력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구안한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요소는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우선 이제까지 살펴본 ‘평화’의 개념적 열개를 통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Ⅲ-5> 평화의 개념적 열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목표로서의 평화	(냉전시대의 국지전 합리화 논리) (분단상황에서 고착 논리)	(강대국 이익을 위한 타국에서의 국지전 합리화 논리)
수단으로서의 평화	-	평화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위의 표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교육의 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Ⅲ-6> 평화의 개념과 평화교육의 양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목표로서의 평화	냉전시대의 반공교육 내용	-
수단으로서의 평화	-	(평화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인간의 존엄에 대한 내용 타인에 대한 배려 폭력의 폐해에 관한 실증적 사례 폭력예방에 위한 노력 적극적 평화의 필요성과 남북통일 남북 이질감 극복을 위한 내용

(2단계: 교육제도의 호환성) 1단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제도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이슈’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교육체제, 학교제도, 교원의 지위 및 처우, 교육행정 체제, 교육지원체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간의 대학입학자격인정, 학력인정, 학술교류의 문제에서 불확실성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 호환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때, 불확실성 축의 결정에 나타나는 난점을 고려한다. 즉 전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문제(정치적 변인, 시간상의 시점의 결정 등)를 고려한다. 또한 교육문제 중에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문제의 결정하여 시나리오 작성이 방만해지는 것을 막는다.

(3단계: 교육과정의 호환성) 우선 남북한의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교육용어의 통합인 경우, ① 서울 표준어를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교재와 경비의 공급을 남측에서 부담함, ② 북한어를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교재와 경비의 공급을 북측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남측이 부담할 것인지, ③ 교육이론을 일차적 준거로 하여 통합 등. 그러나 ③의 경우, 교육체제가 남북한 공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하위변인으로 교육이론에서 사용되는 언어 차이를 불확실성으로 잡는다.

남북한이 각기 지향하는 교육목표(수업목표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교육

목표)의 경우, ① 남한식의 수업방식에 따른 목표진술의 채택할 경우 무엇을 준거로 하여 진술할 것인지, ② 북한식의 생산지향적 목표진술 방식의 채택할 경우 북한의 생산지향적인 목표 방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③ 남북한 방식의 혼합 또는 제3의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한다.

교육평가체제의 경우도 교육목표의 경우를 준용한다.

나. 평화공존 상황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이제까지 시나리오 기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단계별 교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단계 중에서 2-3단계의 내용 중에서 본 연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에 포함된 내용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이 상호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 분야에서도 남북한은 공통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인 연계를 도모함은 물론 교육 상황에서의 상호 호환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하부 영역에서 상호 호환 가능한 변인을 확정적 변인으로 하고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불확정적인 변인으로 하여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제도 분야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분야는 법령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당국자가 상호간에 비교적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상호 학력인정, 대학입학자격의 호환, 남북한 교원의 학술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의무교육제도의 통합이 있는데, 이는 평화공존의 상황보다는 통일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가장 큰 교육적 과제라는 점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남북한 상호 학력의 인정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학제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남한의 6-3-3-4제와 북한의 4-6-4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상호 인정을 할 것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 이질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모자라는 북한의 2년이 문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 자격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학제상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학을 위하여 북한의 10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남한의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확정성으로 하였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가 심각할 경우, 남한의 대학에 조건부로 입학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대학에 입학할 허용하되, 과거의 예과(豫科)처럼 1-2년간의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북한의 대학에 이수할 경우, 몇몇 이수과목 면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원의 학술 교류의 경우, 초등교사, 중등교사, 대학교수들의 기존의 교류 원칙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인 요인을 토대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분야로서 교육과정의 영역은, 바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영역보다 훨씬 통합이 어려운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재의 공동사용, 통합교과 교재의 개발, 이수 학점의 인정 등이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영역이다.

교재의 공동사용은 비교적 이념적 성향이 없는 교과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수학, 과학, 예체능, 기술, 컴퓨터 등의 교과서와 교재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보고, 불확정적 변인으로서 이에 따른 예상되는 상황과 문제점 등을 추출해 낼 수 있다.

통합교과의 개발은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어와 역사 교과서 교재의 개발을 확정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교과에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이념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를 배제하고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학생의 이수 학점 또는 성적의 인정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 즉 교과서가 다르며, 교육과정 상의 이수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 학점이나 이수 성적의 상호 인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남북한의 학점이나 성적 이수 체제를 먼저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 호환 가능한 요소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잡고, 불확정적인 요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육행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결단 등과 같은 비교육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면서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남북한 정부차원의 교육협력기구의 구성 문제, 북한의 교육재정 지원 문제, 기타 남북한 교육협력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차원의 교육협력 기구의 구성은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의 교육협력기구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정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 단위를 지칭한다. 여기서 확정적인 요인은 각기 차원에서 누가 기구의 구성원이 되는가의 문제, 어떤 교육 과제와 사업이 이 기구의 기능이 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불확정적인 요인을 추출·고려하면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 문제는 북한이 표방하는 무상의무교육이 명실공히 무상의무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재정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잡아야 한다. 특히 남한이 현재 9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확정적 변인을 설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교육협력 사업은 다양한 경로와 분야를 통하여 마련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남북한이 평화공존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시나리오 상황에서 확정적인 변인을 설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과제

1. 교육제도 통합방법에 대한 검토

기존 연구 중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육제도의 통합을 다룬 연구로는 1994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최영표 외)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을 3단계 통일론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단계의 세 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에서의 남북사회의 모습을 다룬 바탕 위에서 교육의 모습을 상정하였다. 이어서 남북교육의 통합과제를 논의하는 순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과제로 설정한 평화공존 상황에서의 남북교육통합 주제로 볼 때 이 연구에서는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의 통합과제들이 유의한 시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공존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완화하고 남북사회 분야별로 교류·협력의 추진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의 남북의 교육은 각각의 사회체제와 이념에 바탕하여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남북교육공존형이라 이룩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통합의 과제로서는 서로의 교육제도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비공식적, 공식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치성을 띤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며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정 수행하고, 예체능계 학교간에 친선 목적의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는 남북공동체 헌장의 규율에 따라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제도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시기로서 경제 공동체 특성이 강해짐에 따라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도 점증되어 간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의 특성을 지닌 교육체제도 상호간에 기본적으로 유지·존속되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일부 부문에서는 연합 운영이 시도된다. 따라서 남북교육부분 연합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의 교육통합의 과제로는 남북교육정상회담 추진, 남북교육공동체 현장의 채택, 교육학술부분 교류·협력의 중점 추진, 교육 부문별 연합운영, 표준 교육제도안 마련 및 적용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때도 남북체제의 다른 점 때문에 정치성 부문의 연계는 사실상 어려워 비정치성 부문의 교류·협력 및 연합이 위주가 된다. 따라서 취학전 단계의 탁아소나 유치원 특히 기업 부설형이 우선될 것이며, 상호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이 관심을 끌게 된다. 또한 산업발전의 인력수요의 요청에 따라 성인교육부문에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평화공존체제의 남북교육통합을 연구하는데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평화공존체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의 두 가지 단계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제도 부문에서는 상호체제의 다름으로 인하여 평화공존체제에서는 교류·협력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되게 될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가고 접근의 필요성이 점증되어 감에 따라 부분적인 남북연합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 발전과 관련한 직업교육 부문이 우선할 것이다.

셋째, 평화공존상황에서는 기능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체제가 너무 다르고 국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급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2.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제도

평화공존시대 남북한은 지금까지의 적대감과 불신풍조를 해소하는 한편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단계라는 특성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상호 이질적인 체제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교류·협력하는 상황이므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거론되기 힘들다.

교육제도는 이념과 체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개변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다. 특수한 부문 예컨대, 정치성과 연계성이 낮은 직업인력 양성 등과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호연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계로 평화공존상황에서의 교육제도의 교류·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학제상의 수업연한을 동일하게 조정한다든지 의무교육 수업연한을 협의 조정한다든지 하는 협약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학학력 고사를 공동으로 치룬다든지 하는 방안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남북간에 제반 부문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입학 자격 인정 문제와 학력인정 문제는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 남북간에 물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며 물적 교류협력에 따른 인적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반기에는 기업이나 상사 주재원들의 당해 지역 이해 및 정착화를 위해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주로 성인들의 향학 요구에 관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주재원들의 자녀교육이 급선무로 등장하게 되어 이들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교류·협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주재원과 그들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상대지역의 개발 및 성취육구 차원에서 유학하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를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이에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

3. 남북한 교육제도 협력 방안

가. 대학입학자격 인정

(1) 평화공존시의 예상 상황

평화공존시의 남북한의 대학입학자격 인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북한의 정치 사회체제가 큰 변화

없이 현존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학교제도도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서 연유한다.

일차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이전 수업연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초·중등 단계 12년 및 동등학력을 지닌 자로 하고 있어 12년의 정규수업연한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면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는데 사회발전 추세로 볼 때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건이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교육이 중시하고 있는 10년의 통합교육을 채택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나이로 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본연령이 남한은 만 18세인데 대해 북한은 만 16세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여서 2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소수의 직통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대학이 직통생을 늘려가는 상황이며 북한이 향후 개혁·개방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직통생의 비율은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이 차이를 기본으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실질적인 대학입학자격 인정에 있어서 남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개방사회이고 법치사회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대학교육이 대중화되어 있어 위에 제시한 기본의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사회인데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견지하고 있어 개방성이 미흡하다. 대학 진학 시 쿼터제와 대학예비고사 그리고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특별전형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 전에 지역별로 대학예비고사를 실시하여 대학 직통생 정원의 배수를 선발하여 할당된 쿼터만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쿼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7~10년간의 군대로 가며 하위성적자들은 대체로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인이 된 자들은 군 생활 중 또는 제대 후에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시나리오 설정

평화공존의 대학입학자격 인정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학 입학자격 인정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Ⅰ)이며, 둘째 시나리오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지닌 자를 대학입학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Ⅱ)이다. 세 번째는 일정 수업연한을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Ⅲ)를 들 수 있다.

(가) 시나리오 Ⅰ : 중등교육과정 졸업(예정)자를 대학입학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시나리오Ⅰ은 수업연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단계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들도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곤란을 겪을 문제점도 많다.

○ 예상문제점

첫째, 일반적으로 북한 학교를 다닌 자들이 신체 연령이 2년이 짧아 남한의 대학진학 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세를 드러내 부적응할 가능성이 많다. 설문조사에서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남한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북한 학생의 학력 수준이 특정 교과에서 남한의 학생보다 낮아, 학업 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심리적,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무책임한 방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현재 남북한의 교육과정은 편제나 내용에 있어 차이가 많다. 또한 교육방법이나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다. 남북체제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평화공존 시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시나리오 I 고등중학교 졸업자에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이 어긋남 · 남한 학생들의 불만 야기 · 현실적으로 우수학생 외 진학 후 적응 곤란 · 심각한 학력차, 특히 인문 과학부문에서 학습부적응 심각 · 또래와의 불균형, 심리적 위화감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 무책임 · 별로 문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인정시험을 거치도록 함 · 고교 2년에 편입 · 수시입학제 도입하고 남한학생도 10년 이후부터 진학 가능하도록 함 · 북한학생 별도 기준으로 전형 · 별도의 보충과정 제공하여 일정 수준까지 유도-보수교육, 예비학교 등의 과정이 적절함 · 적응과정 제공 · 과도기적으로 북한학력 인정하고 대학에서 보충과정 추가 이수

지금까지 남북한의 교육내용이나 학력수준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중등교육단계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보편적인 학력수준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탈북학생들의 경우를 볼 때, 수학, 과학 부문에서는 북한의 학력수준이 상당히며 약간의 보충교육만 제공된다면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 영어를 포함한 여타 교과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문 조사에서도 인문과학계통에서의 학습부적응이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 지적인 부문 이외의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학교 사회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적응상 많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여러 경우로 미루어 볼 때 북한 학생들의 학업부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현실적으로 소수의 우수학생 이외에는 진학하여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불균형으로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응답자의 반응이 있었다.

셋째, 남북대학체제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어 남북학생 상호간에 부적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등교육과정 졸업(예정)자를 대학입학 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남북대학이 매우 다르게 체제화 되어 있어 적응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대책 방안

이상에서 거론한 여러 문제점으로 볼 때 시나리오 I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몇 가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칭 ‘대학예비고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적응가능성을 검토한 후 곧바로 진학을 허용하거나 또는 일련의 보충 과정 이수조건으로 진학을 허용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별도의 학력인정시험을 거치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방안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수업연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학학업적성의 실질조건에 따라 진학을 허용하게 되어 합리적이거나 행정상 번거롭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남북의 대학들이 기피할 가능성이 많아 보편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대책을 보편화시키려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둘째, 가칭 ‘대학 진학 예비학교’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상대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자들에게 이 과정을 최소 요건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학교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학이 대학예비고사를 치르고 보충과정을 제공하는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지역단위로 대학진학예비학교를 설치하고 이 과정을 거친 자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책은 효율성이 높으며 대학이 부담을 갖지 않아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설문조사에서도 별도의 보충과정을 제공하여 일정학업수준까지 올린 후 입학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명칭상 적응과정 제공 그리고 보수교육, 예비학교라는 이름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북한학력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대학에

서 보충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반응을 보인 전문가도 있었다.

(나) 시나리오 II: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일정 학업성취수준 이상인 자를 대학입학 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시나리오II는 실질적으로 상대지역의 대책 학업생활이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진학 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적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시나리오도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이 방식은 보수성이 강해 교류·협력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문제점

첫째,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많을 것이며, 교육 교류·협력이 활성화하기 어렵다.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상대교육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상위 성적 우수자 일부 또는 사전 준비자만이 대학입학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상대를 상호인정하고 포용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다.

둘째, 과외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문제화 할 가능성이 많다. 일정 학업성취수준 이상인 자, 또는 상대지역 교육 적합자만이 유학하게 되어 일부 유학에 뜻을 둔 자는 사전에 과외를 받거나 별도 준비과정을 이수하려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고 교육비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이때문에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북한지역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우월한 남한 대학을 선호하게 될텐데 교육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준비과정에도 접근하기가 어려워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탈락학생의 불만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도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수용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시나리오 I에서 제기되는 사회적인 부적응과 갈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북한 학생은 실제적으로 초중등 10년간 공부하고서 우수한 자들만 곧바로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또래집단과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어서 부적응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와 같이 인문사회과목에서의 열세도 지적하였으며 남측학생들의 불만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을 보인 자도 있었다.

넷째, 북한의 학제를 최대한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방식을 채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북한의 10년과 남한의 12년 학업성취도를 비교한다는 것도 넉넉스이 며, 또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평가준거를 잡기도 상당한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 향후 대책 방안

첫째, 일정 학업성취수준 미달자 또는 부적응 예상자를 대상으로 남북 협력기금으로 일정기간의 보충과정을 제공하도록 한다. 북한을 포용한다는 정책의 취지에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남측의 대학에 유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삼아 남북협력기금으로 일정기간의 보충과정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보충과정은 앞서 언급한 각

대학이 주체가 되어 예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와 독립된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수용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일정기간의 보충교육이나 적응기간을 제공한다는 반응이 있었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후 대학 자체적으로 예비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 두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둘째, 평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북한학생에 맞는 평가준거를 마련하고 균형감있는 평가지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작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서의 학력평가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특례입학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시나리오 II 일정학업 성취수준 에 따른 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함 · 형평성 어긋남 · 학기 개시일이 달라 공백기간 · 남측 학생들의 불만 야기 · 10년과 12년제 성취수준 비교 무의미 · 또래와의 불균형, 부적응, 갈등 · 학제의 파괴 · 인문사회과목 문제 심각 · 북한사회 불평등이 남한에 전이 · 평가준거의 체계적 설정곤란 · 판별의 제도적인 장치 곤란 · 탈락학생의 불만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학생에 맞는 균형감 있는 평가 개발 · 남한 학생 설득 · 학생선발은 대학지출에 일임 · 대학예비과정 운영 · 일정기간의 보충교육과 적응기간 제공 · 고교졸업검정시험응시자격 부여 · 북한학생 특례 입학 · 북한에서의 학력평가 인정

(다) 시나리오 III: 일정 수업연한을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나리오III은 수업연한을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수업량을 신체·정신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남북 교육제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더 많다.

○ 예상 문제점

첫째, 북한 학교의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중등단계까지의 수업연한이 남북이 각각 12년, 10년으로 되어 있어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남한의 대학에 진학하려 할 경우 고등학교 2학

년에 편입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북한 학교의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북한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북한지역 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둘째, 교육과정의 중복 또는 결손으로 비효율적이다.

학교교육단계별로 교육내용의 구조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수업연한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육과정상 중복되거나 결손된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향후 대책 방안

이 경우의 대책은 마련하기 힘들다.

나. 학력인정

(1) 평화공존시의 예상 상황

평화공존시의 남북한의 학력인정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현 체제로서는 사회요구를 수렴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교육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한 또한 그간 수치의 학제 개혁 논의가 있었음에도 개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류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늘의 학력 인정 방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북 모두가 초·중등 단계 수업연함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월반·유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력 인정에 있어 꼭 일정 수업연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면 더욱 탄력적인 운영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 시나리오 설정

평화공존시의 학력인정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학교교육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II는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다.

(가) 시나리오 I : 학교교육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나리오 I은 대학입학자격 인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단계를 기준으로 학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이동시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학상, 학생지도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반응 이외에 북한이 취학전에 2년간의 유치원과정을 두고 있어 이를 인정한다면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 예상 문제점

첫째, 남북이 초중등단계 수업연한의 다름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연령이 달라 부적응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의 초등단계인 인민학교 수업연한이 4년으로 남한보다 2년이 짧아 중등단계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시 동학년 학우들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2년이 낮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반대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동학년 학우들보다 2년이 높아 마찬가지로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며 적응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발달 수준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적응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로 반응하였다.

둘째, 학업 부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는 학력차이로 인한 학업부적응 현상이 예상될 것으로 반응한 자들이 많았다. 실제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연한이 2년이 짧아 학업 부진 가능성이 많다. 한만길의 「남북한 학생의 학생 수준 비교 연구(2000년)」를 보면 이주 초기 초등

학생들은 국어와 사회교과, 수학교과 등에서 기초능력이 매우 낮았으며, 과학은 별 차이가 없었다. 단편적인 사례여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시나리오 I 학교교육단 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차이로 학업부적응 예상 · 발달수준의 차이로 인한 부적응 · 형평성 문제 제기 · 취학전 2년 과정 인정한다면 별 문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한별로 정치 · 나이별로 정치 · 한시적 적응과정 운영: 1~2년간의 보충 및 적응과정 · 학력평가 결과에 따른 정치 · 취학전 2년과정 합산하여 정치

○ 향후 대책 방안

첫째, 북한 학생이 남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으로 정치하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 학교교육단계로 정치하도록 한다.

북한 학생이 남한으로 이동할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업연한으로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연한별로 정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방안은 사회적응기간을 생각할 때 현실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나이별로 정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는데 남북의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연한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단계로 정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학교교육단계별로 예비과정이나 적응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주로 북한 초등단계에서의 2년 짧은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연령이 해당 단계에 미달할 경우 일정기간의 예비과정이나 적응과정을 학교교육단계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제안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모든 학교가 이 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 부담이 된다면 지역별로 예비과정 운영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의 교육단계별 수업연한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거친 후 이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학년급에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시나리오Ⅱ :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시나리오Ⅱ는 신체적, 정신적 연령을 적응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으며 남북의 차이점만 이해시키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남북 교육제도의 다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문제점

첫째, 남북 학교단계의 수업연한 다름으로 인한 부적응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등중학교 1학년에 편·입학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연령은 같으나 학업상 부적응할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북한의 고등학교 2학년이 남한으로 이동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 편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를 두 번 졸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설문조사에서는 남북학교급 연한의 불일치로 인해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거나 심리적 자괴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남북의 교육과정과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학업적응도 쉽지 않을 것이며 선행학습의 차이로 인한 적응곤란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동한 학생이 부적응할 가능성도 많고 북한도 부정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교육과정의 중복 또는 결손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수업연한으로 편·입학할 경우 교육과정의 중복 또는 결손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남에서 북으로 편·입학할 때는 앞서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해 북에서 남으로 편·입학할 때는 교육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시나리오 II 교육연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문제없음 · 학교급 불일치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 차별문제, 심리적 괴리감 등 적응문제 · 교육과정·내용의 차이로 학업 적응곤란 · 학교생활 부적응 · 수용시설 부족 · 선행학습의 차이로 인한 적응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차이점 이해시킴 · 보충과정 제공, 특히 차이극심한 교과 위주 · 1~2년 간의 적응과정 · 운영, 점진적 적응상황 보아 편입시킴 · 사전에 공통교과서 개발 적용 · 학력평가 결과에 따른 정치

○ 향후 대책 방안

첫째, 앞서 시나리오 I의 첫 번째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학생이 남한의 학교로 편·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으로 정치하고 남한학생이 북한의 학교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단계로 정치하도록 한다.

둘째, 일정기간의 적응과정, 보충과정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한다. 곧바로 정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적응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일정기간의 적응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일련의 적응과정을 지켜 보면서 적절한 학교, 학년급에 정치하도록 한다. 특히 인문사회계통의 학과에 있어서는 남북의 교육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 교과에 대해서는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한 자들이 많았다.

이외 많은 자들이 선행학습의 차이로 인한 적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성 차원에서 학력평가 결과에 따른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 학술교류

(1) 평화공존시의 예상상황

평화공존시의 남북간의 학술교류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사회의 형성배경이 다름에 따라 학술체계와 내용, 용어 그리고 접근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남북간에 학술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로간에 상호이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념적, 정치적 부문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귀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학술교류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지만 어떠한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에는 학술교류의 내용과 양,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학술교류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여러 연구에서는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¹⁾ 이들 연구가 제안한 방안들을 참고로 하여 평화

1) 대표적인 연구로 강무섭 외, '남북한 교육 및 학술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1994, KEDI CR94-6)에서는 기본방향을 다섯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비체제적, 비이념적,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출발한다. 둘째, 북한사회의 변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시작한다. 셋째, 남북한이 상호호혜적인 것이어야 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다양한 영역과 방법을 동원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다섯째,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활성화되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존시의 학술교류 상황을 예측해 보면 대체적으로 비이념적, 비정치적 부문으로써 상호호혜적인 부문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초기단계에서는 이념적,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부문을 원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교류는 초기에는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남북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호간에 부담이 되므로 초기에는 민간간에 교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에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민간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상의 민간간의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사회발전을 위한 요청도 많아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반관반민의 형식상의 조직체가 만들어져 이를 매개로 한 교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남북정부간에 학술부문이나 문화부문의 교류협정이 맺어지게 되어 교류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예상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북한 전문인사들은 평화공존시의 학술교류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남북역사관의 현격한 차이로 사실상의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소위 주체사관이라고 하는 역사인식관이 남한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와 개념 그리고 학술용어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어 의사소통이 곤란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학술교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학술계가 정치우선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교류시에 논쟁이 야기되거나 선전투쟁의 장소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북한 학문의 편협성과 이질적인 학문풍토로 인하여 상호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논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 실제적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사회의 기본철학과 연구방법도 너무 다르고 해석상의 관점도 달라 갈등이 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의 논의나 주장들에 대한 법적인 제재 문제도 나타나게 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학술교류를 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게 될텐데 실제적으로 이를 남한이 부담하게 되어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일부 남한 중심의 학술교류가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이처럼 남북간에 학술교류는 많은 제약요인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회성적이고 단발성적이며 과시성의 학술교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넷째, 남북간의 학술교류시에 진보세력이 주도하게 될 경우 남북사회의 보수층을 자극하게 되어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3) 대응방안

첫째, 남한의 인내가 필요하며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들고 있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접촉도 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인내와 포용의 자세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제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실용적이고 응용과학 부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견해도 밝히고 있다.

둘째, 남북간의 인식이나 방법상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체제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호방문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장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남북의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소하여 나갈 수 있도록 비교를 통한 학문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문

예상 문제점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관의 차이 · 언어 및 개념, 학술용어의 이질성으로 소통 곤란 · 제한적일 것임 · 정치성의 개입으로 논쟁, 선전투쟁 야기 · 남한 중심이 될 것임 · 북한 학문의 편협성, 이질적 학문 풍토로 상호이해 부족, 논쟁야기 등 해결난 · 철학과 연구방법 및 해석상의 갈등 심각 · 교육은 주변부 학문의 성격으로 선 순위에서 밀림 · 논의주장에 대한 법적 제재 문제 · 막대한 경비문제 남한부담 ·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임- 초기에는 일회성, 단발성, 과시성의 학술교류가 주류 · 남북사회의 보수층 자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을 통한 상호이해의 넓히고 관용 · 그래도 교류는 하여야 · 학술용어, 이론 통일하여 나가야 · 학술용어의 개념대조표에 의한 연구 풍토 조성 · 남측의 인내, 포용 필요- 실용, 응용 과학부문 북한이 필요성과 수용의지 갖도록 유도 · 남북학자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학술 행사 기획- 학진 주관, 교류시범학교 운영 · 장기간의 상호방문연구 지원, 장려 · 학문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 있어야 · 인식차이 비교를 통한 학문교류 기반 조성 · 단계적 학술교류, 비정치적 분야부터 시작, 참여한 논쟁점은 집중 논의 · 남북 쌍방 동수의 위원회 설치 · 교류기반 구축, 이해 성숙시까지 정치적 주제 기피 · 학술교류시 법적 제재 유연화 · 국가, 민간의 지원조치 마련, 특히 정원기금 확보 · 교류원칙과 기본방향 분명히 하고 준수, 효과적인 협의조정기구 필요, 학문의 자유와 국가공민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책임문제 명확히· 언어, 문화, 역사측면 학술교류 중심 · 초반기 진보측 주도하되, 쏠쏠한 언사 자제하고 점차 보수인사도 동참 · 민주적, 인간적, 민족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질성 완화 노력 · 지역간 격차 해소 노력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며, 남북간의 학술용어의 개념대조표를 작성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점차 학술용어와 이론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학술교류를 위하여 남북이 동수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술교류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셋째, 학술교류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비정치적 분야부터 시작하도록 하되, 첨예한 논쟁점은 회피하지 말고 집중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다만 교류기반이 구축되어 상호 이해가 성숙될 때까지는 정치적인 주제는 가능한 한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분야가 이러한 제약점이 적으므로 이들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넷째, 학술교류시에 교류원칙과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술연구의 자유도 보장하여야 하지만 남북간의 이념차이가 현격하여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 공민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책임문제도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술교류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법적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학술교류 초반기에는 진보계층이 주도하되 체제 자극적이고 일탈적인 언사는 자제하도록 권유하며 점차 보수층 인사도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다섯째, 민주적, 인간적, 민족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질성을 완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학술교류도 민족공동체 형성의 목적에 충실하여 통합이념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인간적, 민족적 가치에 충실함으로써 남북의 이질성을 완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학술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와 민간은 학술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한편으로 학술교류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학술교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인 체제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V.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과제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은 남북의 화해 후에 평화를 정착하고 남북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특정 시대와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정하고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도 이 과정을 밟아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의 실제 상황은 여기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상적으로 남북이 통합된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완전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는지라도 남북이 서로 평화를 정착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모색하려고 시도한다.

먼저 남북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평화 공존의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기 단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양측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위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난 후 다음 단계에서 교육과정은 서로에 대한 갈등이나 충돌의 요소가 가장 적은 분야의 교육과정의 통합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교육과정이란 일반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인가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느 사회에서나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통합교육 과정을 만들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서로의 달라진 가치체계를 경시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나아가서는 그와 관련된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면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을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의 참뜻에도 맞는 일이다. 이 점에서 남북의 평화공존 상태에서의 교육과정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나 사상체제와 관련이 깊은 가치 영역은 양측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서서히 하나의 문제를 다룬 후에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전제하고 있듯이 남북한간의 평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초기의 교육과정 통합은 남북한에게 아주 민감한 가치 관련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영역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초기 교육과정은 예를 들면, 컴퓨터,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국어 등과 같은 영역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어는 언어적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기능적 분야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어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영역은 남북한의 가치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통합의 마지막 단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셋째, 마지막 교육과정의 통합은 남북한 사회의 민감한 가치 영역을 다루는 교과인 도덕, 사회, 역사, 국어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교과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전히 세심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된 후에 교육과정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오해로 인해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통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 교육과정 통합은 다시 삼 단계로 나누어 1) 각 교과의 교육과정 중에서 무리 없이 남북한이 합의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고 통합한다. 예를 들면, 도덕에서 전통 사상인 효, 장유유서, 공동체 정신, 이웃 사랑의 사상 등을 선정하고 통합한다. 이 경우에는 내용상의 통합에 큰 무리가 없이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2) 앞의 단계를 발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좀더 내용의 폭을 넓고 깊게 하여 남북한이 합의 가능한 내용을 통합한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현대 사상으로서 민주주의, 국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평등사상 등을 합의하고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의 마지막 단계로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완전한 통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국어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영역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문학작품이나 수필 내용을 남북한이 합의하여 내용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국어 등과 같은 분야를 소홀히 다룬 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별 어려움 없이 합의에 의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쉬운 교육과정에서부터 남북한이 차례대로 순서를 밟아 나감으로써 서로가 통합 과정에서 이해를 넓히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더 복잡하고 미묘한 다른 교과를 통합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예는 아래에서 언급되는 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결과가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통합의 과정을 통하여 남북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다는 장기적이고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남북한 통합의 가시적 결과를 내려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이보다는 서로 이러한 통합의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이 대화하고 이해한 결과로서 남북의 교육적 통합은 물론이고 실제적 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교육과정 전 영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하되 교육과정 내용의 통합은 물론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럴 때에만이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통한 남북의 진정한 화합과 민족 공동체로서의 통합이 가능해 질 것이다.

1. 교육과정 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

가. 『북한조선역사』 교과서 내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1991, 이찬희 외.

이 연구는 북한의 『조선역사』를 중심으로 분단 이후에 어떻게 북한이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당시 세계정세에서 보았을 때, 북한 편향적인 한국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중국,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하여 1982년, 1984년에 사용했던 북한의 『조선역사』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서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북한의 『조선역사』의 기술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우리 역사를 ‘안팎의 원수놈들을 반대하여 싸워 이긴 인민들의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다. 둘째, 『조선역사』는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전제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셋째, 북한 정부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서술을 하고 있다. 넷째, 김일성(위대한 수령)의 교시와 김정일(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유시를 통해 우리 나라 역사를 이상화의 방편으로 왜곡하고 있다. 다섯째, 역사서술의 적합한 내용만 선택해서 설명하고 있어 인민들의 투쟁사만 강조하고 주체세력의 역할은 등한히 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역사서술은 첫째, 역사 인식에서 지나치게 지배세력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역사전개에 있어서 그 주체를 항상 뚜렷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사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역사에 대한 서술 관점의 차이는 바로 역사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에 대한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쪽의 체제가 다르

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남북의 역사교과서 내용의 상이점은 어느 한 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을 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 논의한 남북의 역사기술은 앞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나.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중하 외.

이 연구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동구 공산권의 갑작스러운 몰락이 가져온 사회주의 국가 전체의 위기감과 더불어 북한에도 급변상황이 발생하여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교육부문의 통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급변상황에 의한 남북한 통일과정을 3단계 시기(교육통합준비기-위기관리시기, 교육통합과도기-과도연합시기, 교육통합기-통일국가시기)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에 근거하여 교육부문의 대책으로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과서제도, 교원제도,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급박한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통합이 북한이 항상 경계하는 흡수통일의 경우에 제한된다는 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과 남한의 교육을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교육을 위한 우리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부문을 보면 북한의 교육과정을 남한의 것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개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1)교육과정은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편성한다. 2)통일한국의 교육이념에 적합하도록 남북한 통일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3)남북한이 통일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남북한의 언어,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

용하도록 한다. 4)남북한의 학습내용, 학습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재구성한다. 5)정치사상교과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6)남북한의 언어의 이질성, 역사 해석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고려하여 민족의 공통적인 문화를 지향하도록 한다. 7)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제도를 유지하되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8)북한 학생의 재사회화와 직업적응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비록 급진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통합은 어느 정도 분단 이후에 빚어진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유균상 외.

이 연구는 앞으로 통합교육 과정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민감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의 도덕과와 사회과의 교육내용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북한의 중등학교 학제, 교육과정의 교과편제, 내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는 북한의 ‘공산주의 도덕’, ‘김일성, 김정인’ 관련 교과서를 남한의 ‘도덕, 윤리, 사회’ 과목을 비교하는데 한정시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1996년에 수행된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의 후속연구이다.

여기서 지적된 문제는 1)남북한 중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의 편제상 교과목 명과 교과서 내용은 사회체제의 이질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2)도덕과와 사회과의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서 남한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며 사회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지배체제에 필요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수동적인 개인 양성과 체제 이념의 사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점은 정

치체제의 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교육내용의 구성과 강조 점에서 나타난다. 3)교과서의 구성 및 자료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학습자의 주제적 탐구와 사고과정을 중시하는 자료 제시가 많은 반면에 북한은 일방적인 가치주입을 위한 교시적인 자료가 구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와 종이질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통합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남북한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통합 후의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라.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 II)」, 한국교육개발원,
1998/1999, 한만길 외.**

이 연구는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을 교육의 제도, 교육과정, 교원양성, 교육정책, 교과서 발행 등과 같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통합이 민족의 통합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바람직한 교육통합을 위해서는 1)남북한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왜곡과 비방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2)상호간의 의식의 괴리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화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남북한 교육에서 공통적 요소를 찾고, 이를 동질성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4)교육이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남북한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질성은 수용해야 한다. 6)남북한 교육은 점진적 교류와 협력을 거치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불신감과 이해의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통일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 「통일교육실태 조사와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한만길 외.

이 연구는 북한과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남한의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한정된 틀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하여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 교육의 방향은 1)남북한 주민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여 화해와 협력의식을 형성한다. 2)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3)민족공동체 발전에 장애요소인 남북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한다. 4)북한체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자세를 함양한다. 5)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6)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의 확대 발전과 상호 개방과 개혁을 통해 통일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방향에 따라 우리의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질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 교육의 방향은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교육의 통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바. 「남북한 초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초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남북한 초 중등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0, 이인제 외.

이 연구는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통합되어야 하는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국어는 남북의 이질성에 근거한 언어생활의 차이가 극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정, 내용, 언어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국어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통일후의 국어교육의 방향, 교과서 편찬 주체와 방향, 교과서 내용 및 학습제재, 통합의 원리 등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통합적 교과를 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북한의 국어교육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양측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회과는 통일 한국의 통합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과를 통합하는 체제를 따르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주의, 평화주의, 생태주의 등을 통일 한국의 이념으로 하면서 북한과의 통합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통일 한국의 교육과정 내용 비교, 교과서 내용 비교, 편제 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사회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방향, 개발체제, 내용구성, 교과서 기능, 교과서 구성방식, 통일한국의 사회과 교과서 개발체제 등을 제안하였다.

도덕과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남북한의 내용의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통일시대의 바람직한 가치와 도덕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교과서 통합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남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념과 목표의 통합, 남북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통합, 남북한 도덕과 교육-학습 방법의 통합, 남북한 도덕과 교과서의 체제 및 편찬 방법의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교과별로 남북한 통합시에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비교적 이념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회, 도덕, 국어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통합의 문제점, 통합의 이념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2.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과정 통합

가. 교육과정 통합 시나리오

(1) 남북의 현행 교육과정 편제 비교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을 논하기 전에 남북의 현행 교육과정 편제 비교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북의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평화공존시의 남북 교육과정의 통합을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교육과정 편제는 겉으로 보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 먼저 북한의 초등학교의 편제와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 우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와 다르다.

다음의 <표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교육과정 편제는 남한의 교육과정 편제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 및 공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같은 교과는 1986년 이후 1996년의 교육과정 변화에 이르는 기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단지 변화가 있었다면 김일성의 사후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약간의 명칭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1986년, 1992년, 1996년 교육과정 편제에서 특이한 것은 1996년의 교육과정 개편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공산주의 도덕’과 ‘력사’ 교과가 추가되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과 의 시간은 줄지 않고 두 교과에 대한 시수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특이한 사항으로 남는다.

2) 북한에서 ‘공산주의 도덕’이 교육과정 편제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대의 일이다. 이후 1983년까지 공산주의 교육과정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6년에는 폐지되었었다. 그 이후에 1996년의 교육과정의 개정시에 다시 ‘공산주의 도덕’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정치 이념적 교육만으로는 북한 주민의 도덕교육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도덕’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표 V-1> 남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학교 학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 과	국어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	선 택 과 목
	도덕	국 210	어 238	34	34	34	34	68	68	34	34	
	사회	수 120	학 136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70 (국사 68)	
	수학	바른 생활		136	136	136	136	136	136	102	136	
	과학	60 68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02	
	실과	즐거로운 생활 90		·	·	68	68	기술·가정			102	
	체육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	68	
	음악	즐거운 생활 180		68	68	68	68	68	34	34	34	
	미술	204		68	68	68	68	34	34	68	34	
	외국어 (영어)	우리들은 1학년 80 ·		34	34	68	68	102	102	136	136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	8단위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단위	

〈표 V-2〉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 변천과정편제(1986년 개정)

과 목 명	단계(주당시수) / 총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험학기 학년/학기
		1학기 2학기 (17주)/ (22주)	1학기 2학기 (17주)/ (22주)	1학기 2학기 (17주)/ (22주)	1학기 2학기 (17주)/ (22주)	1학기 2학기 (17주)/ (22주)	1학기 2학기 (17주)/ (22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3.4/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	152	1	1	1	1	1	1	1	1	3.4/2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3.4/1.2
외 국 어	37							1	1	
수 학	834	5	5	5	5	6	6	6	6	3.4/1.2
자 연	222					3	3	3	3	3.4/2
체 육	304	2	2	2	2	2	2	2	2	
음 악	304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4	24	
시험과목수						3	4	3	4	

반면에 남한의 교육과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6차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명칭이나 수에 있어서는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들의 자율학습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재량활동 시간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남한의 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이다. 그런데 남한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설정한 것은 남북한의 교육과정 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V-3>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1992년)

과 목 명	단계(주당시수) 총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험 학기 학년/ 학기
		1학기 2학기/ (17주) (22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 린 시 절	152	1	1	1	1	1	1	1	1	3.4/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 린 시 절	152	1	1	1	1	1	1	1	1	3.4/2
국 어	1,142	8	8	8	8	7	7	7	7	3.4/1.2
외 국 어	37							1	1	
수 학	834	5	5	5	5	6	6	6	6	3.4/1.2
자 연	222					3	3	3	3	3.4/2
체 육	304	2	2	2	2	2	2	2	2	
음 악	304	2	2	2	2	2	2	2	2	
도화·공작	304	2	2	2	2	2	2	2	2	
계	3,451	21	21	21	21	24	24	24	24	
시험과목수						3	4	3	4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현재 남북한의 다른 교육과정 편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재 교육과정편제에서 보면, 인민학교가 4년이고 고등중학교가 6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하면 남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10년이란 기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한다면 (북한의 유치원 1년의 의무교육기간을 제외한다면) 현재의 교육과정들이 이에 따라 조절할 경우 최소한 편제상의 문제는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합

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의 고등학교 2, 3학년과 북한의 이에 상응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의 처리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현재 남한의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교육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합의나 대체적 편제가 요구된다.

<표 V-4> 북한 인민학교 교육과정(1996년)

번호	교 과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시간수(%)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52(4.2)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52(4.2)
3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52(4.2)
4	국 어	8	8	7	7	1,142(3.17)
5	수 학	5	5	6	6	834(23.1)
6	력 사				1	37(1.0)
7	자 연			3	3	222(6.7)
8	체 육	2	2	2	2	304(8.4)
9	음 악	2	2	2	2	304(8.4)
10	도화·공작	2	2	2	2	304(8.4)

(2)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 초기단계

이하에서 논의되는 교육과정의 통합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려는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가) 비이념 지향적 교과 통합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남북한 사회의 중요 가치와 이념을 다루는 교과보다는 가치와 이념적 성향이 적은 교과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육과정의 초기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수학과 과학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북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학과 교수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인민학교 교수방법』, 1987, 74-75)

인민학교의 수학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수학의 초보적인 기초지식을 가르쳐주고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바로 키워 우리 나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과 혁명사상과 지도자 동지의 사상리론 부분을 삭제하면 수학의 초보적 기초지식을 가르쳐주고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키워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를 마련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것을 남한의 수학 교육과정의 목적과 비교해 보면 남북한의 수학 통합의 가능성을 수학 교육의 목적에서부터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실마리로 한다면 남북의 수학교육과정의 내용상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중학교 교육과정』, 1997)

수학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여러 가지 생활 현상을 수학적으로 고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과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나.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사고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다. 수학에 대한 흥미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수학 교육과정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수학의 초보적인 기초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인식능력과 응용능력을 키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한은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사고하여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양성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정치 이념적 부분을 삭제하고 나면 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수학교육의 목적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런 부분을 남북한 교육과정의 통합의 출발로 삼는다면 비이념적 교육과정 부분에서 초기단계의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합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과학의 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내용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과학과 교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인민학교 교수방법』, 1987, 117)

자연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에게 자연을 인식하고 보호, 개조, 리용하는데 필요한 사물현상의 일반적 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 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자연을 보고 대하는 옳은 관점과 탐구력을 키워줌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데 있다.

이것을 남한의 과학 교육과정의 목적과 비교해 보면 남북한의 과학 통합의 가능성을 과학 교육의 목적에서부터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실마리로 한다면 남북의 과학교육과정의 내용상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초등학교 교육과정』, 1997)

자연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지식체계를 이해하며, 탐구방법을 습득하여 올바른 자연관을 가진다.

- 가. 자연탐구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이를 적용한다.
- 나. 자연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이를 활용한다.
- 다. 자연현상과 과학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라.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의 과학 교육과정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학 교육과정의 목적에서 비교하였던 것과 같이 과학에서도 이념에 관련된 목적을 제외한다면 남북한 과학의 교육과정의 목적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과학의 초보적인 기초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연과 삼라만상의 활동과 운용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응용능력을 키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한은 과학의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사고하여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양성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정치 이념적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처럼 북한과 남한의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의 기초적원리, 개념,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탐구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렇게 보면 남북한의 과학교육의 목적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런 부분을 남북한 교육과정의 통합의 출발로 삼는다면 비이념적 교육과정 부분에서 초기단계의 목표와 내용을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북한의 초등 과학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연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

- 산: 산의 모양과 이름새 등
- 벌: 벌의 생김새, 간석지, 벌 등
- 강: 강의 생김새, 강물이 하는 일 등
- 바다: 바다의 생김새, 바다물결 등
- 동식물: 종류와 생김새, 사는 곳, 사는 모습, 특징, 몸의 이름새 등
- 천체: 해와 달, 별, 지구의 모양, 천체까지의 거리 등

② 자연의 물질성에 대한 지식

- 물: 고체, 기체, 액체의 세 상태
- 공기
- 광물
- 금속

③ 자연의 변화발전에 대한 지식

- 무기자연의 변화발전(고학년)
- 생물자연의 변화발전(저학년)

④ 자연의 보존, 개조, 리용에 대한 지식

- 낮은 학년: 물고기, 개구리, 짐승과 새, 이로운 벌레의 보호, 산과 벌, 동식물 자원, 바다자원, 강의 이용 등
- 높은 학년: 땅, 공기, 물 보호, 산림보호, 좋은 땅 만들기, 전기와 그 성질, 땅과 땅속의 자원 이용, 산림개조 등

⑤ 자연에 대한 실천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지식

- 생물 자원에 대한 실천능력(저학년): 과일의 양분, 식물표본 만들기, 꽃씨 모으기, 꽃씨 심기, 꽃가루 묻혀주기 등
- 무기자연에 대한 실천능력(고학년): 온도재기, 자석에 의한 동서

남북 알아보기, 지도에서 산, 강, 별, 호수 찾아보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남한의 초등 과학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학년>

- (1)자석놀이 (2)초파리의 한 살이 (3)어항에 생물 기르기
- (4)주위의 물질 알아보기 (5)여러 가지 돌과 흙
- (6)여러 가지 고체의 성질 알아보기 (7)소리내기 (8)운반되는 흙
- (9)여러 가지 잎 조사하기 (10)식물의 줄기 관찰하기
- (11)그림자 놀이 (12)둥근 지구, 둥근 달
- (13)온도재기 (14)맑은 날, 흐린 날,
- (15)물에 가루물질 녹이기
- (16)고체 혼합물 분리하기

<4학년>

- (1)수평잡기 (2)별자리 찾기 (3)강남콩 기르기
- (4)용수철 늘이기 (5)식물의 뿌리
- (6)여러 가지 액체의 성질 알아보기 (7)혼합물 분리하기
- (8)강과 바다 (9)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
- (10)동물의 생활 관찰하기 (11)지층을 찾아서
- (12)화석을 찾아서 (13)열에 의한 물체의 온도와 부피변화
- (14)열의 이동 (15)모습을 바꾸는 물 (16)전구에 불켜기

표면적으로 보기에 남한과 북한의 과학 교육과정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인민학교>

(4) 자연의 보존, 개조, 리용에 대한 지식

- 낮은 학년: 물고기, 개구리, 짐승과 새, 이로운 벌레의 보호, 산과 벌, 동식물 자원, 바다자원, 강의 이용 등
- 높은 학년: 땅, 공기, 물 보호, 산림보호, 좋은 땅 만들기, 전기와 그 성질, 땅과 땅속의 자원 이용, 산림개조 등

<초등학교 3학년>

(2)초파리의 한 살이 (3)어항에 생물 기르기

<초등학교 4학년>

(3)강남콩 기르기 (5)식물의 뿌리 (8)강과 바다

(9)여러 가지 동물의 생김새 (10)동물의 생활 관찰하기

남한과 북한의 과학 교육과정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북한은 주제별로 표현되어있고 남한은 활동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다. 북한의 과학의 내용은 자연의 보존, 개조, 이용이란 주제 하에 다양한 소재를 포함하였다. 이외는 달리 남한의 과학 내용은 활동 중심이어서 구체적 자연 사물이나 대상을 논의한다. 그렇지만 남북한이 다루는 내용의 원리, 개념, 법칙 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학이나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도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큰 어려움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음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통합도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음악교육에서 이념에 근거하여 작곡되었거나 이념을 고양하기 위하여 작곡되고 작사된 것을 제외하면 남북한의 음악교육은 교육과정 상의 통합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이 인간의 마음, 즉, 정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

적인 것 중의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남북의 공식적 비공식적 혹은 부정기적 모임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곡과 노랫말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일으키는지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의 음악교육은 양측의 이념과 관련된 부분만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남북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음악교육은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교과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교육과정의 목표를 이념적인 것과 특정 가치에서 분리하여 교육적 목적에 한정시킬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의 측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무리하게 공통적인 내용으로 포함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공통성이 높은 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무리한 통합보다는 합리적인 통합, 즉, 남북한 양측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례 깊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최종 단계의 통합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논의되었지만 이와 같은 비이념적 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는 수학과 음악 이외에도 체육, 기술, 가정, 지리, 컴퓨터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념 지향적 교과 부분 통합

이념 지향적 교과목의 통합은 비이념 지향적 교과목의 통합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념적이고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교과목을 초기 교육과정 통합의 주요 목표로 선택하는 것에 더하여 이념 지향적 교과목의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 또한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도덕, 사회(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어, 역사 등은 그 사회의 정치체제, 이념, 가치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남북의 평화공존의 단계에서도 쉽사리 교육과정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단계에서 적어도 이들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

가 요구된다.³⁾

예를 들면, 도덕의 경우 전통적 가치인 효 사상은 남과 북의 정치체제, 이념, 가치 등과 거리를 두면서 남북한 양측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경우 남북한이 모두 민주주의에는 동의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의 하나인 평등과 같은 기본적 개념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제에 대한 논의는 초기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정치체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사회경제 사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시장주의 혹은 자본주의와는 대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계획경제를 위주로 이윤추구보다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산체제와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경제도 생산을 위주로 하지만 생산의 최종 목적은 생산자의 이윤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바로 이

-
- 3)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해서 남북교육의 다양성을 상실하는 정도보다는 그것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단일’을 크게 강조해 왔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공통의 역사적 경험 등 ‘단일’ ‘공통’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의 국민정서를 크게 지배하고 있다. 단조로운 문화에서 칭송되는 것이 획일적인 것이거나 표준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과 함께 통일문제나 민족동질성 회복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런 단일문화의 특성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단일 획일 공통이 통일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만약에 동질성의 개념을 단순히 같은 것, 표준의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자체가 통일논의에의 장애요인으로 등장될지도 모르며, 민족 대중홍을 위한 준비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양성의 통합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통일된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 조장해야 한다.”(이종각, ‘남북한 교육 동질성 회복의 개념과 과제’, 1993, 45) 다양성의 시대에 민족의 통합이 자칫 다양성을 경시하고 획일적 통일을 추구한다면 민족의 통일에 장애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논의는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타당한 것 같지만 정당화되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통합은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 달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다양성은 단일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같은 논리로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은 이미 그 속에 다양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통합이 되기 이전에 현재의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교과서와 같은 교육자료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요구된다.

점에서 사회과에서 경제에 대한 교육과정의 통합을 시도할 때 이와 같이 민감한 부분은 가능하다면 최종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역사는 사회만큼이나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이념과 체제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를 수 있어서이다. 국어는 남북의 각기 다른 입장이 서로의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있는 몇몇의 북한 식의 조어는 남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어서 거부감 없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어학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북한의 한국어 사용을 위한 노력과 강조가 남한의 과도한 외래어 사용에 대한 보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단어나 용법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점진적 통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영역은 초기 교육과정 통합단계에서 남북한이 서로 합의하기가 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의 주요 영역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기능적 국어능력은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다만 국어의 기능적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에서 이념적인 것을 배제하는 노력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3)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 최종단계

앞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사회의 중요 가치와 이념을 다루는 교과보다는 가치와 이념적 성향이 적은 교과를 중심으로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초기단계를 무리 없이 이루어냄으로써 남북한 서로가 예민한 이념 지향적 교과의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수학과 과학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수학과 과학의 교수목적에서 이념적 성향을 보이는 진술을 논의에 의해서 표현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면 교육과정의 내용상의 통합은 큰 의견의 차이 없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이 이념 지향적 교과인 도덕, 사회, 역

사, 국어와 같은 영역에서는 쉽게 합의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교육과정 통합의 최종단계에서는 이념 지향적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이념적 내용에 대한 합의도출이 교육과정 통합의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념 지향적 교과목의 초기단계 통합에서 보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초기의 교육과정 부분 통합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의 개방적 자유 경제체제와 북한의 폐쇄적 계획 경제체제와 같은 실제적이고 이념적인 영역의 통합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치와 이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을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이 평화공존을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의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지금과 같이 서로 대립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남북한의 평화공존상태에서 남한은 여전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적어도 북한이 중국이나 월남과 같은 형태의 개혁 개방을 상당히 이룬 상태를 가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변화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평화공존이라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동일한 체제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근접하고 유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이 요구된다. 이런 경우에 남북한은 서로의 교육과정 형태를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전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이념 지향적 교과 통합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의 이념 지향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이념 지향적 교과목 중에서 남한의 도덕과 사회에 상응하는 과목은 김일성과 김정일 관련 교과목과 공산주의 도덕이 있다. 이 밖에도 역사는 력사로, 국어는 국어로 동일하다.

① 이념 지향적 교육과정과 교과

이념 지향적 교과 중에서 기능적 측면이 다른 교과에 비해 강한 것이 국어이다. 1980년대에 북한이 제정한 국어 교육의 성격을 알려주는 자료인 북한의 교육위원회 산하 보통교육부가 1984년에 펴낸 ‘교수요강’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국어교육의 목적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에게 우리말과 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 주고 혁명적정서와 사고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 혁명인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있다(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3).

고등중학교 《국어문학》 과목 교육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주체적언어문예사상,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언어문예 방침으로 학생들을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기초지식과 실천적기능을 키워주고 혁명적정서와 사고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 전사로 키우는데 있다(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1984 : 3)

이상에서 보듯이 이념 지향적 과목으로서 국어는 북한에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서 공통으로 이념을 강조하고 국어 교육을 통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인간상을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남한의 국어 교육 목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

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언어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북한의 국어 교육의 목적에서 두드러진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교육의 존립 기반으로 볼 수 있는 ‘사상’과 ‘이론’의 내용이 학년 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3학년 과정에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 ‘주체 사상’이 강조되어 있다. 그런데 4~6학년 과정에는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주체 사상’이외에 ‘주체적 언어 문예 사상’과 김정일의 ‘언어 문예 방침’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언어를 통한 이념적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강조점이 학년 급별로 차이가 있다. 1~3학년 과정에는 언어사용의 지적 기반으로서의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사용 기능이 언급되어 있는데 비하여, 4~6학년 과정에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 지식의 습득과 언어사용 기능은 물론이고 실천적인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지식교육의 측면에서 저학년 단계에서는 언어사용의 지적 기반으로서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을, 고학년 단계에서는 언어와 문학에 대한 일반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1~3학년 과정에서 강조하는 ‘말과 글에 대한 지식’이 어떤 성격의 교육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남한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한 ‘내용 체계’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교육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어 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적 영역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하다. 그리고 국어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인간상의 차이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남북한이 평화공존의 시기에서 교육통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조심스럽게 국어에서 다루는 인간상을 각자의 이념적 내용을 가능한 한 배제한 채 내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을 시도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⁴⁾

국어 교육의 내용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남한의 교육 과정은 ‘지식’, ‘기능’, ‘태도’를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정책과 당의 의도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지식과 기초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지식 교육이자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 학습과 기술 학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 지식 교육으로 국어교육을 정의한다(해주 제2사범대학 외, 1973 : 47, 재인용, 국어과 통합,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처럼 북한은 일반 교육의 하나로 계획 실천하는 국어 교육도 남한처럼 지식, 기능, 태도를 위주로 하기보다는 기능과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
- 4) “남북한은 국어 교육을 인식하는 면부터 차이가 난다. 남한은 언어 기능 신장, 지식 습득, 문학 작품 이해와 감상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 발전과 민족 정신과 국민 정서 함양을 국어 교육의 기본 사명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 인재와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관철하는 데 이바지함을 국어 교육의 기본 사명으로 인식한다. 한편, 언어 표현만으로 보면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내용으로서 지식이 그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학생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학습시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식이 언어와 문학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이러한 유형의 지식은 북한의 문화어에 대한 지식이고,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에 대한 지식이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비교적 탈이념적 교육 내용이라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언어 사용 기능 교육에 대한 인식도 남·북한 가에는 차이가 있다. 남한이 해석하는 기능 교육은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이 때의 도구는 학습을 위한 도구, 고등 정신 기능 즉 고등 수준의 사고력 신장의 도구를 뜻한다. 그러나 북한이 해석하는 기능 교육은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하고 학습이 도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키는 도구가 사회주의 혁명의 무기로서의 도구로 인식한다. 이 점은 분명한 차이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국어 교육의 공유할 내용이 거의 없다.”(국어과 교육통합,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국어교육의 내용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화 공존 시기에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서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육과정은 이미 이념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국어 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능,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3년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김일성 우상화작업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86년에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김정일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신설하였다. 1986년 이후 북한의 교육과정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었다.

1986년도 교육과정은 기존의 「경애하는수령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과목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시절」 과목이 신설되었다. 김정일 과목의 수업시간 수는 김일성 관련 과목과 동일하게 4년간 152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목할 변화는 인민학교 4학년에서 외국어 과목이 신설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특강」, 「공산주의 도덕」, 「위생독본」은 폐지하였다.

1986년도에 개정된 인민학교 교육과정 편제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보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에 관한 교과서까지 개발되었다. 다른 교과에도 김정일 관련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었다. 「공산주의 도덕」은 1986년 이전에 있었으나 그 후 편제에서 삭제되었다가 1992년 교육과정 개정에서부터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개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92년에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개편하였다. 1992년의 개정에서는 「공산주의 도덕」과 「력사」가 다시 교육과정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과목은 폐지되었다. 역사 교과와 부활은 교육과정상의 중요한 변화이다. 1992년의 교육과정에서 역사과목의 부활은 지난 70년대 이래 인민학교에서 폐지되었던 역사 과목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 동안 김일성 우상화 과목이 신설, 증가하면서 역사와 지리 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1983년과 1986년의 교육과정에서 두 과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992년의 교육과정에서는 인민학교에서 「력사」과목

을 4학년 1,2학기 동안 주 1시간씩 가르치도록 재편성하였다.

고등중학교 교육과정에서 1986년 편제를 보면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과목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83년 교육과정에 있던 김일성 과목이 두 과목으로 증가하였으며, 김정일 과목도 한꺼번에 두 과목이 신설되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과목은 4과목으로 증가하였다. 대신에 「특강」과 「공산주의 도덕」, 「자연」과 「위생독본」이 폐지되었다. 다른 과목의 변화는 없는데 다만 과목에 따라 수업 시간 수는 증감을 보이고 있다.

1986년의 교육과정 편제를 1983년의 편제와 비교해보면, 수업시간 배당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시간수가 감소한 과목은 김일성 관련 과목, 화학, 제도 등이며, 시간 수가 증가된 과목은 한문, 외국어, 지리, 수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등이다.⁵⁾

1992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상 관련 교과목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김일성 교과와 김정일 교과가 1개 교과로 축소되었으며, 그 대신 「공산주의 도덕」 과목이 부활하였다. 「공산주의 도덕」은 인민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83년 이전의 교육과정에 설치되어 있었던 과목인데, 1986년 교육과정에서는 폐지되었다. 이는 1992년도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교과와 김정일 교과의 경우, 「혁명력사」 과목만 그대로 두고 「혁명활동」 과목은 폐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2년 교육과정 편제는 외형적으로 보면 종전에 비해서 과목과 시간

5) 특히 외국어의 경우는 총 496시간에서 591시간으로 100시간 가까이 증가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도 외국어를 강조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총 21개 교과 가운데 단일 과목으로는 수학의 비중이 1,283시간(1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물리, 화학, 생물을 합한 과학 교과는 총 1,340시간(20.5%)으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어문학과 한문(총 1,020시간: 15.6%),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과목 등 사상과목(총 670시간: 10.2%)이다. 북한의 중등학교 편제에 있어서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별 수업 수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5·6학년 학생의 경우 '붉은 청년근위대 훈련'과 '견학', '실습'등의 과외활동이 추가되고 '생산노동일수' 또한 1-4학년 보다 많아지는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운영에서 선택의 재량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문, 역사(조선력사, 세계력사), 지리(조선지리, 세계지리)과목에서 종전에는 학년별 시간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1992년 편제는 그것을 규정해 놓지 않고 다만 매주 1-2시간 이수할 사항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목선택과 동시에 학년에 따라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996년에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과목의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김정일 중심의 우상화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995년 2월의 김정일 생일 행사기간 동안 각 분야에서는 김정일 우상화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⁶⁾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과목은 1968년에 신설되면서부터 1996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에서 공산주의 도덕이 없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당시의 북한 교육과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둘째, 당시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김정일 과목을 새로 설치하면서 「공산주의 도덕」 과목은 학교의 재량 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당시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서 학교현장에서는 공산주의

6) 1996년도 교육과정은 김정일 우상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김정일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 김정일 과목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김일성에게는 “대원수님”이라는 칭호가 붙었으며, 김정일에게는 “원수님”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다. 이는 인민학교 교과목의 명칭 변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일성에 대하여 한 단계 칭호를 높이면서 김정일에게는 “원수” 칭호를 부여한 것이다.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은 ‘혁명활동’으로 표시하였는데, 실제로는 ‘혁명활동’과 ‘혁명력사’과목이 있어서 고등중학교 1~3학년은 ‘혁명활동’을 이수하고 4~6학년은 ‘혁명력사’를 이수한다. 또한 실제로 우상화를 위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행사만 보아도 백두산 밀영 참관, 백두산 답사 행군, 생일기념 충성결의 모임, 청년연구토론회, 청년학생 경축야회, 소년단 대회, 학생집단제초, 청년전위 충성의 맹세모임 등 수없이 많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교육을 통하여 각인시키면서 그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고 있다.

도덕 과목이 어떤 형태로든 가르쳐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사회 관련 과목은 1960년대까지 존속하였으며, 김일성 우상화 과목이 신설되면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인민학교 단계에서 사회 관련과목은 「력사」와 「지리」가 1956년의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계속하여 존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당시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1983년의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과들이 확실하게 폐지되었다.

1960년 김일성 주체사상이 대두되면서 학교에서는 김일성 혁명활동에 관한 내용이 역사 과목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1968년에 김일성 과목을 신설하면서 역사와 지리 과목을 교육과정 상에서 폐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폐지되었던 역사 과목이 1992년의 교육과정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96년의 교육과정에서도 역사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재등장한 것이다. 이는 북한 교육과정 상의 새로운 변화로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인민학교 역사 교과서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⁷⁾

북한은 오랫동안 이념 지향적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 제한적으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대외적 영향으로 인한 동요를 줄이고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념 지향적 교과 교육을

7) “중등학교 교과목의 변천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사상교육이 초기에는 ‘인민’ 또는 ‘헌법’ 교과를 통해 이루어 졌으나, 1968년에 처음으로 김일성 우상화 교과와 「공산주의 도덕」이 설치되었으며, 「현행 당정책」, 「특강」 등으로 바뀌었다. 둘째, 국어 교과명은 국어, 국어문학등으로 자주 바뀌어 왔으며, 한문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셋째, 역사와 지리 교과는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정치경제 교과는 1960년대에 잠시 도입되었다가 곧 폐지되었다. 넷째, 과학교과에서는 초기에는 ‘천문학’이나 ‘광물’이 독립교과로 존재하다가 80년대부터 폐지되었다. 1980년대에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천문학은 물리 교과목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다섯째, 실습교과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정규교과목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1950년을 전후하여 논리학 및 심리학이 잠시 도입되었으나 곧 폐지되었다.”(사회과 통합, 20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념 지향적 교육은 공산주의 사상 무장을 철저히 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체제에 접근하는데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계심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것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방을 하려는 북한의 이중적 모순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방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임에 틀림없다. 이런 입장에 더하여 김일성 사후 교육내용 개편에 있어 김정일의 ‘위대성’을 모든 교과목 학습과 과외교육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함양을 통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도덕 과목은 그 교과 명칭만 보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 교육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김정일 및 그 친족에 대한 이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북한의 도덕 교육은 정치사상 교육을 위한 교과목의 성격이 강하다. 1960년대 초 이후에 북한은 학생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때 이후로 학생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강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 과목과 공산주의 도덕 과목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김정일 과목의 등장 배경에서도 정치 사상 교육적 특성과 목표를 강조하였음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남한의 도덕교육을 북한의 도덕교육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도덕교육과정은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히고, 일상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 의식,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함양하는 것이다.⁸⁾

8) 이를 위해서 “①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에 따른 가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능력의 신장과 함께 인간 존중의 삶의 자세를 지닌다. ②가정·이웃·학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도덕 규범

도덕과는 이러한 기본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내용 면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치를 중심으로 도덕의 지도 내용을 통합,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민주 시민 공동체 의식 및 태도 형성을 위한 내용과 통일 교육의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운영 지침에서 강조하여 제시한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등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 드러나게 김일성과 김정일 교과를 중심으로 우상화 교육과 공산주의 도덕교육을 통하여 이념과 가치교육을 하는 반면에 남한의 도덕교육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의 일반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도덕교육을 한다. 이외에도 남한의 도덕교육은 북한과 유사하게 남한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남한의 도덕교육에서 중시하는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국가애, 민족애, 인류애에 대한 가치는 현대사회와 전통도덕, 현대사회와 시민윤리, 민주적 생활태도, 생활 속의 경제윤리,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남북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등의 교육내용을 통하여 남한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도덕교육은 각자의 사회적 입장에서 도덕교육을 통하여 원하는 인간상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덕교육에 더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교과를 통하여 개인숭배라는 전근대적 교과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이념 지향적 교육과정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러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평화공존의 시대에는

과 예절을 익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문제 사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③전통 도덕과 시민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민주 사회의 도덕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여 원만한 사회 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④국가, 민족, 민족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자세를 지니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실 및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 과제를 파악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하며, 통일 이후에 기대되는 바람직한 한국인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교육부,1997).

지금과 같은 이념의 지나친 차이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남북한의 교육과정의 협의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인 충, 효, 사랑, 공동체,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경애, 협동, 예절, 애교, 애향, 준법, 타인배려, 환경보호, 정의, 평화, 인류애 등과 같은 덕목과 가치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협의와 논의 하에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위에서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체육 등의 비이념 지향적 교과에서 언급했듯이 이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각 교과의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통합을 해 나간다면 비록 이념 지향적 교과의 차이가 심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을 위한 협력 방안

남북한은 각각의 사회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이 평화공존 상태에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한이 모두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은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평화공존이 곧 통일된 상태가 아니라 남북한이 여전히 분리된 채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을 통하여 남북한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의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여 남북의 통일과 그 후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룬 후에 통합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여 사회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남북한의 교육통합은 양측에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확실하게 협의의 주제와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주관적 주장에 치우치게 되어 합의를 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

북한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통합을 위한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전반적 의무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는데서 견지하고 있는 요구는 첫째로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 혁명가를 키우는 것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이 요구는 낮은 단계의 의무교육으로부터 높은 단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전반적 의무교육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요구이다…

둘째로 일반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교육내용을 편성하는 것이다 …

셋째로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쓸모 있게 꾸리는 것이다.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쓸모 있게 편성하는 것은 전반적 의무교육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

넷째로 교육단계와 교종들 사이의 계승적 련관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이린, 198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반적 의무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98-109)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의무교육에서 교육내용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지덕체를 겸비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기초지식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교육내용을 편성하는 것이다. 셋째,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효용성 있게 편성한다. 넷째, 교육단계와 교육내용 사이의 위계적 관련을 체계 있게 구성한다. 이처럼 북한의 교육을 이념적 측면에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의 교육도 이념적인 것을 제외하면 지덕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덕체 교육은 어느 사회체제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공통적으로 교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남북한이 효과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이 의무교육의 교육내용에서 일반기초지식을 중시하는 것 또한 남한에서 기초지식을 중요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점에서 남북한 모두가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합의한다면 교육과정의 내용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평화공존의 시대에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의 현실이 남한의 사회경제 발전의 상태와 동일하지만 않겠지만 양측이 다른 발전의 상태에 있더라도 교육의 수준에 따라 남북한이 합의한 통합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이 통합의 교육과정은 각각의 교육단계에 맞는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든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점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가. 교육목표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기본이 되는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교육목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 인간성의 함양 내용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고, 교육과정의 내용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는 때 단계마다 갈등을 경험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통합을 하기 전에 그 과정을 이끌어갈 뜻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육목표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만 평화공존이란 남북한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목표의 통합도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남북의 교육과정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

앞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북한의 교육과정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해서 10년이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가 구성되어있다. 이는

남한의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한 10년의 교육과정 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교육과정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문제는 현재의 체제가 평화공존 시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별로 어려움 없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남한의 11,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10학년 이후의 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제는 남북의 논의와 협력 하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편제의 통합을 이루면 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은 단기적으로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에 제일의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합 혹은 통일된 한민족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화합하고 발전하며 살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 교육과정은 운영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 정치나 경제 체제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는 공통의 기본교육과정 합의

남북한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을 통합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교육제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통합된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육과정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공존이란 남북의 체제가 공존하면서 최소한 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특정한 정치이념보다는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발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예를 들면, 효, 품앗이와 두레같은 공동체 정신, 자비, 환경친화적 사고, 현대에서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서 환경보호, 배려, 사랑, 공동체 주의, 민주주의, 자유 등의 가치와 덕목을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북의 이념적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통합의 기본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교육과정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현재 서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전문가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시적으로 통합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하여 통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행정적 절차까지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 국가수준의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의 통합 후에 대두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통합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교과서의 개발이다. 교과서의 개발은 남북이 공동으로 단일한 종류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하나는 단일한 종류로 개발하는 교과서는 남북한 양측에 동일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두 종류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통합된 교육과정의 큰 틀과 내용을 지키면서도 남북의 각각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을 구현하여 교과서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양 체제에서 민감한 부분의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교과서 내용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의 경우 단일한 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종류 이상으로 할 것인지를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시나리오

델파이 설문지의 분석 시에 주의할 것은 이미 이 연구의 초기에도 언급하였지만 응답 내용의 동태적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태적 관점에서 상황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과정의 통합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과정 통합 시에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남북의 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언제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남북의 상황이 언제나 유동적이고 따라서 정태적 분석보다는 동태적 분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점이 고려될 때 많은 논의의 상당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는 남북의 통합을 예측하면서도 흔히 현재의 상황을 정태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상황을 예상하는 사고의 관습에 젖어 있고 그 때문에 거시적인 장기 플랜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종종 범할 수가 있다. 남북통합의 연구에서 이 점은 연구의 진행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해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가. 교육과정 통합 설문 내용 분석

o 교재의 공동 사용에 대한 과제

대체로 교재의 공동사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념이 비교적 적게 반영되고 있는 과목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과정에서 우선 순위의 과목은 비이념적 성격이 강한 교과인 수학, 과학, 기술, 컴퓨터, 예체능 과목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와 교재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에 교과서의 통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교재의 공동사용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이 경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피해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의 통합이 반드시 동일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함축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교육과정의 통합이 이것을 필연적으로 함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남북의 분단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은 물론이고 교과서의 통합까지 이루어진다면 남북의 실질적 통합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한편으로 남북의 생활 수준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현재 당장 남북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정태적 사고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남북이 교육과정 통합을 논의할 정도라고 하면 이 상황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남북 교류와 동질성에 대한 이해, 생활수준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해는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예상되는 문제점

우선, 남북한 상호간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가 이미 과거 멸공, 반공, 승공, 평화공존으로 이어지는 단계로 발전된 상태에서 약간의 갈등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지나친 갈등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교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에서 교육과정의 통합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동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별로 심각한 이데올로기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은 논의조차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남한은 부교재가 있고 북한은 부교재가 없다는 상황은 실천과정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의 용어상의 차이가 통합 교육과정이나 통합 교과서 사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지나치게 남북의 상황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용어의 차이는 극단적인 경우 병기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가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대응 방안

우선,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은 하되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서는 여러 종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과서를 단일종의 국정 교과서 방식으로 채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특히 남북의 분단으로 인하여 형성된 지나친 이질화를 극복하는데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오히려 지나친 획일화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점진적 사고와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

인 교육 플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문화적 차이를 공통 교육과정에 담는 공동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교육과정 통합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남북문화의 큰 틀에서 보면 남북의 이질화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남북의 대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큰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통합의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가느냐가 앞으로의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이념적 비중이 큰 교육과정의 통합

대체적으로 남북의 대결구도에서 상생의 구도로 가는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의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남북의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이념적 교육과정이라 할지라도 큰 틀에서 보고 동태적으로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이념이 중요하지만, 중국의 교육 변화에서 보듯이 모택동의 사상을 비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모택동 평가를 후차적 과제로 미루고 시장경제의 원리나 기타 자유주의적 정신 등을 언급함으로써 과도기적 통합단계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태적 상황에 몰입하여 통합이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대립구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등의 주제를 활용하여 지나치게 이념 중심적인 내용을 피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북한에서 예상되는 변화

북한이 교육과정 통합과 관련하여 변화를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 교

육이념에 대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이해와 보완 속에서 교육과정의 실천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이념만을 고립시켜서 생각할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심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지도층은 반대할지 몰라도 오히려 북한 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도 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공산주의관의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지배계층의 문제이지 북한 서민계층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전 작업으로 남북의 사회·정치·경제·문화·교육이 남북 교육과정 통합의 단계에서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통합교재개발 시 예상되는 문제점

통합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은 남한의 이념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함께 북한의 교육적인 변화를 점진적·긍정적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저변에는 남한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이 전제되어 있다.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타협에는 상대인 북한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통합교재 개발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통합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점진적인 관점에서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사상과 관련된 통합교재개발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다만 다양한 보조교재를 개발·공급하여 학습에서 언제나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과학, 기술, 예체능에서 이념을 배제하는 경우 이들 영역에서 통합은 물론이고 공통교재의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o 학점 인정시 예상되는 문제점

남북 상호간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남북 학생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학력 차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이 문제는 남북 상호간 교육제도 및 행정적인 준비를 통해 동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통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남북의 학력 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학점 인정 제도 속에서 학력의 차이는 고학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학제가 다른 것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북한 학생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해도 남한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 간의 학력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학 진학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 학교제도 특성상 2년 간의 고교 학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실제적 장치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학력격차가 문제되는 것은 통합 당시의 고학년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재학기간이 길어야 3-6년이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몇 년 동안의 단기적·중기적 학력격차 극복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교육과정을 통합할 때 학력격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갈등은 일과성 문제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이 미칠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설문지 분석에 대한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전체적으로 델파이 설문지 조사에 의한 분석은 연구진이 이미 논의하고 있는 관점과 그리 심각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태적 관점에서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현재와 같이 불투명한 남북 관계를 근거로 하여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태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보는 경향이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에서 남북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재, 학력의 격차, 이념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의 교육과정, 교과서, 교재, 학력의 격차, 이념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인될 수 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비관적이거나 실망스러운 양태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의 통합과 통일이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의 변명과 화합의 디딤돌이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대국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요약

이제까지 우리는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하에서 남북의 통합은 마지막 단계로 통일을 지향하지만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가장 통일에 근접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통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통일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진정한 남북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지는 활동이다. 교육은 그러한 통일과 통합지향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일 것이다.

이미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국가에서 외형적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통합과 정체성에서 갈등을 하는 독일의 경우를 보았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위한 건설한 계획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통합을 생각하였다.

남북한은 각각의 사회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이 평화공존 상태에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남북한이 모두 필요로 하는 인간성과 인간능력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의 교육과정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확실하게 협의의 주제와 범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교육과정 통합의 협력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1) 교육목표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기본이 되는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남북의 교육과정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 현재 북한의 교육과정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해서 10년이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제가 구성되어있다. 이는 남한의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한 10년의 교육과정 편제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남한의 11,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10학년 이후의 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제는 남북의 논의와 협력 하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3) 정치나 경제 체제에 지나치게 관련되지 않는 공통의 기본교육과정 합의: 남북한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을 통합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교육제도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통합된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교육과정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공동 협의기구의 구성: 교육과정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5) 국가수준의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교육과정의 통합 후에 대두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통합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교과서의 개발이다. 교과서 개발의 경우 단일한 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종류 이상으로 할 것인지를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교육과정 통합상의 협력 사항들은 남북한이 궁극적 민

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교육과정의 통합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단의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버금가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VI. 남북한 교육행정 통합 방안

1. 평화체제 구축과 교육행정 통합론

평화공존 단계는 조금 높은 단계로서 이행하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남북연합’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통일의 한 형태라기보다는 남북이 협력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정치적 통일에 앞서 남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며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의 형성은 평화공존에 따른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며, 남북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전쟁과 평화는 서로 모순적 상태이면서도 서로 견제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은 상호보완 상태를 이루고 있다. 한반도의 오랜 분단상태는 평화 정착을 힘들게 하였는데, 분단된 상태에서 평화를 지키면 통일이 멀어지고 분단을 빨리 종식시키고 통일을 하려면 전쟁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전쟁은 그것이 냉전이던지 열전이던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전과 냉전을 제외하고 평화체제구축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비우호 공존상태, 호의공존상태, 화해와 협력의 상태, 마지막으로 평화상태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의 형태는 매우 비우호 공존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비우호 공존상태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며, 과거 남한과 북한 정부가 행하여 왔던 합의서 같은 것을 내놓고 제한된 교류협력을 할 수 있으나 결국 이런 상태는 힘에 바탕을 둔 공존을 의미한다.

호의적 공존상태는 휴전선에 놓인 군사력 관할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이를 제도화한다. 이런 제도화는 곧 전쟁 방지를 위한 제도화, 그리고 군축 및 군비통제의 제도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지 및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조치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평화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장 조치 아래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정을 지양하고 서로의 협조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

적인 행사에 상호 협조한다.

이런 호의적 공존상태에서 화해·협력의 상태로 가면서 다방면에 걸쳐 사회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한간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여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구활동, 환경보호, 어장공동개발, 기술정보이전 등에 관하여 협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상태에서 기술원조, 재정원조, 인력지원 등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공존은 비우호적 평화공존의 상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공존체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평화체제는 먼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며,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변화시키고, 상호간 군비통제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평화체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 평화공존방안으로는 ① 평화협정, ② 군비통제(군축, 검증) ③ 남북한 평화공존의 국제적 보장(주한미군 감축,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행정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연합 단계는 교육행정의 개혁방안에 있어서도 남한과 북한이 각자 자신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남북한의 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남북한이나, 북한의 일방에 의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장점을 보장하고 단점은 제거하는 방향으로 상호 보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남북한 교육은 각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국가에서는 현재 남북한의 교육과는 다른 이상적인 제 3의 교육을 구상하는 방식이다.

북한 교육 연구는 연구 방법 면에서 객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교육 통합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비교론적 접근에서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 3국의 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의 제시와 객관적인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 교육은 단순히 제 3국의 교육을 분석하는 비교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일부분이고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통일방법에 따라서 교육통합의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단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의 방법에 따라서 교육통합 또한 단계적 통합과 급진적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계적 통합은 평화적인 합의의 절차에 의하여 남북한 당국자들이 통일국가의 교육체제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에 급진적 통합은 북한이 체제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아래 남한의 교육체제를 근간으로 북한의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 볼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의에 따라 교육통합을 추진한다고 가정하고 교육통합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국가의 이상적인 교육모델에 대한 논의 방식, 그리고 단계적 교육통합 체제에 대한 구상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둘째는 급진적인 통합 방법인데, 이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들이 대외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에 관련된 연구(한중하 외,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I~VI), 1994)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데, 단계적 교육통합 방안과 급진적 교육통합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단계적 교육통합 방안에서는 3단계 통일방안에 기초하여 단계적 교육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통합 방안은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원제도, 교육 및 학술교류협력 등 4개 영역별로 3단계의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장·단기적 측면의 통합정책에 대해 총론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음으로 급진적인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위의 연구 일환으로 추진된 「통일대비 교육부분 대책 종합연구」(한중하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는 북한 지역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하여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교육통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 교육통합 준비기, 교육통합 과도기, 교육통합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 대책연구」(정용길 외, 통일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위원회, 1996)이 있다. 이 연구도 북한 체제의 붕괴로부터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되는 과정을 비상시기, 과도시기, 통합시기의 3단계로 나누어서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안기성 외, 집문당, 1998)도 3단계로 남북통합단계를 설정하여 북한체제를 흡수통일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통일시대 북한교육론」(한만길, 교육과학사, 1997)은 흡수통일 이외의 다양한 통일구상 방식에 따른 교육통합 방식과 탈북 주민의 남한 사회 재적응 교육 등을 일부 다루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세부 영역별 연구 사례를 보면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 제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를 하위 영역별로 분리하여 추진한 것이다. 영역별 과제로서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최영표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한만길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방안 연구」(이윤식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그리고 「남북한 교육 및 학술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강무섭 외, 한국교육개발원, 1994)가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는 북한의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여 우리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때 교육통합의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에 의하여 교육통합을 추진할 때 남한이 제안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남북한 화해 협력 분위기에 기초하여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연구는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남한 체제 중심의 교육통합 논리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평화공존 단계와 교육행정통합

가.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과제

기존 연구 중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교육제도의 통합을 다룬 연구로는 1994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최영표 외)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을 3단계 통일론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단계의 세 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에서의 남북사회의 모습을 다룬 바탕 위에서 교육의 모습을 상정하였다. 이어서 남북교육의 통합과제를 논의하는 순서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과제를 설정한 평화공존 상황에서의 남북교육통합 주제로 볼 때 이 연구에서는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의 통합과제들의 유의한 시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공존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완화하고 남북 사회분야별로 교류·협력의 추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의 남북의 교육은 각각의 사회체제와 이념에 바탕하여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을 시도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남북교육공존형이라 이룩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통합의 과제로서는 서로의 교육제도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비공식적, 공식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치성을 띤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시도를 하면 비정치적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설정 수행하고, 예체능 학교간에 친선 목적의 체육대회나 경연대회 개최를 추진 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는 남북공동체 현장의 규율에 따라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제도적인 평화가 보장되는 시기로서 경제 공동체 특성이 강해짐에 따라 사회문화 공동체 의식도 점증되어 간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의 특성을 지닌 교육체제로 상호간에 기본적으로 유지·존속되면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일부 부문에서는 연합운영이 시도된다. 따라서 남북교육부분연합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의 교육통합의 과제로는 남북교육정상회담 추진, 남북교육통합현장의 채택, 교육학술부문 교류·협력의 중점 추진, 교육부문별 연합운영, 표준교육제도안 마련 및 적용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남북체제의 다른 점 때문에 정치성 부문의 연계는 사실상 어려워 비정치적 부문의 교류·협력 및 연합이 위주가 된다. 따라서 취학 전 단계의 탁아소나 유치원 특히 기업 부설형이 우선될 것이며, 유학 등의 수요에 따라 상호 학력 인정, 자격인정 등이 관심을 끌게 된다. 또한 산업 발전의 인력수요의 요청에 따라 성인교육 부문에서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평화공존체제의 남북교육통합을 연구하는데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평화공존체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의 두 가지 단계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첫째, 교육제도 부문에서는 상호 체제의 다름으로 인하여 평화공존체제에서는 교류·협력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특히 비정치적인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되게 될 것이다.

둘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가고 접근의 필요성에 점증되어 감에 따라 부문적인 남북연합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 발전과 관련한 직업교육 부문이 우선할 것이다.

셋째, 평화공존 상황에서는 기능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체제가 너무 다르고 국력의 차이가 크게 때문에 접근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나. 남북한 교육행정 통합의 과제

(1) 교육제도 통합의 일환으로서 교육행정 통합 연구

남북한 교육행정제도의 통합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개발원의 보고서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 연구」(1994)는 당시 이미 나름대로 남북 연합단계를 상징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한의 교육행정제도는 첫째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당·정 분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교육자치제를 시행함으로써 점차 교육행정 조직상의 중앙집권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지방 분산의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다. 셋째, 중앙 교육행정 조직은 독임제 집행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넷째, 지방 교육행정 기관이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다.

한편 북한 교육행정제도의 특성은 첫째, 당·정 일치 체제에 근거하여 교육에 대한 당의 영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 전면에서 부상해야 한다고 보는 사고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주의 계획체제에 바탕을 두고 교육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국가계획체제에 근거하여 중앙 교육행정조직은 합의제 집행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넷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고 일반 행정기관에 예속되어 있다.

남북한 교육행정제도가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사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도 보여 주고 있다. 남북한 교육행정제도의 가장 큰 유사점은 교육행정조직이 중앙, 시·도, 시·군의 세 단계로 구분·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한의 경우 교육행정 조직상의 권리와 책임의 배분 면에서 볼 때, 교육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많이 남아 있다. 행정의 통제 방식 또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 방식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 주도에 가까운 편이며, 관료적인 통제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교육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하게 구축하고 있고 중앙 조직의 감독 및 통제하에 교육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점과 대비할 때, 정도의 차이는 물론 존재하지만 유사한 특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교육행정 제도상의 차이점으로는 첫째, 북한의 교육행정은 정치 우선론에 입각하여 당·정 일치의 특성이 강한 데 비해, 남한은 당·정 분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체제에 바탕을 두고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데 대해, 남한은 지방자치제를 지향하여 행정의 통제 방식을 점차 지방 분산의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앙 교육행정 조직에 있어 북한은 국가 계획 경제에 근거하여 합의제 집행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해, 남한은 효율적인 독임제 집행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넷째, 북한은 지방 교육행정 기관이 일반 행정기관에 예속되어 있는데 대해 남한은 일반 행정기관과 분리·독립되어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은 당이 주도하는 사회이므로 교육제도 통합에 관한 협의 대상은 교육행정기관의 주요 인사 뿐만 아니라 당 산하 중앙위원회 교육담당 비서, 과학교육부 인사와의 접촉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교육행정 영도체제의 과감한 개편을 위하여 정치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예속화에서 탈피하여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북한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치 우선의 북한 교육행정체제를 교육 전문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당 위원회, 당 비서실, 당 지부 등을 철폐하고 그 대신에 당·정 협의과정을 두도록 하며,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교육행정을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교육행정제도를 개편하는 원칙은 주로 과도기적인 성향을 지니면서도 통합 이후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행정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교육활동의 구조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며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도기능과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남북한의 교육행정제도는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은 정치우선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조직이 위원회식 집행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서, 남한은 당·정이 분리되어 전문화되어 있고 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독립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통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통일한국사회가 교육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의 화해·협력 및 남북 연합 단계의 교육행정 통합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 교육통합 사업을 주관하기 위하여 참모기관 성격의 가칭 ‘교육통합 기획단’을 교육부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남북 교육·학술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을 중점 추진·지원하며, 장차 남북 교육통합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남북 연합단계에서는 우선 북한 교육행정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 즉, 교육사업에 대한 정치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당 위원회, 당 비서실 등을 폐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칭 ‘의무교육 개선 협력기금’을 제공한다. 또한 교육통합기획단을 정규기관인 ‘교육통합기획처’로 개칭하고, 교육부총리 직속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그 하부에 기획담당, 고등교육담당, 교육과정담당 등 통합 우선 부문을 대상으로 한 전문 부서를 우선 설치한 후, 보통교육담당, 교원교육담당, 사회교육담당 등의 조직도 상황의 진전에 따라 설치하여 통일에 대비한 통합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동시에 교육부총리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자칭 ‘교육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남북 교육제도의 통합에 대비하여 각 부문별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그 산하에 교육이념분과, 교육제도분과, 교육과정분과, 교원분과 등을 설치하며, 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5~10명의 전문위원단을 두도록 한다.

그런데 교육행정의 자율화, 전문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정치 우선,

중앙집권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남한과 다른 점이 너무 많고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교육행정 요원들이 교육행정의 원리와 관장 범위가 달라지는데 대한 갈등 및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교육행정은 당이 영도하고 행정조직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체제로 ‘교육위원회’라는 합의제 집행조직을 지니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도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교육행정이 전문화되어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정책적인 문제까지 관장하는데 대한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 지역의 교육행정 경험이 너무 달라 차별화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 교육행정의 자율성, 전문성의 측면에서 볼 때 남북간에 차이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도 남북을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는 달리 특수지역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교육자치의 경험이 없어 이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는 자율적인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경험과 수행능력이 통일 초기에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과도기 동안에 교육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시기 구분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 연구

한편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1997)은 급변 상황에 처한 경우의 교육행정 통합에 대해 통일준비시기, 통제시기, 통일국가시기 등 세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통일준비시기 및 통제시기가 평화공존 및 남북연합단계로 치환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보고서는 남북한 교육행정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 이념적 준거

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교육행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북한은 당·정 일치체제로 인해 노동당이 교육행정을 주도·감독하고, 사회주의 국가계획체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중앙 예속화로 인해 자율성이 매우 미흡하다. 반면 남한은 당·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권리와 책임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체를 근거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 북한은 국가계획체제 아래 당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 및 일반행정조직을 통한 관리, 감독 등으로 인해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미흡하다. 한편 남한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자치체에 근거하여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교육행정 경력자를 대상으로 지방교육 행정기구의 구성원을 조직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효율성의 측면에서 북한은 당의 주도 아래 국가 차원의 계획체제와 중앙집권체제에 입각하여 교육행정 및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은 자율화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지방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효율성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교육행정 통합은 통일준비시기, 통제시기, 통일국가시기 등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남북연합 및 평화공존단계와 유사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통일준비시기 및 통제시기(높은 수준의 남북강제통합)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통일준비시기의 교육행정통합

통일된 사회는 그 나름대로 상당한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게 되고,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이에 대비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독일통일 이전 남북간의 무조건적인 통일이라는 감상적인 주장들이 이제는 흡수통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유증이 적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즉, 현실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되 어떤 종류의 희생이든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보

다는 가급적 적은 후유증으로 남북의 주민 모두에게 함께 도움이 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후유증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통일 대비 방안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육행정분야에서는 우선 북한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이를 북한지역의 교육개편작업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삼아 통일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 교육의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지역의 교육통계자료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초등·중등·고등 급별의 모든 학교수와 학생수, 각각의 운영실태와 교육재정문제, 그리고 북한 지역의 교육계 전문인사에 대한 신상정보 등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교육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다. 이러한 자료가 뒷받침될 때, 북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요원의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 교육을 책임질 교육전문기구를 설치하여 북한교육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현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학과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정치·경제·교육 등 각 전문영역별로 보다 전문적인 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 관료나 교육청 장학사 및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 등을 중심으로 통일 직후에 북한 지역의 교육개혁에 참여할 사람들의 준비교육과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각급학교 및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유치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실업교육, 사회교육 등으로 역할을 분업화시켜 전문화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는 북한 교육 전반에 관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이 기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대비 교육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분야는 생산성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체제가 바뀌었을 때 기존 북한의 무상교육 수준을 유지하면서 남한이 전제하는 교육내용과 이념을 부과하려면 그만큼의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국민적인 통일

기금모금을 통해 남북간의 민족적 통질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통일 이후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준비하는 것도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제시기의 교육행정 통합

북한 지역에 대한 통제 시기의 교육행정 역할은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강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해 및 공존공영의 민주주의적 교육이념에 기반하여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분단체제가 급격히 통일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북한 지역은 상당 기간 전체주의적인 교육제도가 지배되어 왔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교육행정체제는 남한 지역과는 다른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중앙교육 행정조직은 의무화된 보통교육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이 때 후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원·조장하도록 하지만, 전자의 의무화된 보통교육 부문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즉, 민주주의가 참여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북한 지역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한 복종형 전통은 그동안 북한 지역 교육행정의 조달·결정·집행 과정이 당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지역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일정 기간 계엄하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남북통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적 행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 지속되어 오던 기존의 중앙집권적 통제교육체제를 지방분권적 통제체제로 변환하도록 한다. 이는 내무행정이나 군사행정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북한 지역의 교육체제를 가급적 유지한 채 교육내용을 민주회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당위원회, 당 비서실 또는 당 지부와 같은 기구는 철폐하되, 이를 대치하여 북한 지역의 교육문화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자유와 평 등의 균형잡힌 이데올로기 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이 기구는 교육부 및 통일부 관료와 각급학교 교

육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각급 학교명칭의 변경** : 북한 지역의 각급학교 명칭에서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간 학교명칭들은 변경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김일성대학, 김책공과대학 등 특수층 학교제도에 대한 통제 및 교명 개칭을 시행하도록 한다.
- **기존 교직원의 심사와 퇴교·재교육** : 북한 지역의 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력 심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퇴교·재교육시킬 판단 준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사회과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담당 교직원과 군사·체육교사들의 재교육이 중요하다.
-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 : 통제 시기에는 북한 지역에서 사용하던 체제 유지적 성격의 교과와 남한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방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폐지하도록 하고, 미리 준비된 자료와 파견 교원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북한 지역의 교육통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 **북한지역 고등인력자원의 확보** : 러시아·동유럽 및 중국 등지에서 유학한 이공계의 연구인력과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물 및 예체능계와 인문사회계의 지적 자산을 지닌 고등교육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호하여 통일 이후 한민족의 안정과 세계사적인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남한이 주도하는 교육행정체제라고 해서 중앙교육 행정기구의 구성원을 모두 남한의 교육행정요원으로 충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교육행정 실무에 종사해 왔던 기존의 북한 교육행정요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에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지역의 교육행정기구는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
- 북한의 교육행정요원을 전체 교육행정기구 구성원의 몇 %로 충원시킬 것인가
- 기존 북한 교육행정기구의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 남한의 교육행정요원과 북한의 교육행정요원의 직위별 분포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 북한 교육제도 전반을 재구성하는 교육전문가집단 파견
- 북한 교육행정조직의 전면 개편 - 특수층 학교제도에 대한 통제 및 교명 개칭 등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교육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충분하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 지역의 자연 과학인재를 비롯하여 지적 엘리트를 보호하며, 연구 환경을 신속하게 회복·유지시켜 주는 것은 이들이 지닌 지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홍보함으로써 북한지역 일반주민들의 신속한 사회심리적 안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교육행정 분야의 예상 시나리오

가.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평화 공존 및 높은 단계의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 구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협력기구 구성 방안

○ 제1시나리오 : 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

사실상 평화 공존 단계에서 남북한 각각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남북한 교류와 관련한 중앙정부차원의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여 설치하고 있는 각종 협력기구를 보완하는 작업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교육행정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기획 및 지원부처의 역할을 강화·확충하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 기구를 구성하려면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최고 행정기관 책임자가 포함된 기구와 실무 기구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비정부기구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구 위주로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중앙정부에서 설립할 경우에는 민간 분야를 포함하는 범부처적 위상을 가진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 지도자급을 리더로 하는 관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보좌·추진하기 위한 교육전문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각급 학교 위원회 등 다양한 수준의 기구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남북한의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반과 관계 부처 담당관 반으로 구성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남북한의 기존 교육관련 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 예를 들면 남한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총, 전교조 등과 북한의 교육과학원 등의 중요 책임자 그룹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특정한 논의·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없이 집행될 수 있는 고위급 구성원들이 남북한 동수로 참여하는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합의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대표적인 교직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교육개발원 등 정책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범정부 수준에서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학교제도와 행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제2 시나리오 : 반관반민적 성격의 협의체 방안

이는 특히 교육부와 관련 연구기관간의 협의체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협의체 속에서는 남북한 학제 균등화를 포함한 교육제도 기구와 교과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과서 편찬 기구를 조성하여 교육당국 및 일선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소속된 위원회 혹은 자문단은 각계 원로, 전문가, 및 현장교사 등으로 구성원을 들 수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육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기구의 책임자를 부총리급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여성·문화관련 부서간의 협의체,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업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과 업무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도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의 가칭 ‘남북한 통합교육심의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우선, 남북한 실무 협의는 남북한 교육부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여 교육부총리 산하 여러 부서의 차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및 대학교 교무처장급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지도자가 선정한 교육분야 행정관료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기구를 준비한 후, 구체적으로 기구 구성 방안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합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예상 문제점

○ 제1시나리오 : 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

민간 단체 중심으로 교육행정 영역에 대하여 상호 교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제한 요인과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의 교육 협력 기구를 조직하는 과정과 방안, 조직 구성 및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구성 비율 문제, 협력 기구의 본부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제 문제 및 교육행정을 합의할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공식적인 남북한 정부 및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 자격에 대한 논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공히 다양한 민간 기구간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호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예상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상호 접근할 수 있는 범위·영역을 합의하는 것은 정부간 상호 공신력에 근거하는 시스템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범 민간단체 중심으로 협력 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은 남북한 쌍방간의 합의 외에도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 문제, 재정 확보 문제, 대표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남한내 혹은 북한내의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교육은 각자의 체제 혹은 이념을 재생산하기 위한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북한이 모두 각 체제와 이념에 유리한 교육행정 협력안 및 협력·통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체제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논의 기구로서의 당초 성격을 크게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협력 기구는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와 달리 교육행정 협력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남북한 양자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보다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 그 자체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제2 시나리오 : 반관반민적 성격의 협의체 방안

이 협력 방안은 반관반민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정책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쌍방 중앙 정부가 외형적으로 중립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협의 및 교류 사안에 대해 간섭 혹은 제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평화공존 단계와 관련하여 각각의 제안에 대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각각의 중앙 정부가 여전히 교육행정 과제와 관련된 합의사항에 대해 자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협의기구의 성격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즉, 교육행정과 관련된 합의 사항을 정치적인 타결 사항으로 변질시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각각의 중앙정부가 상호간 합의·실행 단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러 제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남북한 주요 교육 연구 단체 및 교직원 단체가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다. 남북한 양측 모두 협력기구에 참여하는 성원 모두가 반관반민 단체의 구성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성향이 중앙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할 양측의 교직원 단체 역시 체제 내부의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현실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와 환경 변화에 예민해질 수 있다.

한편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해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구의 구성원을 조직하는 방식도 참여 부서간에 이견 대립으로 인해 예산·인력 지원의 규모와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협력기구를 통해 남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을 거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화공존 단계에서 남북한의 교육협력기구가 해야 할 교육행정 교류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예상할 수 있다. 즉, 정치·경제·군사 등 여타 세부 분야에 비해 관심도 및 중요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협력기구에 참여하는 각 정부 부서간 이견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우선적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교육협력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교육·문화 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 행·재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정책적인 중요도에서 밀려날 수 있는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제1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는 남북 양 체제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영역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협력 기구를 구성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북한 양 체제의 경쟁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남북 정부 당국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해 이 협력기구의 자율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3) 대책

○ 제1시나리오 : 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

우선 평화 공존 상황에서는 남북한 교육 협력기구를 구성할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양측의 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협력 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이 상호간 대화와 타협,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상호 신뢰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상호간 교육 발전 및 협력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호 협력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교육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협력 기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육자간 상호 방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 지역의 각급학교 정상화 지원 방안 논의, 남북한 교과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교

육통합을 지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들에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남북한 교직 단체 및 교육연구단체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육, 직업기술교육, 학술정보 교환 등 구체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를 우선 교류·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독일, 베트남, 중국, 예멘 등의 분단국 통합사례를 참조하여 협력 기구 구성의 표준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협력 기구를 조직하는 상황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측의 안을 제시하여 상호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 양측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원 단체 및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 정비 등 자체적인 기구 지원 정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양측의 민간 차원에서 북한의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단기적인 사업 방안으로 확보·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 시나리오 : 반관반민적 성격의 협의체 방안

우선,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후원과 협력을 통해 상호 교육 정책 및 행·재정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앞선 선행 작업으로서 정치적인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정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협력에 바탕한 교육활동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한 협력 기구를 상설화·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협력기구에 대한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남북한 양측은 중앙 차원의 국가 기구를 정

부 산하에 두기보다는 의회에 소속하는 별도 기구로 구성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협력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고정예산을 근거로 하여, 중앙 정부의 역할을 민간 기구로 이전하고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재정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별회계보다는 상설 일반회계 원칙 속에서 국가 회계상의 남북협력기구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반관반민의 성격을 분명하게 유지·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 역할과 민간 단체의 역할을 상호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민간 단체가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반민반관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자문 혹은 단체간 연계·협력 기구로서의 성격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따라 남북한 양국 정부는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관료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통해 교육 협력체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 기구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기구의 조직은 책임자에 대한 조정·역할과 함께 교원 연수, 기자재 및 교재의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요될 교육 예산을 조달하는 체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평화 공존 단계에서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제1 시나리오>

현재와 같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남한의 지방정부가 북한의 지방정부와 동일 수준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

(1) 협력기구 구성 방안

우선적으로 남북한 양측이 지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남한의 지방정부는 북한의 일반행정기구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행정 영역에서 기본적인 교류·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영역에서 실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한 협력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 일반행정 부문은 가급적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육행정 부문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일반 광역단체장 및 지방정부의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교육행정 부문은 실질적인 인적 교류, 교육 및 학술교류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행정 부문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북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자율화 수준이 점차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측이 먼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결정기구 구성을 제안할 경우에 북한도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방정부가 지닌 교육행정 운영능력이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되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북한측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영역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할 것이라는 전제를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양측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정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행정 영역에 대한 공동 교류·협력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협력기구는 상설화·제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사업은 쉽고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 학생·교사간 교환 학습 및 수학여행, 혹은 체육경기 교류 등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각 지방정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 지방의 교육전문가 및 교사, 학부모 등을 주축으로 하여 지역간 학교 및 학생 교류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각 시·도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학교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수 있으며, 각 지방간 교육 교류 차원에서 장학연수 및 전문인력 파견근무도 예상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주도권 및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한 후 대북 접촉 및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 상황에서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방문 등 남북한 상호간 이해 증진의 측면에서 지방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지방정부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 관련 정보 및 상호 교환 근무 등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간 인적·물적 상황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여 교류·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구는 다음과 같이 반관반민 형태로 조직할 수 있다. 우선,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단, 사회문화 및 경제분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야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지역 교육사업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일반행정 책임자와 교육행정 책임자간의 공동정책으로 각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지방정부의 부지사가 공동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하 조직으로는 각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

일반행정 유관 부서의 국장급 인사, 지방 대학의 처장급 교수 등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전문 위원회는 남북한 학교 관리 위원회, 남북한 학력평가 위원회, 남북한 학생관리 위원회, 남북한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교육관련 행정부서 관료와 각급 학교장, 지역 전문가 등이 망라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방행정 단위에서 교육행정을 주관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지방 정부 수준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를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남북한 협력 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협력기구 사업으로 이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예상되는 문제점

우선 첫째로, 중앙정부 수준의 통일 시나리오와 지방 교육당국의 교육적인 요구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의 경우 지방 교육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상황이 북한측 상황보다 더욱 쉽게 예상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사업 조정과 관련된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중앙 정부에 비해 교육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행·재정적 지원체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만의 교류·협력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만의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평화공존단계에서 지방 단위까지 교육협력 및 교류 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한 교류 과정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역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현실 상황에서 이러한 지방정부간 교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남북한 조직·기구 및 편제로는 북한과의 정책결

정기구를 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한 지방정부들의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남북한간의 교육적 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남한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외압 등 비교육적인 요인으로 인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남한 지방정부의 중장기적 교육비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넷째, 남북한 지방교육행정의 제도적·이념적 차이로 인해 교육 협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실질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의사소통, 행정처리 방식, 여론 수렴 및 대응 방식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지방 교육행정 측면의 격차, 즉 학교·학력간 격차, 학생간 갈등, 학부모·지역 주민들의 편견, 기타 상호 교환 방문 과정의 숙식 및 비용처리 문제 등의 부수적인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

(3) 대응 방안 및 해결책

우선, 교류·협력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기구는 이를 보완·조정하는 역할로 정립되어야 한다. 중앙교육행정의 협력기구 구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새로운 편제와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 협력기구를 주관·주도하고, 일반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간 협력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적·물적 자원 배분 및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한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각각 동수가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조직은 남북한 교육관료, 교수,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저명인사를 각각 균등 비율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성원들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하며, 선출에 앞서서 공개적인 인사 모집 원칙을 세우고 검토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

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민족 통합의 대원칙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 시·도 교육감 수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를 참여시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 관련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한 지방정부들의 대북한 교육행정협의체의 연합적 조직을 통한 의견 조율 및 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육협력의 장애를 극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소 혼란이 따를 수도 있지만, 남측이 먼저 남북 지방정부간 교육행정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지방 단위의 교사 및 학생 교환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교육재정 지원, 교육전문가·교사·학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교류, 시설 및 자원 활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남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 과정에서 상호 교환 연수를 거치게 될 북한 학생·교사에 대한 숙식 및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차별성·다양성을 인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2 시나리오>

남한의 지방정부도 북한의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행정 속에 지방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 이런 성격의 남한 지방정부가 북한 지방정부와 동일 수준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

(1) 정책 결정 및 협력기구 구성 방안

우선 남북한의 특정 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산업체계 및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끼리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지방들의 특색에 맞는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하고, 각종 교육자료 및 학생·교사·교육전문가들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은 교육동질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남북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제1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선결되어야 한다. 관련 학제 및 교육행정체제를 남북한이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류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제도에 대한 상호 통합을 논의할 수 있고, 남북 상호간 인적·물적 교류 및 자료·정보에 대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교사·학생간 교류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교환·제공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상호 이해 교육, 학생교류 및 체험활동, 상호 교육여건을 이해하기 위한 공동연구, 공동 교재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교육청과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원 양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육제도 및 행정 통합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를 설립하거나 지역의 교육발전 방향을 구상하는 것도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 양측의 교육행정관료 및 교육계 전문가들의 상호 방문 및 견학 활동, 일정 기간에 걸친 교원 연수, 학생간 상호 방문 등도 지방정부의 교육행정 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는 문제가 사안의 성격상 그리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업은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학생 및 교사의 이해 증진 등의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학교문화 통합, 남북한 학교 기자재 및 설비 지원, 남북한 학교 개설 및 조정, 남북한 교원 수급 대책 등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기구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1시나리오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한의 협력 기구는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 기구로 나

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

(2) 예상되는 문제점

첫째, 여전히 중앙정부 수준의 통일 시나리오와 지방정부의 교육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은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는 별도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인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간 교류 그 자체가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남북한 교류 그 자체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특성상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교육의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행정의 영역 속에 교육행정을 편제시키는 방식으로 지방정부간 협력 기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행·재정 구조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의 재정적 대책 마련이 우선 해결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셋째, 남한 지방정부들의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이 지나치게 다양하여 협력 기구 자체의 설립 목적이 모호해질 수 있다. 남북한 학교 시설의 차이, 교원 수급 문제, 교육시설·여건에 대한 설비 투자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업 실적이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지방 정부 자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권력을 적정하게 배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예상된다. 교류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의 조달 및 인적 교류에 따른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을 교환할 때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이 전체 교류 활동에 배치되거나 혼란을 불러일으킬 상황도 예측할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남북 지방정부간의 제도적·이념적인 차이로 교류·협력기구의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와의 갈등 혹은 지방정부간 차이로 인해 교류·협력 사업이 혼선을 빚을 수 있고, 통제적인 중앙집권적 구조로 환원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의사소통, 행정처리 방식, 여론 수렴 및 대응 방식 등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제1 시나리오와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 양측의 교육행정기구의 위상 및 일반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3) 대응 방안 및 해결책

첫째, 중앙정부 수준의 통일 시나리오 및 중장기 플랜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침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행정 속에 교육행정을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하지만, 상호 교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남북한 양측, 중앙 및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하고 수정·보완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간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고 대처하는 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은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는 별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정부간 교육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시키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확보하여 민간 차원의 재원 확보 및 의견 수렴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한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이 중심이 되는 분권적인 행정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지방정부간 대북한 교육행정협의체의 연합적인 조직을 통하여 상호 의견 및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수렴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내용 및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교육전문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전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 지방정부간의 제도적·이념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협력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남북 상호간의 긴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른바 “ice breaking”에 목적을 두고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명확한 역할을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소재를 확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남북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폭을 점차 줄여가는 방식을 통해 행·재정적 수요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각 지역 학생 규모나 학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단기 혹은 중장기적인 교환·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이 기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경우도 사전에 교과 영역별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실천 방안을 검토한 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다. 북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문제

현재 북한의 교육재정은 너무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 공존 단계에서 북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남한측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1)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된 예상 문제점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남한도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완전하게 실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통일 이전의 지나친 재정지원은 남한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남한의 교육도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남북한 양쪽 모두 교육행·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의 학생·학부모가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과도한 세 부담에 따른 남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한의 재정 조달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인 정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재정을 제공하기만 하고 이에 따른 실효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남한은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이 너무 낮아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남한 일각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체제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통일 이전의 지나친 재정 지원으로 인해 남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한 교육도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남한 주민들의 지지도 어려울 것이고, 남북한 양측의 교육재정이 동시에 부실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교육재정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며, 재정지원책을 제시하더라도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지원 집행기관을 선정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북한이 이런 재정 지원을 수용하는가 하는 문제도 관건이지만, 남한과 미국·일본 등 관계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내용이 교육내용으로 존재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명분을 잃을 우려가 있다.

넷째, 구체적인 재정지원 절차와 관련된 이념적·제도적인 갈등과 혼선을 예상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국민적인 합의 절차와 여론도 필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 절차와 방법-현금 혹은 현물 대여 혹은 무상제공- 및 사후 관리, 확인 과정 등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논리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원의 속도와 지원 규모, 그리고 남한 경제의 지원 여유 폭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국내의 반감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적 지원 문제 등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 조성 과 홍보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평화공존이 교육과정 속에 확고하게 정착하지 못할 경우 남한의 재정으로 남한을 대적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모순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교육 부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재원을 전용할 우려가 있으며,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재정을 전용할 우려도 있다.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확보의 문제와 함께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상응하는 태도를 확보하는 것도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대응 방안

첫째, 교육재정 지원은 북한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명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교육수준을 비슷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절대 필요하며, 북한 당국이 교육부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적절하게 배분·평가하는 사전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기간을 남한 수준에 맞추는 북한의 교육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재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비판적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 지원 부분을 일정 정도 제한하여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과서·학용품 지원, 벽지의 학교 신설 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재정 지원제도는 국가 수준의 장기 정책 플랜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교육재정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을 현재의 남한 교육예산 내에서 감당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약 10조원 이상의 별도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칭 ‘통일교육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기획을 통해 남한 내에서도 부족한 교육재정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측은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동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국회 등 정치적인 대협력 방안과 함께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을 얻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교육투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정부와 남한 민간인 수준에서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절충형 교육기관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 혹은 탈이념적 성격이 강한 공공용 교과서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북한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남한의 정부 재정 및 국민총생산 영역을 대체 전환하여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북한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통일 비용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수 확보를 위해서 남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간접세를 이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세계은행 등에서 장기 융자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비용 차원에서 국민과 정부가 분담하고,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의 참여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의 대북 비판세력을 설득해 나가면서 점차적·유동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북 지원에 대한 남한 사회를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대북 요구조건으로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 지원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 공교육 재정수준의 적정 수준(GDP 대비 5% 이상)을 확보하고, 대북 지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상한 재정 수준(GDP 대비 6%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교육정책의 ‘시장주의적’ 원칙

이 완화·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의 인적·물적·재정적 측면에 대하여 최소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면적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VII.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단계적 과제

1. 교육공동체 구성의 의의와 단계적 과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남북한 상황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본격적인 평화공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정치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수한 기능적 연계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실질적으로 평화공존 상황에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교육분야에서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통합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교육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념과 목표의 차이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기초로 하여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집단주의 교육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부터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통합 등 많은 과제가 있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통하여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임무이다.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제도의 통합과 동시에 의식과 가치관의 내면적인 통합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 : 냉전대립 → 화해협력 → 국가연합(연방제) → 통일국가
교육공동체 수립 과정 : 반공교육 → 이해교육 → 평화공존 교육 → 통합교육
교육통합 과정 : 교류협력 → 교육연계 → 교육통합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단계적 과제로서 먼저 남한이 취해야 할 노력과 조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교육공동체 구성은 남한 단독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우려 나가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남한이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체 수립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공동의 대화와 왕래,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본격적으로 남북한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요인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추진할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의 공동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가.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통일교육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빈곤과 차별, 인권 유린,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과 비평화의 구조에 대하여 우리는 ‘총체적 위기’라거나, ‘전지구적인 문명의 위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비평화의 구조에 대하여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실천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적 노력들이 지향하는 바를 ‘평화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평화교육은 인간의 삶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에 대해, 교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총체적 비평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평화적 상황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 차별, 불평등,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 등의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화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전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는 개인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각 문화와 언어권마다 평화라는

9)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한울아카데미, 2000

개념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간직하며, 인간의 삶과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평화를 지향해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 속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들로부터, 평화는 곧 인류가 -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 함께 지향할 수 있고, 동시에 지향해야 할 삶의 질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인류에게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평화의 문화를 실현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였고, 그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평화교육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평화교육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구체적 실현 형태는 사회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첨예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위한 '공존교육'(co-existence education)이 평화교육의 구체화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카톨릭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북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교육'(Cultural Heritage)과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이 바로 평화교육이 구체화된 예이다.¹⁰⁾

한국 사회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분단체제이며, 한국 사회에서 통일교육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내에서 평화로운 삶의 질서를

10) 또 다른 관점에서 평화교육이 보편적 이해를 기초로 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유럽과 북미에서는 군축교육, 반핵교육,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간의 긴장이 깨진 이후에는 환경교육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에서는 민족해방교육, 인권교육이, 또 한국에서는 통일교육이 각 지역에서의 평화 실현을 위한 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병현(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파생되는 다양한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치로 인한 전쟁이나 테러 등 물리적 폭력 상태에 대한 항상적인 잠재 위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 남북한 사회가 모두 체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 비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전체적인 긴장과 불신의 분위기, 군비확장과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의 헤아릴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이 조직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모든 비평화적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분단이 반세기 넘어 계속되면서 분단 그 자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남북분단의 구조적 성격은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조가 말 그대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그 나름의 뿌리를 내렸고,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당 수준의 재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내에서 삶의 양식이 분단체제로 인하여 제약되어 있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은 분단체제의 비평화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평화 공존을 위한 교육

(1) 북한 사회 이해 교육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의 상호 이해와 화합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추구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상호 이해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남한이 북한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북한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전쟁과 분단의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반목 상태가 첨예화되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현재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의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만약 남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결 구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남북한 주민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남북간에 긴장과 적대감을 씻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 대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방이라는 통일관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쪽의 특수한 사회 체제를 이해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름없는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 관한 사실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그 동안 체제와 이념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체제와 이념 중심의 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전반적 특성,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념과 체제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이 체제통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하는 방식이다.

북한 이해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상해야 한다. 생활문화라고 한다면 이념이나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이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또는 자연지리나 관광 자원 등을 말한다.

종래에는 통일교육에서 이념과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 왔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이념과 체제에 관한 지식은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가 적다.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많다. 학생들은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 생활관습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여 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더불어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유래된 요소도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 유래된 요소도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와 다른 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다. 다른 점과 유사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유사점에 대해서는 민족의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사회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탈북자들은 남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탈북자들의 생활 태도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그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의 특징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비인간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인정주의, 명분과 자존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있다.

한편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장단점에 대한 자화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한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화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동포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역량이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 면에서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동포이자 민족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동포애와 화해의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을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겠지만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2) 평화 공존을 위한 교육

평화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전쟁과 분쟁·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평화는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심리적 폭력까지 제거되고 인간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되고 사회정의를 실현되는 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심어주고 폭력과 갈등을 비롯한 많은 비평화적 요소들에 대항하는 능력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를 성취하기 기본 조건으로서 남한 사회 안의 평화를 먼저 중시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접근 방향으로서 우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케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갈등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크게는 이념갈등 아래 지역갈등, 세대갈등, 학력갈등 등으로 인하여 ‘편가르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평화 저해 요인들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이를 해소시켜 나가려는 신념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을 위한 기반은 사회정의와 국민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번영이 통일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면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실현은 국민적 통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 내부의 화합과 평화는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이 성과를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측면에서 다원주의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가 보다 존중되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적 화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교육의 방향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평화의식의 배양은 남북한의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체제에서 남북간에 심화되어 온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와 주변의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화 저해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 주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 내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동서독 분단과 달리 한반도 분단이 동서 냉전체제의 성립 이외에 민족 내 이념 갈등에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는 민족 내부의 이념갈등의 극대화로 냉전의 실제적 대결장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체제 속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간에는 당장의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으며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적 공존 관계부터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추구하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우선시하는 평화와 화해협력이라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추구해야 함을 이해시키는데도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갈등을 풀고 분열된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어느 한 쪽을 정복하거나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 준비는 우선 우리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로서 사회적 화합과 안정, 사회복지 실현을 통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의 실현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남한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통일준비 과업으로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정착 경험과 평화정착 노력들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선 대내적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문제로서 지역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 사회적 평화를 해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한반도 평화로 연결시켜 나가야 함을 이해시키며, 그 필연성을 통일한국의 미래상 속에서 찾도록 하는 것이다.

3.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과제

가. 교육분야 교류·협력의 의의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민족통합의 과정에서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으며,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촉매로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의미보다도 통합의 의미가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통합은 내용적이고 의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통일은 두 사회 또는 국가가 결합된 결과로서의 의미가 강한 반면에 통합은 결합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개념이 정태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에 통합은 동태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통합은 남북한 교육의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이 기능상으로는, 구조상으로 서로 연계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체계로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한 교육은 서로 간에 전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물론이고 구조적으로도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통합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교육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가면서 하나의 교육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상호 간의 이질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재형성되어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간의 상호 대립과 갈등 상태를 해소하고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볼 때,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이러한 통합의 촉매제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의 상호 대결과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통합의 단계로 진입하려면 무엇보다도 상호 접촉과 왕래를 촉진시켜야 하고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이 어떠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민족통합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동안 논의되어 온 통합론에 기초하여 교육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은 비이념적이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통일국가를 실현한다는 정상적인 통일방안의 구상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재 남북한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이념과 체제의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노력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분야에서도 남북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서로의 접근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에 우선하여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사회의 변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에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한 사회에도 현대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요소 중에서 특히 개방의 여지가 있는 분야부터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 문화, 예술 등 공유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학생 또는 교수집단을 대상으로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직업기술교육, 국제평화, 환경문제 등)가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이를 남북 교류의 시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문제, 평화문제, 통일문제, 자연생태계 보호 문제, 역사유물의 발굴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북한이 상호 호혜적인 분야부터 추진해야 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경제 협력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일방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교육통합은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남한의 독자적인 노력과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영역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정보자료의 교환에서부터 공동연구와 학술활동 그리고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구해야 하며, 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 국외 접촉과 국내접촉 등 다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방법은 단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교류협력의 영역과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그 통로를 다원화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도 많지만 민간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협력도 많다. 특히 남한의 대학과 북한의 대학간 교류 등과 같이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면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지침을 만들고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원하여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교류·협력 작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교육과 관련이 깊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작업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되겠지

만 교육 분야보다는 오히려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체육 등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교류 협력 활동에 교육 분야도 연계를 갖도록 할 때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나.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의 단계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분단상황에서 심화되어 온 상호 간의 차이와 갈등을 불식시키고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남북한은 분단상황의 현실에서 상호간의 괴리감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일 단계로서 우리가 북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북한 교육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 3국을 통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접촉을 통한 이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육물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호 이념과 체제의 문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세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보적인 단계에서 남북한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둘째,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교원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교환 방문, 공동 행사 개최, 현장 답사 등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의 상호 방문과 행사의 공동 개최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접촉과 왕래의 빈도를 늘려 나가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다소 수동적이며 참관의 자세로서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교육과 학술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관심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비이데올

로기 분야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상호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비이데올로기 분야의 협의와 지원,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친 기초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유사점을 분석하고 상호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남북한 교육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교육적 가치관과 의식의 차이, 그리고 상호 간의 의식의 괴리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해와 화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제도,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과제

(1) 북한에 대한 교육물자의 지원 사업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각종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침체와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교육물자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교육물자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조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하여 교육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지원할 교육물자로는 학용품, 도서, 교육기자재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학용품 종류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종이와 공책, 필기구 등이 우선 지원 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운동화, 가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서적 지원 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제침체와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서적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종이, 서적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적의 지원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고 북한에서 용이하게 수

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좋을 것이다. 더불어 교과서 지원 사업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수학, 과학, 기술 분야의 교과서는 이데올로기 요소가 비교적 반영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교육 학술 관련 기초 자료의 교환

교육에 관한 각종 현황 자료, 기초 자료 등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학술과 관련한 각종 연구 보고서, 실태 분석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상호 교육·학술 정보자료를 개방하고, 각종 교육자료를 공동 협력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비정치적, 비이데올로기적인 분야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한다. 예컨대 수학, 과학, 기술, 직업, 환경 교육 분야의 자료를 공개하고 교환한다. 또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각종 실험 실습 기자재를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3) 남북한 교육학술 자료센터의 설치 운영

남북한이 공동으로 교육 학술 정보자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학술 정보자료센터는 남북한의 교육과 학술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관리하고 교환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상호 관련성 있는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컨대 남북한 언어, 역사, 문화 비교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를 통하여 남북한이 직접 대면하는 형태로 교육 학술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직접 교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제 3국이나 국제기구 등을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국제학술회의에 남북한의 관련 학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4) 남북한 공동 행사의 개최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적인 교류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접촉하고 왕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북한 교원·학생들이 서로를 대면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상호 간의 대면과 접촉을 통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선입관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이해와 화합의 관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교원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육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 교원과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행사로써 학술 발표회, 체육대회, 예술 행사, 민속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행사의 주제로는 남북한 학생과 교원들이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채택해야 할 것이다.

(5) 남북한 교원 학생의 상호 방문

남북한 교원과 학생들의 상호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 초기에는 지역 답사, 학술 여행과 같이 단순 방문의 형태를 띠면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단순 방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인간적인 접촉의 기회를 넓힐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는 주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학생과 교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행사를 상호 교환 방문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상대방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기 위하여 상대방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학생과 교원의 교류 사업이다. 특히 남한 학생과 교원들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답사를 한다거나 수학여행을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 학생들로 구성되는 공연단을 북한에 보내어 예술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한 학생들로 구성되는 예술 공연단, 체육 경기단, 수학 여행단 등을 구성하여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남북한 교육발전 협의기구 구성

남북한 교육의 상호 발전을 위하여 당국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에서는 남북한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과학기술, 직업훈련, 외국어, 컴퓨터 등의 비이데올로기 분야에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육제도, 교육자료, 교과서 협의는 우선 비이데올로기 교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학, 과학, 기술 분야의 교과서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내용에 대한 검토, 교과서 개편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이데올로기 교과는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에 대한 언급을 비교적 제외시키면서 동시에 남북한 간 동일한 교육수준에 근거하여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과제

가. 교육 제도 통합의 과제

평화공존 상황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감과 불신 풍조를 해소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이질적인 요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기능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거론되기 어려울 것이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간에 제반 부문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학입학자격 인정 문제와 학력인정 문제는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남북간에 물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되며 물적 교류 협력에 따른 인적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제도 분야의 주요 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입학 자격 문제이고, 둘째는 학력 인정 문제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학입학자격 인정 시나리오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학 입학자격 인정으로 하는 경우(시나리오Ⅰ)이며, 둘째 시나리오는 중등교육과정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학입학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Ⅱ)이다. 세 번째는 일정 수학 연한의 이수를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시나리오Ⅲ)를 들 수 있다.

시나리오Ⅰ(중등교육과정 졸업자를 대학입학자격자로 인정)은 수업연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단계를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들도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곤란을 겪을 문제점도 많을 것이다. 첫째, 북한 학생의 학력 수준이 특정 교과에서 남한의 학생보다 낮아, 학업 부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교육내용이나 학력수준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으나 중등교육단계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비교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보편적인 학력수준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탈북학생들의 경우를 볼 때, 수학, 과학 부문에서는 북한의 학력수준이 상당히며 약간의 보충교육만 제공된다면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 영어를 포함한 여타 교과에서는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남북대학체제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어 남북학생 상호간에 부적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등교육과정 졸업(예정)자를 대학입학자격자로 인정하는 경우 남북대학이 매우 다르게 체제화 되어 있어 적응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중도 포기할 가능성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Ⅱ(학습능력의 일정 수준 이상인자를 인정)는 실질적으로 상대 지역의 대책 학업생활이 적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진학 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남과 북이 기본적으로 상대교육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부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상위 성적 우수자 일부 또는 사전 준비자 만이 대학입학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또한 상대를 상호인정하고 포용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 둘째, 과외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 많다. 일정 수준 이상인 자, 또는 상대지역 교육 적합자 만이 유학하게 되어 일부 유학에 뜻을 둔 자는 사전에 과외를 받거나 별도 준비과정을 이수하려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고 교육비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시나리오Ⅲ(수업연한을 근거로 인정) 수업연한을 대학입학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수업량을 신체·정신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남북 교육제도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더 많다. 첫째, 북한 학교의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 또한 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생은 북한지역 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못하다. 교육과정의 중복 또는 결손으로 비효율적이다. 학교교육단계별로 교육내용의 구조는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수업연한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교육과정상 중복되거나 결손된 과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평화공존시의 남북한의 학력인정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현 체제로서는 사회요구를 수렴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교육제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한 또한 그간 수치의 학제 개혁 논의가 있었음에도 개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류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늘의 학력 인정 방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남북 모두가 초·중등 단계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월반·유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력 인정에 있어 꼭 일정 수업연한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면 더욱 탄력적인 운영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평화공존시의 학력인정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설정할 수 있다. 시나리오 I은 학교교육단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II는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I(교육단계를 기준으로 학력 인정)은 대학입학자격 인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단계를 기준으로 학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편하고 학생이동시 이해가 쉽고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학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첫째, 남북이 초중등단계 수업연한의 다름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연령이 달라 부적응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학업 부진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업연한이 2년이 짧아 학업 부진 가능성이 많다.

시나리오II(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학력 인정)는 신체적, 정신적 연령을 적응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어 합리적이거나 남북 교육제도의 다름으로 인한 문제점도 많다. 문제점으로는 남북 학교단계의 수업연한 다름으로 인한 남북한 학생들이 서로 부적응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경우 고등중학교 1학년에 편·입학하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 연령은 같으나 학업상 부적응할 가능성이 많다. 반대로 북한의 학생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중복 또는 결손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비효율적이다.

나. 교육과정의 연계 방안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은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상호 교과목에 대한 부분적인 연계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모색하고자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기본적으로 상호 체제와 이념을 유지하고

존중하면서 기능적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과정 분야의 연계와 협력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하여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평화 공존의 초기 단계는 남북한 서로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즉 내용의 동질성과 이질성, 수준의 차이 등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기 단계의 연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위의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되면서 다음 단계에서 교육과정은 서로에 대한 갈등이나 충돌의 요소가 적은 분야의 연계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이념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하고 수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이 교육과정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다른 가치와 이념에 대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과정 분야의 연계와 협력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나 사상체제와 관련이 깊은 가치 영역은 양측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서서히 풀어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의 교육과정 연계 협력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영역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국어 등과 같은 영역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 교육과정의 통합은 남북한 사회의 민감한 가치 영역을 다루는 교과인 도덕, 사회, 역사, 국어 등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교과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전히 세심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된 후에 교육과정의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오해로 인해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통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간에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남북한 교재의 공동 사용 문제와 공

동 개발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즉 남북한 현재의 교재 가운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의 교재를 개발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남북한 교재의 공동 사용 문제는 교육과정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이 교과서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동 사용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교과서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막론하고 정치사상적인 이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사상적인 이념이 비교적 적게 반영되어 있는 교과서부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며, 공동 사용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떤 교과에서 공동으로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교과서 공동 사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아무리 이념성이 배제된 과목이라 하더라도 사회문화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교육내용이 서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 사용이 가능한 과목을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과서의 공동 사용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연계와 협력을 시도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작은 가능성이라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타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은 가능한 수준에서 교과서의 공동 사용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과학기술 계통의 교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학, 과학, 기술, 컴퓨터 교과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예능 계통의 교과서이다. 이들 과학기술 계통의 교과서는 비교적 북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이 적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다. 북한의 초중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이념 내용이 전체적으로 5% 미만의 수준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기본 명제와 관련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언급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 교과서는 과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인 색채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약한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비교적 부담 없이 용이하게 교과서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예능 계통의 교과서는 과학기술 교과서에 비교해서 이념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음악 교과서는 사회주의 찬양하는 혁명성을 띠고 있는 음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 음악이며 이념성이 개입되지 않고 있는 전래 동요나 민요에 관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남북한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의 음악 교과서를 공동 사용한다고 할 때 공동 사용이 용이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교과서의 공동 사용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비이념적인 교과를 중심으로 우선 남북한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내용의 특성이나 수준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이념 문제이다. 남북한의 과학기술 계통의 교과서는 이념성이 비교적 적게 반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있으며, 전문 용어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교육내용의 특성과 수준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교의 수학에서 학년에 따른 내용 수준의 차이라든가, 대학에서 전문 교과에서 내용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교과서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교재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 실현 가능성과 실천 단계가 다를 것이다. 또한 남북간 교재의 이질성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교재의 개발 가능성과 개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내용에서 이념과 가치의 반영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념과 가치의 반영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평화공존 상황이 보다 진척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이념과 가치의 반영 정도뿐만 아니라 내용의 특성과 수준 차이 또한 공동 개발의 가능성과 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교재의 공동 개발 교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과학기술 계통의 이념성이 비교적 적게 반영되는 영역의 교재이다. 둘째는 국어, 국사와 같이 이념성을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의 교재이다. 이 두 영역의 교재는 각각 나름대로의 의의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 계통의 교재는 이념과 가치가 비교적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의 현실적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의 이해와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도 하다. 과학기술 계통의 교재에 대한 공동 개발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재의 공동 개발은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계통의 교재는 남북한간에 내용이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동 개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이론에 기초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반면에 남한은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재의 내용은 각각 특성과 수준의 차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 국사와 같이 남북한간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외의 경우 공동 교재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가 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이 분야에서 교재의 공동 개발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어와 역사에 대한 공동 연구, 공동 조사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 교재를 개발한다면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분야의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만큼 현실적 필요성이나 의지는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어와 국사 영역에서 이념과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는 이념과 가치의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기술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 용어의 차이, 토속어의 발굴, 학술 용어의 표준화 작업, 나아가 문법 체계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표준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육행정의 연계방안

평화 공존 상황에서 남북한 당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 그리고 북한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남북 교육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구에는 제1시나리오(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와 제2 시나리오(반관반민 성격의 합의체 방안)로 제시할 수 있다. 제1시나리오는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여 설치하고 있는 기존의 각종 협력기구를 보완하는 작업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육행정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기획 및 지원부처의 역할을 강화·확충하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 기구를 구성하려면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 지도자금을 리더로 하는 관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보좌·

추진하기 위한 교육전문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각급 학교 위원회 등 다양한 수준의 기구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합의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대표적인 교직원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교육개발원 등 정책연구 기관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범정부 수준에서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학교제도와 행정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한 교육 협력기구를 구성할 경우,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상호간 교육 발전 및 협력 사업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기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육자간 상호 방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 지역의 각급학교 정상화 지원 방안 논의, 남북한 교과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교육통합을 지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현실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남북한 교직 단체 및 교육연구단체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체육, 직업기술 교육, 학술정보 교환 등 구체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를 우선 교류·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남북 양측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교원 단체 및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 정비 등 자체적인 기구 지원 정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시나리오는 남북한 학제 균등화를 포함한 교육제도 기구와 교과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과서 편찬 기구를 조성하여 교육당국 및 일선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소속된 위원회 혹은 자문단은 각계 원로, 전문가, 및 현장교사 등으로 구성원을 둘 수 있다. 남북한 실무 협의는 남북한 교육부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여 교육부 총리 산하 여러 부서의 차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및 대학교 교무처장급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후원과 협력을 통해 상호 교육 정책 및 행·재정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남북한 협력 기구를 상설화·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과 교류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협력기구에 대한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 협력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고정예산을 근거로 하여, 중앙 정부의 역할을 민간 기구로 이전하고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권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한다. 셋째, 반관반민의 성격을 분명하게 유지·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 역할과 민간 단체의 역할을 상호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민간 단체가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교육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 기구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교육 교류·협력은 제1시나리오(남한은 현재와 같은 교육행정체제)와 제2시나리오(남한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제1 시나리오는 남북한 양측이 지방정부 차원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때 남한의 지방정부는 북한의 일반행정기구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행정영역에서 기본적인 교류·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영역에서 실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양측의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정책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사업은 쉽고 단기간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주도권 및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한 후 대북 접촉 및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일반행정 책임자와 교육행정 책임자간의 공동정책으로 각 분과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교류·협력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기구는 이를 보완·조정하는 역할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간 협력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적·물적 자원 배분 및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민족 통합의 대원칙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각 시도 교육감 수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를 참여시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 교육협력의 장애를 극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차별성·다양성을 인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의 분권화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2시나리오는 남북한의 특정 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산업체제 및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끼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지방들의 특색에 맞는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하고, 각종 교육자료 및 학생·교사·교육전문가들을 상호 교환하는 과정은 교육동질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제1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도 선결되어야 한다. 관련 학제 및 교육행정체제를 남북한이 유사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류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남북한의 협력 기구는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 기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수준의 통일 시나리오 및 중장기 플랜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침이 확정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은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는 별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정부간 교육 협력 및 교류

사업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한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이 중심이 되는 분권적인 행정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상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 지방정부간의 제도적·이념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협력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남북한 교육재정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폭을 점차 줄여 가는 방식을 통해 행·재정적 수요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북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교육재정 지원은 북한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명한 목표와 명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재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비판적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재정 지원제도는 국가 수준의 장기 정책 플랜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 10조원 이상의 별도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칭 ‘통일교육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기획을 통해 남한 내에서도 부족한 교육재정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한측은 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동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국회 등 정치적인 대협력 방안과 함께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교육투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남한의 정부 재정 및 국민총생산 영역을 대체 전환하여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간접세를 이용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세계은행 등에서 장기 융자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북 지원정

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인적·물적·재정적 측면에 대하여 최소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면적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VIII. 결 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남북 연합 단계를 거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화해 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남북한은 본격적인 평화공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남북한의 교육은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통합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이질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남북한 교육의 차이와 이질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이미 남북한은 분단 50여 년에 걸쳐 상당한 수준에서 이질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이질화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교육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형성하였으며, 발전하였다. 남북한의 교육은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우선 다른 쪽의 교육이 나름대로의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변화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은 우선 상대방에 대한 왜곡과 비방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남북한의 교육에는 각기 자기 쪽은 전적으로 옳바르고 다른 쪽은 전적으로 그르다는 식의 편향적인 요소들이 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왜곡과 비방의 요소도 있다. 특히 북한의 교육에서 남한에 대한 왜곡과 비방의 내용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편향성과 왜곡된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 남북한 교육통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교육 당국자간 교류와 협이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교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호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는 이 과정이 가장 절실하다. 남북의 분단 상태에서 상호 대화와 왕래, 접촉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것이 남북 상호 간의 불신과 오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하고, 서로의 관심사가 합치되는 사업부터 교류와 협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교육의 통합 관점에서 남북한 교육의 동질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서 발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남북한 교육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굴해 나가면서 상호 간의 화합과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동질성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것을 남북한 교육의 통합 요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 교육에는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북 통합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언어와 역사, 전통문화, 생활관습, 도덕규범 등 많은 부문에서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생활해 온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동질성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생활방식, 미래의 사회상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동질성을 발굴하고 이것을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남북한 모두 기우려 나가야 한다.

넷째, 북한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북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교육제도의 골격, 그리고 문헌상으로 나타나 있는 공식적인 교육이념과 정책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교육의 현실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북한 교육의 현장을 조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북한 교육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사회와 북한 교육에 관한 심층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북한 교육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의 각 분야에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태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북한의 공식적인 문헌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문, 잡지, 단행본, 교과서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 탈북자, 또는 중국 거주 북한 주민들을 통하여 북한 사회와 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정보 수집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 교육의 분야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총론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북한 교육의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아니면 교원, 학생 등에 관한 연구 분야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별 연구라 하더라도 총론의 연장선상에서 유사한 자료를 조합하고 재해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탈피하여 학교급별, 교육 구성원별, 영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광식 외(1994).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무섭·홍영란(1994). 남북한 교육학술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강우철 편(1992). 분단국의 역사교과서 비교. 서울 :교학사.
- 고대평화연구소 편(1990).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 공성진 외(1994). 미리 가 본 통일한국. 서울:동화사.
-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 구종서 외(1996).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삼성경제연구소.
- 김남식 외(1990).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현장문학사.
- 김도태(1991). 재야 통일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 김동규(1992). “남북통일 이후의 학교교육 이념 및 제도에 관한 모델 연구”. 북한통일연구논문집(6). 통일원.
- 김동규(1992). “남북한 학교교육의 실태 비교와 통일에 대비한 학교교육 모델 연구”, 도산학술논총 2, 도산아카데미연구원.
- 김동규(1999).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태완 외(1991).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형찬 외(1990).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 문용린 외(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정책자문회의.
- 문용린(1991). “통일후의 교육체제 구상”.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삶의 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용린 외(1995).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 박영호(1994). 통일 이후 국민통합 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박용현(1992). “남북통일의 전망과 교육통합”, 교육행정학연구회 '92 연차대회 기조강연 논문.
- 박용현(1994).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통일 환경변화와 통일교육 발전 방향. 통일원.
- 박재윤·박영숙(1994). 분단 및 통일국가 교육통합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1992).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안기성 외(1998).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서울:집문당.
- 역사문제연구소(1995).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 역사비평사.
- 윤덕희 외(1992).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이삼열(1992). “평화교육의 철학과 실천방법”. 최상용 편,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 한길사.
- 이용필(1992). 남북한 통합론. 서울 : 인간사랑.
- 이우영(1995).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정석홍(1990). “민족동질성 고양을 위한 교육전략 ; 교육제도적 측면”. 교육학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 정세구(1980). 남북한 정치사상 교육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 정용길 외(1996).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 교육부.
- 조정원(1989). 남북한통합론. 서울 : 희성출판사.
- 최영표·한만길(1994).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영표·한만길·홍영란(1993).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실·한만길·홍영란(1995).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적응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4).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VI)-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의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 한국정치학회 편(1993).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만길 외(1998).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2000).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 한만길·최영표(1994). 남북한 교육과정 교과서 통합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부록 1>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 예측을 위한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은 금년도 과제의 하나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성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을 예상하여 상호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계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 상황에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 상황을 예측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통일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생님의 전문적인 의견은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든 조사 문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조사에 응답해 주신 선생님께 약소하나마 답례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장

연락처 : 한만길 mghan@ns.kedi.re.kr 전화 3460-0271

윤중혁 jonghyok@kedi.re.kr 전화 3460-0273

김정래 jnkim77@kedi.re.kr 전화 3460-0399

김정미 guess1028@hanmail.net 전화 3460-0360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 설정

남북한의 통일은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3단계 통일방안에 따른다면 연합국가 단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합국가 단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며, 교육·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평화공존 상황**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평화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은 상호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은 **공통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제도적인 보완과 연계**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교육의 상호 연계 가능성**이라고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항에서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각 영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다음은 교육제도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 **(학력인정)** 북한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서 학교교육의 단계와 수학 연한이 우리와 다릅니다. 만약 북한 학생들이 남한 지역의 학교(초·중등학교)에 편·입학하게 될 경우 그들의 학력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시나리오 1 (학교단계에 따른 인정) : 만약 학교단계에 따라서 인정한다면 북한의 인민학교 졸업생은 남한의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대응 방안:

시나리오 2 (교육 연한에 따른 인정) : 만약 교육연한에 따라서 인정한다면 북한의 인민학교 졸업생은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하게 됩니다. 이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대응 방안:

1-2. (대학입학 자격) 북한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 연한(초·중등교육)이 10년인데 비해서 남한은 12년입니다. 만약 북한 학생들이 남한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이들의 자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시나리오 1 (고등중학교 졸업생에게 자격 부여) : 북한에서 초·중등교육 10년을 마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해 준다고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시나리오 2 (학습 능력 평가에 따른 자격 부여) : 북한에서 초·중등교육 10년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인정해 준다고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1-3. (학술 교류) 평화공존 상황에서는 학술 교류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빈번한 학술 교류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2. 다음은 교육과정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1. (교재의 공동 사용) 이념적인 내용이 비교적 적게 반영되고 있는 과목(이를테면 수학, 과학, 예체능, 기술, 컴퓨터 등의 교과서와 교재)에서는 교재를 상호 공동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어떠한 과목에서 교재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 대응 방안 :

2-2. (이념 교재) 정치사상성이 반영되어 있는 이념 교과와 교재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남한에서 예상되는 변화 :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2-3. (통합 교재의 개발) 남북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예: 국어와 국사)를 개발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통합 교재 개발이 가능한 교과는 무엇입니까? :
- 개발 상의 문제점 :
- 대응 방안:

2-4. (학점 인정) 위에서 언급한 공동 사용 교재와 통합 교과 이외에 남북한은 학점을 상호 승인하고 교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상호 인정이 가능한 분야:
- 예상 문제점:
- 대응 방안:

3.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1.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누가 참여하여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구 구성 방안 :
- 예상 문제점 :
- 해결방안 :

3-2.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누가 참여하여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 1 : 현재와 같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남한의 지방정부가 북한의 지방정부와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할 경우 누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진 방안 :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시나리오 2 : 남한의 지방정부도 북한의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 속에 교육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남북한 지방정부간에 상호 합의된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할 경우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진 방안 :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3-3. (북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문제) 현재 북한의 교육재정은 너무 빈약하여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화 공존 상황에서 북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남한측이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 예상 문제점 :
- 대응 방안 :

3-4. (평화공존단계의 교육통합방안) 평화공존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통합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래 통합방안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선택해서 () 안에 적어 주시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통합 방안도 작성해 주십시오.

- 남북한 상호 이해교육의 강화 ()
방안 :
- 평화와 화합을 위한 교육 실천 ()
방안 :
- 남북한 교육당국자간의 협의체 구성 ()
방안 :
- 북한 교육에 관한 실태자료의 확보 ()
방안 :
- 통일에 대비하는 북한교육 전문가 양성()
방안 :
- 해외 교포 교육에 대한 배려와 지원 ()
방안 :
- 기타 _____

<부록 2>

남북한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 예측 설문 조사 결과

1. 다음은 교육제도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 (학력인정) 북한은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서 학교교육의 단계와 수학 연한이 우리와 다릅니다. 만약 북한 학생들이 남한 지역의 학교(초·중등학교)에 편·입학하게 될 경우 그들의 학력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시나리오 1 (학교단계에 따른 인정) : 만약 학교단계에 따라서 인정한다면 북한의 인민학교 졸업생은 남한의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상 문제점>

- 연령차이
- 교육 연한의 불일치에 따른 학력차이
- 북한 교육의 질과 내용이 남한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학 불가능한 상태가 예상됨.
- 연령의 차이로 인한 학력차, 인식 수준의 차이, 체력의 차이 등으로 남한학생들과의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고, 틀림없이 따돌림 받게 될 것이다. 학생개인이거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 학력격차와 나이또래의 불균형
- 학력인정은 단순하게 학력인정검정고 시제도(시험)를 통해 측정해서 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학력인정 그 자체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입학연령이 남한보다 더 낮은 북한의 아동이 남한보다 2년이 짧은 초등교육단계를 끝내고 나면 같은 또래의 남한의 아동보다 2-3년의 나이 차가 생긴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과 함께 또래집단의 남한 아동과의 적응(어울림)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이미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아동들도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예상 혹은 기대되는 정체감이나 태도가 정규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는 학력인정시험제도를 통해 측정하기가 어렵다.

- 학교 단계에 따른 인정은 불합리함. 남북한간 수업 연한에 있어서 2년 간의 격차가 있어 학력 인정 문제가 예상된다.
- 학력 기준 차이에 따른 적응 문제 예상된다.
- 학습 부적응, 이들이 소수일 경우 왕따 현상이 벌어질 것임.
- 학력 격차로 인한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임.
- 학력차이에 따른 교과과정 운영의 어려움, 형평성 문제 등
- 남북한 학생간의 형평성 논란 야기
 -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 연쇄적인 문제 발생
 - 중학교에서의 수업이수 능력 여부
 - 가능성은 낮으나 남한 학생의 북한 인민학교 편입학 시도
 - 남북한 학사일정의 일치 여부
- 북한 학생들은 2년 간의 교육과정이 남한 학생들 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인민학교 취학 전 2년 과정의 단계가 있으므로 합산하여 계산해 준다면 문제없음.
- 기본적으로 학력인정은 남한과 북한 유치원, 초중등교육과정의 면밀한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학력은 남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더군다나 최근 기근이 심화되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력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학연

한만을 기준으로 편입학을 허용한다면, 북한 학생은 남한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 4년제 인민학교 졸업생에게 남한 중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함.

- 나이차와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
학습 내용의 수준 차에 따른 학습 부적응의 문제
- 학력수준문제
- 학력수준 차이로 인해 학업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음.
남한 학생들의 저항이 강하게 제기됨.
신체적 발달 상태가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북한학생들이 적응할 수 없음.
- 학생의 학습 수준 및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학습 가능성 저하 및 곤란도 발생.
- 學力 및 學歷의 차이, 연령-체격-체력의 차이로 인한 위화감.
- 북한 학생들은 남한 학생에 비하여 실력 차이가 발생하며, 연령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 적응이 어려울 것이다.
- 학력의 격차
- 북한의 인민학교 년 한이 4년이므로 남한과 비교하여 절대적 수업량이 부족하므로 학력 차이가 심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

- 시나리오 포기
- 교육 연한에 따른 인정이 바람직.
- 남북한 동등한 학력 수준을 전제한다면 북한 학생의 나이에 맞춰 편입학시키는 방안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 중고생이 미국에 편입할 경우 본인의 수학 능력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학교 단계가 아니라 당연히 교육연한에 따른 편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민학교 4학년 졸업생은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

- 교육연한으로 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를 마친 북한의 아동에게 남한의 초등학교 생활과 그 생활을 통한 남한사회 및 남한 학교생활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간은 약 1-2년 정도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아동이 남한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와 기대를 통해 새로운 교육단계를 스스로의 해석과 노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남한의 12학년제에 맞추어 북한의 고등중학교 6학년생을 남한의 고교 1년생으로 간주하여 편입함.
- 기본적으로 인민학교 졸업 자체는 인정하되, 7차 교육과정 적용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년 과정에 따른 학력 기준 등이 있을 것이므로 학력 인정을 위한 검사 등을 하고 기준 성적에 미달할 경우 적당한 수준의 학년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경우 선별적 월반 인정.
- 현재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남북한 교과과정 통합을 전제로 한시적인 적응훈련 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 중학교에서 별도의 보충교육을 실시함.
- 보충교육, 과도기에 방학 등을 이용한 임시 학기 운영 등. 우리의 초등과정 연한을 단축하고 유치원 교육 강화.
- 교육연한에 따라 해당 학교·학년에 편입.
- 인민학교 졸업생이라 해서 반드시 남한의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시킬 필요는 없다.
학년 선택의 유동성이 필요할 것임.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는 학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단계 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취학전 유치원(?) 단계 2년+ 인민학교 4년을 합산 계산.
- 편입학에 앞서 학생의 학력테스트를 실시하고 1-2년의 적응과정을 거친 후 정식학교에 편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북한 출신 학생이 남한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

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먼저 상당한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편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들의 편입학은 단순한 전학이나 편입학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회체제로의 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제적응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인민학교 졸업생일 경우에도 중학교를 예비기간 1년-2년을 포함하여 적응하도록 하는 예비과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학교단계에 따른 인정보다는 시나리오 2를 기본 안으로 함이 좋은 듯.
- 1년간의 단기 집중학습.
- 남북한 교육수준을 감안한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년에 배치하는 방안을 개발, 실행해야 함.
- 본인의 선택 및 진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의 준비 학습기간을 마친 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절충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중단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친 보충교육-평가 후 남한학교의 해당되는 학교/학년에 입학/편입하도록.
- 2년 동안의 수업량을 비교하여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시나리오 2 (교육 연한에 따른 인정) : 만약 교육연한에 따라서 인정한다면 북한의 인민학교 졸업생은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하게 됩니다. 이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큰 문제없음.
- 학교급 불일치에 따른 자아정체감 문제.
- 인민학교 졸업생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임.
- 학교 단계에 따른 인정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을 것이다. 당연히 이

런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은 당연히 배운 교과목의 내용과 수준의 차이일 것이다.

-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내용의 상이함으로 적응이 힘들 것이다.
- 북한 학교의 학생 수용 시설 부족.
- 학력인정의 문제는 학교단계와 마찬가지로 교육연환과 관련해서도 학력인정검정고시제도(시험)를 통해 측정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서 초등학교를 이수한 북한의 아동이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는 정체감이다. 즉 북한의 아동은 스스로를 초등교육을 마친 중학교학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아동을 다시 초등학교로 이해나 설득없이 초등학교 다시 보낸다면 학력인정과는 무관한 부적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북한의 학력이 무효화되는 것에 따른 위축감.
- 역시 교과과정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나 연령이 비슷하므로 1의 경우보다는 쉽게 적응할 것이다.
- 교육내용의 차이에 따라 이질감 확대.
- 만약 북한의 교과 과정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 학생의 심리적 괴리감·적응문제 등
- 만약 남북한의 학제를 일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남한의 초등학교 졸업후 다시 북한지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문제 발생의 소지
북한지역 학생으로서 이미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처리 문제
- 아동에서 벗어나 청소년으로서의 심리적,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중학생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서 느끼는 정신적 갈등 등.
- 인민학교 취학전 2년과정의 단계가 있으므로 합산하여 계산해 준다면 문제없음.
- 기본적으로 학력인정은 남한과 북한 유치원, 초·중등교육과정의 면밀한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학력은 남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임. 더군다나 최근 기근이 심화되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력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학연한만을 기준으로 편입학을 허용한다면, 북한 학생은 남한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 4년제 인민학교 졸업생에게 남한 중학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함.

- 익숙해진 기존제도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따른 생활 부적응의 문제
일방적인 남한의 제도에 따른다는 데서 오는 열등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
- 선행학습내용의 차이점
- 북한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육연한에 따른 인정제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현재의 북한 교육의 요구 학습력 수준에 비추어 별 학습 수준과 관련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교육 내용의 차이가 많은 교과목의 경우(예를 들면, 사회/ 국어/ 미술/ 음악/ 도덕)에는 학습자의 사고 방식 및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개념 문제가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교육내용의 차이 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혼란.
- 북한출신 학생들의 자존심 훼손, 북한에서 나름대로는 인민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압축적으로) 배웠을 터인데, 그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반복해서 또 배우게 되는 문제.
- 학생들이 사상 교육의 다소 문제가 되겠지만, 탈북학생들이 잘 적응하는 것을 볼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학생들간 상호 교류의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봄.

< 대응 방안 >

- 이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
- 남북한 취학년령이 동일하다는 전제라면, 인민학교 졸업생이 5학년에 편입하는 것은 같은 또래들 학급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 학생들에게 남한 교육제도와와의 차이점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 보충수업 등을 통한 별도의 적응훈련이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 고등중학교 1~2학년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시키면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의 확충을 통해 수용.
- 학교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1-2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남한사회의 이해와 더불어 학업 및 교우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이민을 온 학생,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어학과정을 해당학교 및 가까운 지역사회 내에 두어 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학과정을 사회, 역사, 문화분야에 걸쳐 자연스럽게 사회적응과 어학연수를 동시에 접목시켜 실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학생의 어학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규과목을 시간제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전일제과정 학생으로 수용하고 있다.
- 인민학교 졸업생을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시킴.
- 편입학 기준은 남한 체제에 맞추더라도 북한에서의 학력은 기본적으로 공식 문서상 인정하도록 함.
- 북한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수 교육 실시.
- 북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및 이해를 통한 설득, 우리의 교육 연한 단축.
-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의 학제를 일치시킴

과도기적 조치로 북한지역 출신 중등학생에 대해 부족한 교육연한을 보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굳이 교육연한의 차이를 없애고자 한다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5, 6학년울 더 배운 후 중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야겠지요.
- 편입학에 앞서 학생의 학력테스트를 실시하고 1-2년의 적응과정을 거친 후 정식학교에 편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북한 출신 학생이 남한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먼저 상당한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 편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들의 편입학은 단순한 전학이나 편입학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회체제로의 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제적응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우리 학생들은 개인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의 정신을 발휘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학습 코스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습 코스는 그 해당 교과목에는 “민주생활”, “경제교육”, “남북 이해 교육” 등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 위의 문제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필자는 이 시나리오를 기본 안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 남북학제를 조정(5-4-3-4제 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공통교과서 개발.
-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을 지닌 학생을 선별하는 방안을 병행 실시.
- 학습 내용의 차이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별도의 준비 학습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학년제를 원칙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 보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과도기적 조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절충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가 있으며, 중단기적으로는 일정한 평가 후 학력에 해당되는 학교급의 학년에 편입하도록.

1-2. (대학입학 자격) 북한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 연한(초·중등교육)이 10년인데 비해서 남한은 12년입니다. 만약 북한 학생들이 남한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이들의 자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시나리오 1 (고등중학교 졸업생에게 자격 부여) : 북한에서 초·중등교육 10년을 마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해 준다고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형평성에 어긋남.
- 교육연한의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 // 동일학년에서의 남북한 학생들의 연령차이. // 남한 학생들의 불만.
- 북한의 수학 년한을 그대로 인정하면 남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됨.
- 입학자격을 부여할 경우 남한학생들과 비교할 때 조기에 대학에 진학하는 양상이다. 물론 대학에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학생 외에는 진학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심각한 학력의 차이가 날 것이다.
- 학력격차와 나이또래의 불균형.
- 아무런 조정과 검인정과정 없이 북한의 고등중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자격을 주는 것은 정책적 무관심 혹은 무책임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인정을 위한 어느 정도의 학력인정검정고시제도(시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의 초등교육과정에서 언급했듯이 중등교육과정에서도 북한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북한출신 학생은 남한의 중등교육과정 이수자

보다 최소한 4년 이상 나이가 어리다.

또한 대학입학과 관련해서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의 습득이 부족한 북한의 학생에게는 남한의 사회인으로서의 불안정한 정체감과 함께 미래의 안정된 직업 및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대학생활에 대한 사전의 정보와 간접경험이 전무한 북한의 학생에게는 남한의 대학생활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가 중요하다.

단순한 학력측정을 통한 대학입학자격부여는 전공 및 직업선택과 책임 있는 사회구성인으로서의 정체감형성과정과 평생조언자로 중요한 준거집단역할을 하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또래집단형성과정에 대한 경험과 조언자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

- 남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함.
- 남한 대학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학력 및 학습량의 미비 가능성으로 인한 부적응 예상.
-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습내용의 차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 학력부족으로 대입경쟁에서 탈락.
- 학력차이에 따른 입학 가능성의 저하 및 이에 따른 심리적 위화감. 또는 반대로 이들이 입학할 경우 남북한 출신 학생의 융화 문제.
- 남북한 학생간의 형평성 논란 야기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 연쇄적인 문제 발생
 중학교에서의 수업이수 능력 여부
 가능성은 낮으나 남한 학생의 북한 인민학교 편입학 시도
 남북한 학사일정의 일치 여부
- 남한 학생들은 북한학생들에게만 2년의 특혜를 준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고, 북한 학생들은 대입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학력 부족을 느낄 것이다.

-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남한쪽 학생, 학부모들이 반대할지 모르나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 상기 언급한 바대로 우선 대상 학생의 학력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기초학력 부족으로 남한 대학에서의 수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이 해결하여야 할 큰 난제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나이차와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
학습 내용의 수준 차에 따른 학습 부적응의 문제
- 별로없음.
- 남한 사회의 반발이 심하게 제기되어 실행이 어려움.
북한학생들의 학력수준으로 대학과정 이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실행하기 불가능한 방안이 될 것임.
- 남한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 남한 교육 중심의 평가로 인한 북한 학생의 실질적인 평등의 훼손.
- 학력 격차 문제.
- 인민학교의 경우와 비슷함.
- 남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소정의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북한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예과를 두어 북한 학생들이 1-2년 정도 공부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수업 연한에 의한 수학 능력 부족의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음.

< 대응 방안 >

- 시나리오 포기.
- 학습능력 평가 방식이 방안이 될 것.
- 수학능력시험을 제도화할 수 있음.
 - 이는 교육제도가 다른 국가간 진학의 경우 충분히 적용되고 있는 사례임.
- 이러한 경우 많은 학생들을 재수생으로 만들기보다는 남한 학생들과

어느 정도 동등한 학습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 2년간의 보수교육을 받은 후 대입자격 부여.
- 2년간의 선택교과 이수를 시키면 된다.
- 중등교육 졸업과 대학입학자격 부여는 관계교육법령과의 비교와 수혜자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검정시험 및 국내대학입학학력인정관련 법규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학생에게 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야겠지만 특별법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부작용보다 제도의 수혜자인 북한학생의 적응과정에 보다 제도 수립의 무게를 두어야할 것이다.
- 10년의 중등과정을 마친 북한 학생들에게 남한의 고교 2학년에 진학하도록 법제화함.
- 최소 2년간의 보습 과정(7차 교육과정의 경우 선택교육과정 적용)을 거쳐 남한 대학에 적응하기 위한 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는 선택사항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장을 인정. 기본 표준 학력 시험(예컨대, 수능)에서 주요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은 학생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2년간의 보습을 적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 남한은 학점제이고 북한은 학년제이다. 학점제 상황에서는 교과과정 운영에 상당한 신축성이 있으므로 북한 학생들에게 교양필수 과목을 증가하고 학습기한을 연장해 학습 능력대로 졸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별도 기준의 대입전형.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수시입학제 등을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 해결. 남한도 10년 수업을 마치면 입학 자격 부여.
-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제도적으로 1-2년간의 보충교육프로그램 제공(10년간의 초·중등교육에 대해 현재 남한의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남한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켜 주고, 북한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 교육을 수용할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려줄 기제

필요. 즉 북한 고등중학교 졸업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무조건 부여하지 말고 북한 자체에서 마련한 ‘졸업자격시험’에 통과했거나 또는 남한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졸업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인정할 것. 북한 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졸업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또는 북한학생들에게 일정기간의 예비학교를 거치게 함.

- 학력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고시(수능시험)를 통과한다면 입학시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초중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 편입학 대상자에 대한 1-2년간의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함. 북한의 교육 중 장점은 토론식 수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은 권장하고 기타 북한에 없는 사항은 미리 이해/습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의 지원에 대한 남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원을 초과시켜 서라도 대학을 확충하여 북한 학생이 입학하기 직전의 수를 남한 학생들이 편입학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위의 문제점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필자는 이 시나리오를 기본 안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현재 남북학제를 조정(5-4-3-4제 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평가 시험제도를 병행 실시하여, 능력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법을 실시.
- 입시 준비를 위한 선택적인 학습 기회(예를 들면, 학점 인정제)를 마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대학에 관한 한, 과도기적으로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되 이 경우 한시적으로 “교양 내지 기초” 교육과정을 선수과목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인민학교의 경우와 유사함. 일종의 대입예비과정을 설치함.
- 입학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2년 동안 더 수업을 받게 하여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능력을 보충하도록 함.

시나리오 2 (학습 능력 평가에 따른 자격 부여) : 북한에서 초·중등교육 10년을 마친 학생들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에게 대학입학 자격을 인정해 준다고 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형평성에 어긋남.
- 중등졸업 후 대학 입학까지의 공백기간 활용 문제.
- 특혜조치라는 점에서 남측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클 것임.
- 그 당시 뛰어난 남한 학생들의 조기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연히 남한 학생들과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뛰어난 북한 학생들이 조기에 대학을 진학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10학년과 12학년의 학습능력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 학력격차와 나이또래의 불균형, 학제의 파괴.
- 시나리오 1과 마찬가지로 북한고등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측정과 검인정과정은 배치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학습능력평가 결과가 단지 배치나 진학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등교육까지의 교육과정과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강의 운영, 진로 및 진학에서의 학생의 선택권, 준거집단의 중요성 등과 함께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남한에서 자라고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남한의 학생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 남한 학생들이 사회진출 시기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함.
- ‘일정 수준의 학습 능력’에 대한 판단 준거의 체계적 설정 문제.
- 시험문제가 남한 공통의 것이라면 인문사회 과목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 남한 학생들과의 불공평 문제 제기.
- 남북한 학생간 연령차이에 따른 반목이나 부조화, 형평성 문제.
- 이 경우에도 시나리오 1과 같은 문제 발생(학습능력의 격차는 학습 성취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지 상급학교 진학자격 여부와 직결될 수 없음)
- 북한에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그 사회에서 노동자, 농민계 보다는 중, 상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사회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 불평등이 남한으로 대학을 편입학하면서 그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임을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면 해결 가능.
- 남한 체제 및 남한 대학 체제에 적응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대학 입학 후 남한 학생들과의 생활, 북한 가족에 대한 향수, 전혀 다른 생활 철학 경험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될 것임.
- 북한 학생들의 입학으로 인하여 남한 학생의 상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학생들은 그들의 학습을 인정하는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관리 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위의 1-1의 시나리오2에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별로 없음.
-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진통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탈락하게 될 대부분의 북한학생들이 가질 불만과 북한 교육제도와와의 호환성 미흡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
- 북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남.
북한 출신들의 불만과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이 없다고 봄.

< 대응 방안 >

-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하도록 함.
- 그 공백기간을 대학 입학 자격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그것을 위한 대입예비교육 기관을 운영. // 어쨌든 이 시나리오가 바람직함.
- 학생선발은 대학의 자율에 맡김.
- 북한 출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시험보다는 남북한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시행되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고사 같은 형식의 시험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보수교육을 통해 학습능력을 일정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2년간의 선택교과 이수를 시키면 된다.
-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시나리오 1과 유사하다. 즉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경험 및 이해와 대학진학 및 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학습능력평가결과가 대학입학자격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대학적응을 위한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남한의 고교졸업자격검정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함.
-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므로, 탈북 학생들의 평균 학력과 대학 적응을 위한 표준 학력에 대한 균형적 판단 준거를 설정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함.
- 2년 정도의 대학입시 예비학교를 개설하고 북한 출신들은 이를 거쳐야 대입시험 자격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 남한 학생 및 학부형 설득.
- 남북한 학생 모두에 적용.
-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우선 제도적으로는 2년간의 보충교육프로그램 제공(10년간의 초·중등교육에 대해 현재 남한의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

- 특례 입학과 같이 일정 비율을 북한 학생들에게 놓어준 자녀, 노동자 자녀, 체육 특기자 등으로 실력에 관계없이 대학입학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임을 판별할 제도적 장치(예: 국가시험 또는 수능시험) 마련.
- 북한 학생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특별 적응/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해당 대학간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실제 일어날 지 의문임. 북한학생의 남한 학교 편입학 문제와 함께 반대로 우리나라 학생이 북한 초·중등학교나 대학에 편입학하는 경우도 상정하여 문제점을 예상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대학입학시 북한출신 학생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 남한학생들과 경쟁하는 양상을 지양하는 방안을 개발·실행. 대학수학능력을 배양하는 예비학교를 설치, 이 과정을 이수할 경우 대학진학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 시나리오 1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준비 학습 기회를 부여한 연후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학년제 개념에 입각하여 학제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 남북한의 협의에 의한 절충적인 교육제도의 시행.
- 남한 학생과 같은 상황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커터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학생들은 기존의 제도에 크게 변하지 않는 북한에서의 학력 평가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 단 사상적인 내용의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 과목이나 폐지를 고려한다.

1-3. (학술 교류) 평화공존 상황에서는 학술 교류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빈번한 학술 교류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예상 문제점 >

- (역사)사관의 차이.
- 언어 및 개념의 소통 문제, //정치적 이유로 교류가 중단되었다 재개되었다 할 가능성, // 학술교류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경우.
- 초기엔 남측의 자제와 북측의 자신있는 부분과의 교류가 예상되나, 특수한 몇 개 부문을 제외하고 북한학문과의 수평적 교류분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 아무래도 자본이 우월한 쪽이 경비를 지원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학술교류의 주체가 자칫 일방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상이나 체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의견차가 심해 체제 선전의 장이나 타제도 공격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 학문연구의 국제적인 관례를 무시한 북한의 학문연구.
- 상호 이해의 부족,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요구.
- 남한학계에서의 이견(학술교류의 주체, 접근방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인적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의 문제
학술교류와 남북한내부 및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변화의 상호연관성 문제
중심부 학문(정치, 역사, 경제 등)과 주변부 학문(교육, 여성, 문화 등) 교류학술분야의 내용, 범위, 우선순위 문제, 예를 들어 교육문제는 본질적으로 도구적으로 이해되는 주변부적 성격이 강한 학문이다. 따라서 중심부학문분야의 남한 내부의 의견합일과정과 그 이후 남북간의 학술교류과정에 따라 후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

학술대회 중의 각종 발언과 발표내용과 관련된 사전 및 사후 법적 제약의 문제.

- 남북한간의 학술 용어 및 이론의 마찰 가능.
- 상호간의 인식 전제, 접근 방법 등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상태에서 균형적 안목을 결여할 우려.
- 학술교류는 상호인정과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서로 간에 인정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아날 경우에는 철학이나 연구방법론 등에서 상당한 마찰을 겪을 것이다.
- 분야별로 다른 관점에 따른 학술적 논란. 새로운 해석에 따른 기존 교과 내용 개편 필요성 제기.
- 학술용어문제, 접근(연구) 방법 문제, 의식차이에 따른 심도 있는 대화의 부족, 의견 충돌이나 마찰시 해결 방안 부족, 비용(연구비)의 불평등 배분 혹은 부담.
- 교류 활동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분단시기 서로 고착된 이질적 학문풍토와 이에 의한 교류활동 저하 가능
- 교류의 절차와 방법, 학술 교류의 내용에서 각자의 입장을 강조할 우려.
- 반세기에 걸친 분단시대를 살아온 남북한이기에 이데올로기 장벽을 뛰어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발표내용이나 토론과정에서 양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 대변하다 보면 빈번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 남북한 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지금같이 원칙 없이 제 멋대로 하는 북한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학술교류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은 학술교류를 미끼로 남한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이 예상됨.
- 언어 교류, 문화 교류, 역사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학술 교류를 상당한 정도로 강조하여야 한다. 교류의 강도에 따라 남한 사회의 보

수층이나 북한의 보수층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 역사관, 사회정치관, 이데올로기적 시각, 학문연구의 방법론과 분석 기술 등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음.
- 이질화된 개념의 사용 문제.
- 학술교류에 따른 재정부담을 남한측이 전담하는 상황 발생.
북한측 인사들이 남쪽 방문을 선호하는 상황 발생.
일회성, 단발성, 과시성의 학술교류가 상당기간 지속.
- 학술적인 문제점보다는 학술교류에 대한 정치적인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전 학문분야에서 세계관,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노정되게 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생활 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한 지역적 갈등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념적 토대 때문에 서로 다른 定向을 가진 연구목적, 내용, 방법 및 결과의 해석 등등이 가지는 거리감.
- 북한의 정권의 정권 옹호 차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봄.

<대응 방안 >

- 토론을 통한 상호 이해.
- 각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응하게 될 것임. 어쨌든 학술 교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
- 이념적·가치개입적 학문 분야 교류의 경우, 남측의 인내와 포용이 필요함. 그 외 실용·응용과학 분야에서는 일방적 전달방식이 예상되는 바, 북한 스스로의 필요성과 수용의지를 갖도록 해야 함.
- 주제 선정과 기타 제반 학술행사 진행에 있어서 사전에 남북학자들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짜서 대결적 자세가 아닌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진흥재단과 같은 단체에서 주관해도 좋겠고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도 좋을 듯하다. 다만 지혜로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시

범학교를 운영하거나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학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 학문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 동일한 단어를 상이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대화의 시간을 계속 증진시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이 때에 국가안보차원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돌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신있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 남북한 학술교류에 대한 해당분야 남한 학술계의 다양한 이견 수렴 과정이 필수. 소요예산의 언론 및 기업체 등 민간단체의 지원 환경 및 국고 지원근거 마련.
학술교류와 관련된 법적 제약 범위의 유연성 필요.
- 남북한간의 학술 용어 및 이론의 통일.
-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단계적’ 노력. 기본적인 인식 토대의 비교를 통한 학문 교류의 기반조성 노력 선행되어야.
- 문제가 되는 영역에서의 공동연구와 토론을 활성화해서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 단계적인 학술교류의 추진.
- 학술 용어의 정리와 단일화, 충분한 기금확보, 점진적 접근을 통한 문제의 최소화 및 문제 해결 가능한 쌍방의 동수 위원회 설치.
- 교류 활동 소요 경비는 일종의 통일 비용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정부 지원 요청. 단기 교류보다는 장기간의 상호 방문 연구 지원·장려.
- 교류의 절차와 방법을 양측이 마련하고 준수할 것. 체제와 이념이 다른 만큼 정치적 내용보다는 양측이 논의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관심분야부터 시작할 것.
- 학술교류 활동의 주제에서 일정기간 양측의 이해가 성숙될 때까지 정치적 이유 또는 주제는 다루지 않는다.
- 학술교류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일관되게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학술 교류에 있어서 보수적 인사와 진보적 인사를 동수 내지는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계에서는 많은 보수 인사들이 포진

되어 있다. 그들의 북한과 학술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학술 교류 자체가 성사되는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진보적 인사들의 주도로 북한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한다. 그 속에서 쏘킨한 행동이나 연사를 자제하고 질적인 교류를 계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남북한간 시각 차와 갈등이 비교적 없을 부문부터 교류를 시작해야 할 것임.
- 남북한간의 기본단어의 개념 대조표에 의한 학습.
- 효율적인 학술교류를 위한 조정 및 협의 기구 설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학술교류 사례에 대한 우대정책 실시.
학문의 자유와 국가 공민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없음(문제 발생-- 반성과 평가-- 대안 모색 등과 같은 정치 과정이 순환적으로 진행되면서 적용점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전개될 것임)
- 원칙적으로 민족적, 인간적, 민족적 가치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이질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균형 발달을 기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임.
- 비이념적 분야로부터의 접근, 한편으로는 가장 침해하게 대립되는 견해를 보이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 논의.
- 학술교류는 학문 발전을 위해 빈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순수한 학술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2. 다음은 교육과정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1. (교재의 공동 사용) 이념적인 내용이 비교적 적게 반영되고 있는 과목(이를테면 수학, 과학, 예체능, 기술, 컴퓨터 등의 교과서와 교재)에서는 교재를 상호 공동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어떠한 과목에서 교재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 교재와 교과서를 구분할 경우, 교재 선택은 교사의 자율에 맡겨 모든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위에 제시된 순서가 바람직해 보임. 다만, 교과목표 및 교수방법의 성격 차이로 예체능은 좀 뒤로 보냄.
- 수학 과목에서 공통성이 가장 높을 것이나, 과학 기술 컴퓨터 등 분야의 교육과정은 과학 기술 발전의 수준 차이를 반영하기에 공동사용이 비현실적일 것임.
- 수학, 과학 등 자연과학이 먼저 공동사용 대상이 되어야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도 점차 공동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자연과학 과목.
- 수학, 과학, 예체능, 기술, 컴퓨터.
- 남한에서 예상되는 변화는 과학 및 기술분야에 대한 교재의 공동사용은 실제적인 상호간 과학기술교류 및 인력교류 및 훈련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공동교재의 사용을 통해 이동시기부터 같은 교과서를 배우고 있다. 민족 동질감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킬 수 있다. 공동교재개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냉소주의와 인력구성과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 현 시점에서는 공동 사용 어려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 이념적 내용은 '진술'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식에 대한 관점, 교과서 편제 등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수학, 과학, 기술...
- 물리, 화학, 수학 등 순수 자연과학 계열.
- 기초학문분야(수학, 물리, 생물, 화학 등)
- 외국어, 이공계, 예체능계열의 교과목 전반.
- 컴퓨터, 기술, 과학 등
- 수학, 과학, 컴퓨터, 기술, 예체능 교과.
- 현실성이 거의 없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남북한 간 교육수준 및 생

활수준의 격차를 생각하면 이러한 것이 과연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그래도 굳이 하여야 한다면 아니 북한이 너그럽게 이해하여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아마 체육 교과 정도가 아닐까 함.

- 질문에서 예시된 것처럼 이념적인 내용, 역사관, 사회정치관 등 남북간에 시각 차가 거의 없는 모든 과목에서 교재의 공동 사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 자연과
- 거의 없음.
- 수학, 기술, 컴퓨터 등
- 수학, 과학 등 이과계통의 교과목.
- 가능하다고 봄.

<예상 문제점>

-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상대 교재를 통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반면 교사로 작용할 수 있음.
- 언어 소통의 문제. // 그래도 포함된 이념적 내용을 없애는 문제// 부교재가 많은 남한과 부교재가 없는 북한간의 여건 차이 문제.
- 북한의 현 교육과정의 내용이 모두 김일성 부자 찬양내용과 정치이데올로기적 구성이 각 교과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쉽게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 남북한의 교재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곤란함.
- 이념성, 언어, 체제(컴퓨터의 자판 배열 등), 소프트웨어
- 교재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즉 국가교육의 문제이다. 따라서 일부분의 내용이라도 남북한 스스로에게 익숙한 용어를 집착할 것이다. 매우 다양한 과목과 모든 학교급에 걸쳐 전면적으로 교재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내용선정과 교사들의 사전교육과정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 용어상의 차이점을 피할 수 없음.
- 기본 용어, 체제 및 접근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현재 교재를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전문용어와 체제, 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서로 다른 관련 언어 및 개념의 사용.
- 교재 내용의 사례나 수준 차이.
- 용어상의 차이로 인한 혼란
활용 가능한 수업기자재의 차이와 교사의 미숙련으로 실제 수업적용의 곤란 가능.
- 언어사용. 용어나 개념의 차이, 교재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치적인 내용이나 문장들.
- 용어의 상이성으로 의미전달이 어려움.
- 체육 교과 내용 선정 시 남북한 학생의 신체 발달 정도의 격차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또한 체육활동에는 여러 가지 체육 기구들이 필요한 데 이러한 것들을 북한이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 체육활동이 영향을 받을 것임.
- 용어 혼란, 기술적 차이의 극복 문제. 7
- 교재의 공동사용 가능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표준어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별로없음.
- 예상과는 달리 비이념적 분야에서도 교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용어, 교육지향점이 상이하야,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없음.
- 교재의 내용에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런 기초 및 도구과목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음.
- 양측의 학문발달의 수준차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 내용의 차이.
- 문제점이 없음

<대응 방안>

-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논리에서 벗어나 포용과 이해 가능.
- 각각의 문제에 따른 대응 방안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날 것임. 연구와 의사소통, 협동작업 등 많은 노력으로.
- 남한 교과서 중심으로 2~3 종의 수준별 교과서를 만든 후 각급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김.
- 남북한 교육관계자들로 구성되는 교과서 담당기구가 당연히 발족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모든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새로 구성되고 집필된 교재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함.
- 이념이 배제된 교과라고 하더라도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일정기간을 두고 남북한의 학자들이 조금씩 개념의 통일, 소프트웨어의 접근 등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자판배열과 같은 문제는 일정기간 공존시키다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유도하면 될 것이다. 기계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처음부터 모두 다 하나의 체제로 구성하려 한다면 흡수 통일의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다. 공동사용 을 위해서는 이념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효용성, 보편성, 타당성에 입각해서 교재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언어의 수용에 따른 남북한 문화의 전이에 대한 대비와 내부갈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재의 내용과 용어에 대한 교사교육뿐만 아니라 공동교재개발과 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교사대상의 홍보와 설득이 필요하다.
- 용어의 통일.
- 공동 교재의 개발을 위한 교과서 비교 분석의 체계화.
- 용어통일을 기해야 하나 외래어 사용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입시열이 상당히 높으므로 이는 양자의 대학입시 과목을 통일한 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상대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는 보조교재의 개발 보급. 공통용어의 개발 사업 추진.

- 사례를 비정치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개편.
- 학술교류 등을 통한 용어 통일 노력.

상호 수업기자재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한 물적·인적 지원, 교사연수
- 교과 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용어나 개념의 차이를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 양측 교과서에서 남한의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계획경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은 서로의 양해 하에 보류해 둘 것.
- 공동 사용이 가능한 교과는 이데올로기가 배제될 수 있는 과목이다. 공동 사용시 쉽게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용어의 통일과 해석작업의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 평양에 위치한 고급당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용어 혼란과 기술적 차이는 남북한 공통 수학, 과학, 예체능, 기술, 컴퓨터 교과목을 분리하여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술 정도나 용어를 대폭 수용하고 초기에는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시범적으로 통합 교과를 실시하며 북한과의 이질화를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남북공용표준어에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재의 남북한 표준어를 인정하여 같은 내용의 교재를 만들되, 언어표현 서술은 서로 달리하는 2원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 봄.
- 새롭게 교재를 개발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도가 없음.
- 교육내용이라든지 진도 등에 있어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교육과정, 교과서 전문가들의 집중적 논의 후 절충적 방향의 추구.

2-2. (이념 교재) 정치사상성이 반영되어 있는 이념 교과와 교재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남한에서 예상되는 변화 >

- 상극의 갈등논리에서 상생의 포용논리로 변화.
- 무조건적인 비난 자제// 질서의식 조금 고양, // 단 북한의 정치사상성에 대한 영향은 아동이라도 별로 받지 않고 무관심할 것임.
- 남한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실용주의적 세계관과 일상적 삶의 방식은 북한식 이념교과와 내용을 강제성이 없는 한 진지하게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임.
 - 북한교과서는 남한학생들에게 짜증스런 반복적 문구들과 조잡하고 생경한 용어와 내용으로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임.
- 남북의 평화공존이 확실해진다면 아무래도 체제 우위적 논조는 많이 탈감될 것이다. 체제우위교육은 평화교육이나 상호이해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 북한의 교재는 안 볼 것이다.
- 이념교재의 내용에 따라 사회적 반응과 대응이 달라지겠지만 남북한의 국호가 공존하는 한 남북한이 만족하는 공통의 이념교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남한이 만족하는 이념교과서의 제작은 남북한 교육통합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다. 현재 남한의 각종 실정법에 규정되고 있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범위와 그 범위나 시각이 다른 교재는 남한 내부의 합의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 별 변화가 없을 것임.
- 공존의 형세와 정치적인 우열에 따라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들을 찾아야 하나 북한의 유일사상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공통분모를 찾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 항일 빨치산 운동 등 북한의 과거사를 긍정적으로 수용. 사회주의와의 공존 가능성 모색.

- 상호 체제의 인정 방향으로
- 이미 평화공존,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더욱 확대될 것임.
- 도덕 교과를 남북의 변화상을 반영한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과가 생길 것이다.
- 남북한 공동 선(善)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려는 노력.
- 통합 교과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도 예상되나 민주 사회의 기초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반향도 예상된다. 그 내용은 자유, 평등, 인권, 평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유 민주주의적 이념성을 지나치게 부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일정기간 동안 이념혼란이 일 것이나, 이념적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넓혀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능력, 즉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극복될 것이고 북한이념에 대한 평가적 안목도 길러질 것임.
- 별로없음.
-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수정. 북한의 주장을 분석하는 수준에서 반영.
- 우파적이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일관한 내용들에 대한 상당한 수정 불가피.
- 북한과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아직도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체 사상에 젊은 사람들은 매혹될 수 있음.

< 북한에서 예상되는 변화 >

-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무조건적 비난 자제 // 사고의 다양성과 융통성 경험 // 자본주의 및 경쟁 논리에 접함으로써 오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적응
- 북한학생들은 남한 교과서를 충격적으로 대할 것임.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에 상당기간 혼란을 일으킬 것임.

- 북한도 체제우위 논조는 많이 탈감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한체제 비판과 자기 체제 우월성 강조가 지속된다면 평화공존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음.
-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될 것임.
-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이념적 성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 남한의 경제성장을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부분적 수용.
- 당분간 자체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점진적으로 완화.
- 대남 적대감을 고취하는 내용이 배제될 것임.
- 김일성, 김정일 교과 및 공산주의 도덕의 존재 여부가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교과는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인 하에서는 체제유지와 직결된 문제라 폐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기타 국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에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내용이 교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이다.
- 남북한 공동 선(善)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려는 노력.
- 자본주의의 일부 개념이 수정 사회주의 형태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
- 북한 전통적 공산주의관의 변화.
- 엄청난 이념적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큼. 특히 극우나 극좌로의 일방적인 편향을 가지는 학생들도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
- 가치 기준의 혼란.
-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성향 유지. 취사선택의 입장에서 남한측 내용 소개
- 북한과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 과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 예상 문제점 >

- 북한지역 주민의 이데올로기 변화가 더딘 점.
- 처음에는 상호 교재에 대한 논란 및 비판이 많을 것. 심지어는 교류가 일시 중지되기도 할 것. // 교재를 활용하는 교사의 전문성 및 훈련 미비 문제.
- 남한학생들의 거부와 외면, 북한학생들의 정신적 충격과 혼동이 예상된다.
- 북한도 체제우위 논조는 많이 탈감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한체제 비판과 자기 체제 우월성 강조가 지속된다면 평화공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을 남한이 수용하기는 어렵다.
- 서로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통일 이전이라면 혼란이 있을 것이다.
- 이념교과서에 대한 남한 내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정법과 상처되는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사용과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남북한간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증거제시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 정설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
- 북한의 체제 변화에 중요 변인이 될 수 있음.
-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 남북 국내 보수파의 반발. 교과 개편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관, 이념의 혼란.
- 이념의 충돌에 따른 문제와 교사의 수업 문제(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급격히 넓혀 가는데 따른 교육계 전반의 혼란 가능.
체제개방 이후 북한교육계의 충격과 이에 따른 교육 공황 가능.
- 양체제에서 국가에도 주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배제하고 공동평

화, 상호이해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서술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북한 - 북한체제 수호를 위한 또 다른 극단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
-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 독일의 경우와 같은 사회심리적 징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예컨대, 남한 학생들의 경우 우월의식, 북한 학생들의 경우 열등감 등
- 개념의 혼란.
- 평화적인 학술교류 단계에서도 남북한 상이성은 그대로 상존.
- 양측에서 과거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움.
- 어느 한쪽이 정치사상적 정향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 북한의 정치 사상성이 반영된 교재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체사상을 뛰어 넘는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특히 남한의 민주 시민교육 등을 통해 상호 이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하여 남북한 공동교재로 활용하도록 해야 함.

<대응 방안>

- 북한 지역의 정치사회화에도 상생논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 위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임// 이념적 교재라도 가능하면 교류해야 함. 다만 초기에는 같은 교과 전체에 대한 교류보다 이념적 교재가 비교적 없는 내용부터 점진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육 당국자간 상대방을 비난·거부하지 않고 서로 접근하는 입장에 합의해야 함. 남한은 북한의 집단주의적 가치를 공동체 중심논리로 궁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북한은 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의 존중 등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향에서 교과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남한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강조하더라도 다양성의 하나로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면

평화공존 자체가 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도깊은 정치적인 논쟁의 선행을 이 문제는 요구한다. 한편 제 3의 이데올로기, 남북한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제 3의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이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연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을 시도해 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 북한의 이념교재는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 통일이 되기 이전이라도 상대방의 정치사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등단계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비하여 토론 수업을 하도록 한다.
 - 개인 혹은 일부 이해집단의 시각과 주장보다 검증가능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논의가 진행되고 이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재를 개발하도록 한다.
 - 남한쪽에서의 전향 유도.
 - 양쪽의 교재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점진적인 교과개편.
 - 당국자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이념의 단일화(한민족 사상 등), 혹은 이념에 대한 중요성 최소화와 다양성 인정.
 - 남북한 학교교육에서 공히 추구해야할 공통의 교육이념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 요청.
 - 정치성을 띤 교과와 개편에 대해 남북한이 끊임없이 논의해야 될 것.
- 국어, 수학, 과학과 같이 일반 교과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없애는 것은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상화 과목, 공산주의 도덕 및 전 교과에서 남한을 비방하거나 통일에 방해가 되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할 것임. 공산주의 도덕은 북한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내용인 만큼 내용이 개편된 상태에서 존속 가능. 또는 남북한이 함께 편찬한 시민교육에 관련된 교과 신설 가능.
- 정치사상성의 내용은 양측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균형개발을 향

지역개발 정책, 환경개발정책 등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치 사상적인 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통합교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교과서 자체를 개발하는 노력보다는 남북한 교과 전문가나 사회 지도층,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에 대한 전반적으로 논의를 개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교육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그 교육의 내용은 민족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등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임.
- 공통교과서의 개발.
- 이념적 분야를 최소화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비이념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음. 즉, 상이성은 줄이면서 상보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
- 객관적 사실이나 역사발전 과정에 기초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개선하고,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 교육과정, 교과서 전문가들의 집중적 논의 후 조화로운 방향의 추구.

2-3. (통합 교재의 개발) 남북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예: 국어와 국사)를 개발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통합 교재 개발이 가능한 교과는 무엇입니까? >

- 국정이나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단순한 교재라면, 모든 교과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수학이나 과학 등 자연계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 어떤 교과든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 다만 우선적으로는 2-1에 제시된 교과들부터 개발 가능함. 그리고, 교과 전체의 개발보다도 어느 교과든 개발 가능한 단원 또는 주제부터 개발하는 방식.

- 국어, 국사(전근대 시대까지), 민족문화 등
- 각자의 체제유지에 직, 간접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앓는 교과는 모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국어, 국사, 자연과학 등
- 언어관련 분야(모든 학문분야) 역사과목 중 고대사의 일부에 대한 고중분야 및 각종 역사사료에 대한 해석. 민요 및 한국화와 같은 전통문화분야
- 국어, 국사,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 (국어와 국사의 경우 언어관, 역사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통합이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상기한 비이념 교과부터 시도 가능할 것으로 봄.
- 국어는 가능해도 국사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에서 국사는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교과목이다.
- 수학, 과학, 가정, 지리
- 기초과학분야(예,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등. 컴퓨터, 외국어 등)
- 민족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위에 예로든 국어, 국사 등 인문학 분야에서의 통합교재 필요.
- 국사는 사관이나 이념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뒤로 미루고, 우선은 정치적이 덜한 음악, 미술 등의 교과 통합 가능. 그 다음으로 국어 가능.
- 국어, 사회(역사, 지리)
- 국어, 국사, 체육
- 국어와 국사도 가능하다.
- 질문에서 예시된 것처럼 이념적인 내용, 역사관, 사회정치관 등 남북간에 시각 차가 거의 없는 모든 과목에서 교재의 공동 사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 수학
- 국사보다는 국어 교재의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도구과목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 판단됨.
- 국어, 역사, 지리, 수학, 과학, 예체능, 사회 등

< 개발 상의 문제점 >

- 학자들간의 (역사)사관의 차이.
- 의사소통 문제, 특히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방식 및 절차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정치적·사상적 간섭의 개입 및 압력, //교사 혼란 문제, //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 차이 문제(반대쪽에서 개발하는 것을 믿기 어렵고, 내가 개발하자니 재정 어렵고 ... 등)
- 이때 각각의 역사관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론상으로, 그리고 머리 속에서 그리는 과도기적 평화공존 상태는 늘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또한 쉽게 깨어질 수도 것을 인식해야 한다.
- 표준어의 사용.
- 일부 역사적 사실과 사료에 대한 남북한간의 상이한 정치적 해석. 특정 역사적 사실과 사료에 대한 남한 내부학자간의 의견 수렴의 문제
- 남북간 용어상의 차이 및 민족 사관의 차이 극복.
- 전문 용어의 차이와 언어의 사회적 맥락 차이로 인한 문제.
- 국어의 경우 현재 한글 컴퓨터처리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모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표준 문제가 대두되면 정통성 문제로 이어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 개념 및 용어의 이질화.
- 학력 차이, 학술 용어 문제, 사례 문제.
-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이 질게 배인 교과들이므로 이를 극복하고 통합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절충하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어느 한 측의 관점을 포기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갈등 가능.
- 용어나 개념의 차이, 학습 순서의 차이, 정치적 내용들.
- 용어의 정리와 통일, 정치, 이데올로기 내용 배제.
- 과연 가능할까? 국어의 경우,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국사의 경우 역사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임.

- 용어와 단어의 뜻의 문제점, 해석상의 문제점.
- 별로없음.
- 국사는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 편이하고, 현재와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달라 공통 교재를 개발하기 어려움. 국어 교재도 남북이 서로 합의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단시간에 개발하기는 어려움.
- 국어나 국사와 같은 과목은 쉽사리 통합되기 어려울 것임. 국어과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국사 같은 과목은 남북한의 역사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학문적 교류와 인식의 공유 단계를 착실히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어와 국사 등의 교과서에 내포된 정치사상성의 문제.
-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역사, 정치, 경제, 국민윤리 등은 정치 사상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교과이므로 통합 교재 개발에 있어서 이견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봄.

<대응 방안>

- 교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다양성 인정.
- 각 문제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하면 될 것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개발을 해야 함.
- 우선 공통성이 합의된 부분은 공동교과서를 편찬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교과서 편찬 대상과 범위가 아주 적을 것이나, 억지로 서둘러서는 안됨.
-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이 참가하는 공식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남북한이 먼저 표준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 점차적 언어상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학자간의 학술교류지원.
 -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순수 남북한 학자간의 합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 필요.
- 남한쪽으로 통일 지향.

- 상세한 용어 해설을 첨부하여 이제까지 남북한에서의 사회언어적 맥락을 모두 존중하여야 할 것임.
- 표준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공동 연구 수행, 부교재 제작.
- 학술 용어의 통일, 학력차이 최소화 노력, 보편적인 사례 삽입.
- 이러한 통합교재의 개발과 실시는 장기 과제로 삼음. 학술교류 활동을 최대한 확대하여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결 과제임.
- 합의하에 공동 기준 마련.
- 이질화 극복을 위한 용어의 통일, 양측에 이롭고 상호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구성.(지역개발+ 환경보호 등)
- 단순한 역사 사실의 기술에 있어 남한/북한에 없는 사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남한과 북한의 단어를 이해하는 단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함.
- 전면적인 남북한의 사상적 내용이 아닌 통할 수 있는 북한 교과서 내용을 일부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통합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북한 국어 교과서의 서정적인 내용의 소설이나 글, 수필을 인용하고(국어) 남북한 역사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국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컴퓨터, 물리·화학 등 과학 분야의 교재를 용어비교 작업을 통해 기초 수준의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음. 교재개발보다는 교재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함. 교재개발의 어려움을 전제한 후 접근하는 인식을 공유해야 함.
- 어문학계 및 사학계의 공동 연구성과 등에 있어 상당한 축적이 선행되어야 함.
- 교육과정, 교과서 전문가들의 집중적 논의 후 조화로운 방향의 추구.
- 남북한 모두가 상호 이해와 협력 차원에서 동질성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2-4. (학점 인정) 위에서 언급한 공동 사용 교재와 통합 교과 이외에 남북한은 학점을 상호 승인하고 교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상호 인정이 가능한 분야 >

- 모든 분야.
-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
- 비정치적 탈이념적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
- 정치사상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
- 이념교과영역이 아닌 모든 분야.
- 기 이수한 모든 학점.
- 상호인정이 가능한 분야를 학점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일정한 자격시험을 취득하여 학점과 학력을 인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념적 요소를 제외한 학문분야가 가능할 것이고 각종 객관적 검인정시험을 통해 측정 가능한 분야의 학문이 학점인정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 거의 없을 것 같음.
- 별 분야에 대해서보다 분야를 광역화(언어, 과학, 사회, 기능... 등)하여 그 중 일부를 인정하도록 함.
- 초중등교육, 대학의 전과목
- 공통으로 교육되는 교과목 모두
- 컴퓨터, 외국어, 기초과학 등
- 전 분야에서 가능함
- 운전 시험, 언어 자격 시험.
- 모든 과목에 대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임.
- 자연계
- 현재수준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임.
- 학제나 교육과정 등에 있어 상당한 조정, 보완을 전제로 컴퓨터 등 도구과목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상호이해를 위한 중단기 학생교환 프로그램.
- 수학, 과학, 공학, 예체능, 국어, 외국어 등

<예상 문제점>

- 국가 간 학점인정에서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문화적 차이.
- 인정의 기준 설정 문제(비교내신이나 동등자격인정이나)// 경우에 따라 교환학생이 생길 텐데, 규모가 될 경우의 재정지원문제.
- 공동사용 교재에 의한 학점인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동사용 교재가 아닌 독자적인 학점은 그 내용의 질을 서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사의 자질 및 수급문제.
-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 전혀 다른 교육제도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에 대한 인정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은 다른 이해당사자(외국인 및 외국장거주내 국인)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학점 및 학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 시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그리고 북한의 학위에 대한 남한의 사회적 인식에도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학력 기준 설정, 남북한 교과간 비교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학점 인정 실질적으로 불가능. 북한 교육기관의 교육적 질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할 것.
- 이는 자격부여와 사용자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문제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 성적 평가의 불일치로 인한 차별문제.
- 수준차이
- 다수 학생의 교환활동에 따른 수용시설 및 기타 편의 제공. 학사일정의 차이. 학술용어 상의 차이
- 학교와 학력수준이 비슷한 수준에 이를 때 가능한 일임.
- 용어의 혼란.

- 학습 내용 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등
- 별로없음.
- 학점 인정은 교육체계가 비슷한 상황에서 가능한 작업임.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함.
-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될 경우 과목에 국한된 학점교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양측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내용의 질적 차이.
- 별 문제점이 없다.

<대응 방안>

- 소소한 과목 이름에 얽매이기보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학습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 방안이 나올 것임.
- 학점인정의 대상과 방식을 남북한 교육당국자간 항상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함.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통한 제도화된 학점인정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북한지역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교사의 자질 제고.
- 기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미 이수한 학점에 대하여 보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외국인 및 외국장기거주내국인과 관련한 법규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과정과 검인정과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남한의 학교와 사회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실용성의 문제도 검증되어야한다.
- 기초과정에 대한 학점은 광역화된 분류체계 내에서 일정 수준 인정하고,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보완을 필수로 정하는 방식 채택.
- 초중등교육 기관에서는 학력을 인정하면 되고 대학은 담당 교수에게 일임하면 될 것이다.

- 평가 방법 전형화 모색.
- 사전에 충분한 검정을 거쳐 수준을 파악, 수준의 적정화.
- 행정적·재정적인 배려 요청. 남북한 학교의 학사일정을 통일시키거나 융통성 있게 운영. 학술교류활동을 통한 용어의 통일
- 자격 시험에 용어의 혼란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를 이용하여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 '선수과목' 형식으로 추가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북한차원에서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함.
외국어, 한자 등 언어 영역의 학점 승인 및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함. 순수한 학술수준에서 가능한 작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제도적인 틀을 남북한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학점 인정 등은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아니면 급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함.
- 양측의 협의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3.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1.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누가 참여하여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구 구성 방안 >

- 부정적
- 지도자급을 리더로 한 각계의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및 교육전문

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 각급학교 위원회 등등 다양한 수준의 기구를 조직.

- 남북한 각각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반, 관계부처 담당관 반으로 구성.
- 남북한 기존의 교육관련 기관(남한: 교육부,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총 등)의 중요책임자 그룹들이 모두 참여하여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결정사항이 의의없이 집행될 수 있는 고위급 멤버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이때 남한 동수로 구성되어야 잡음이 없을 것이다.
-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데, 교육부와 대표적 교직단체가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 정책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 대책 수립.
- 현재 남북한 교류와 관련한 중앙정부차원의 기구가 있으며 새로운 협력기구의 구성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 기구의 보완이 현실적이다. 예산기획 및 지원부처의 역할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제도화시킨다.
- 범정부 수준에서 각계 대표가 참여하고 학교제도와 행정구조를 개편함.
- 교육부와 직속연구기관 간의 협의체.
- 학제 균등화를 포함한 교육제도기구와 교과내용 조화를 위한 교과서 편찬 기구를 구성하되, 교육당국 및 일선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차명하도록 함.
- 위원회 혹은 자문단(각계 원로, 전문가, 현장 교사 등)
- 통일교육전담기구의 구성 - 책임자를 부총리급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적으로 교육인자원부와 청소년·문화관련 부서와 아울러 행정적·재정적 업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과 업무연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 남북한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인(교육학자, 교사, 학부모 등)
-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

- 현재 남북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고, 이하 교육부총리 산하 여러부서의 차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중 몇 명, 대학교 교무처장 급 교수 몇 명 등으로 구성하면 좋을 듯.
- 남북한통합교육 심의위원회
- 남북지도자가 선정한 교육분야 행정관료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 협력기구를 준비한 후, 기구 구성 방안을 그려 나가야 함.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실행은 현재로서는 어려움.
- 남북한의 최고 행정기관 책임자가 포함된 기구와 실무기구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비정부기구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음.
-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중앙정부에서 설립할 경우에는 범부처적 위상을 가진 기구의 설립.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정책과 공무원, 교과전문가, 통일부 통일정책과 공무원

<예상 문제점>

- 교육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짐.
- 인원비중 문제, 기구 본부 위치 문제 등 힘겨루기, // 남북한의 조직 방식 차이에서 오는 혼란.
- 기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남북한 고유의 정부가 각각 존재한다면 실행단계에서 상당한 난조를 띠게 것이다. 이는 분명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교직단체가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을 우려가 있다.
- 전문인력 확보
- 중앙정부는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적 논리와 환경변화에 예산의 규모와 집행이 규정될 수 있다. 다양한 민간기구간의 이해대립과 집행된 예산의 중앙정부의 책임회피가 예상된다.
- 남북한간의 상호 대표성 논란.

- 실질적 논의 기구보다 형식적 기구의 성격을 지닐 우려.
- 체제문제, 정체성 문제
- 교과내용 재구성시 이념적 차이로 인한 논란 가중.
- 기구 운영의 주체 문제, 재정문제, 대표성 문제 등(남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내 혹은 북한내 의견일치 문제)
- 통일교육전담기구의 구성시 이에 대해 정치·경제·군사 등의 분야에 비해 긴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 참여 부서간의 이견 노출. 특히 직접 관련 부서인 교육·문화 관련 부서만으로 구성될 경우 행정·재정지원과 관련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가능성.
- 교육은 체제나 이념 재생산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남북한 모두 각 체제와 이념에 유리한 교육통합안을 마련할 가능성, 이로 인한 갈등.
-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 별로없음.
- 체제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논의와는 달리 기구 구성은 체제경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됨. 따라서 의도와는 달리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움. 남북한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협력기구 구성은 실질적인 면보다는 기구 구성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남북 정부 당국만의 기구 구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관련되는 부처들간의 견해간의 갈등.
- 남북한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봄.

<해결방안>

- 평화공존 상황에서는 비정부기구 운영이 바람직
- 대화와 타협,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완. 크게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
- 교육자 상호교환방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북한지역 각급 학교 정

상화 지원방안 논의, 남북한 교과 내용 및 과정 비교연구를 통한 교육통합 지향 등.

- 선행작업으로 정치적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교육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구를 상설화, 제도화시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남북한 교직원단체의 교육적 자율성 보장.
-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들에게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접근 방안 개발.
- 중앙차원의 국가기구를 정부산하보다 의회산하에 두어 정치적 영향을 정도를 줄인다. 일정부분의 고정예산을 근거로 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민간기구로의 이전하고 예산집행의 감독과 관리를 중앙정부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다. 국가회계상의 남북협력기구 예산의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로만 책정하도록 함.) 민간단체의 기구 참여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한다.(참여가능한 민간단체는 현재 KOICA의 협력모델을 참고할 수 있음)
- 남한의 현 교육체제 및 구조로 개편.
- 중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의 구분. 사업의 우선 순위 설정.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결.
- 힘의 논리가 해결되거나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 해결가능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문제 해결.
- 반민반관의 형태를 취하면서 초기 단계는 자문이나 협력 기구가 바람직함.
- 궁극적으로 통일의 완성을 위해 교육부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정책 집행에 반영함. 책임자의 조정 역할과 아울러 교원연수, 기자재·교재의 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교육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통일의 장기적 안목에서 지

원하는 체제구축이 요청됨.

- 남북한 모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교육관료는 최소화하여 관료화나 정권의 향방에 교육의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도록.
- 체육, 직업기술교육 등의 분야부터 시작.
- 동서독 사례 등 분단국 통합사례를 참조, 기구 구성의 표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 협의하여 만들어 나가는 방법보다, 남한측의 안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임.
- 공히 대표성을 갖는 교원단체 및 비정부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계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그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함.

3-2.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이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단위)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수준에서 누가 참여하여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나리오 1 : 현재와 같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남한의 지방정부가 북한의 지방정부와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할 경우 누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 방안>

- 학생·교사 수학여행 혹은 단기간의 교환학습, 운동시합 교류.
- <행정 부분에서 본인 식견이 부족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주체에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 일단은 일반행정기구에서 기본방향을 잡고, 교육행정기구에서 실무적 추진하는 방식으로
- 북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 자율화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남측이 먼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결정기구의 구성

을 제안할 경우 북한도 호응할 것으로 보임.

- 문제는 북한의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이 얼마나 자율적인가 하는 점이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의 자율화의 수준이 증대할 것임.

- 선형작업으로 정치적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교육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구를 상설화, 제도화시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시·도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지역학교의 자매결연 추진.
- 장학연수 + 전문인력 파견 근무
-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남북한 협력기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 실효성도 작다고 판단되어 지방정부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에 반대함.
- 각 지방정부 위주로 추진.
- 시도교육청, 각 지역교육청, 일부 학교 학운위 대표, 기타 지역 인사(사회문화, 경제 관련 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교육 교류와 활성화 방안.
- 교류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교류 추진.
-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혹은 자문단(반민반관 형태)
- 지방정부 주도의 기구 구성의 경우 일반행정 부문은 가급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육행정 부문을 위주로 구성. 시도 교육감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행정 부문은 실질적인 인적 교류나 교육 및 학술 교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일반행정 부문은 이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위한 보조역할 담당.
- 지방의 교육관련 인사 및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지역간 학교 및 학생 교류.
-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기구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남북한 학교 관리 위원회, 남북한 학력 평가 위원회, 남북한 학생 관리 위원회, 남북한 교육과정 위원회
- 기구 구성: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지방정부의 부지사가 공동대표가 되고, 이하 는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 몇 명, 일반행정의 유관부서의 국장급 몇 명, 지방 대학교의 교육처장급 교수 등으로 구성함이 좋을 듯.
추진 내용: 학술교류(세미나, 공동연구), 교환학생
- 남북한의 교육관련 행정부서 관리와 각급 학교장으로 구성된 위원회 결성.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주도권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 대북 접촉 및 사업추진.
-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방문 등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들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예: 교환 근무 등)

<예상 문제점>

- 숙식문제 및 비용문제.
- 의사소통의 문제, 행정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여론수렴 및 대응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 평화공존단계에서 지방단위까지 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는 듯하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
- 기득권 세력의 반발.
- 북한 지역 지방 정부의 이탈 가능성.
- 중앙정부 수준의 통일시나리오와 교육당국의 교육적 요구가 불일치 가능성.
- 중앙정부와의 마찰, 재정 부족, 전문성 부족, 전문 인력 부족.
-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방정부 만의 교류·협력 기구

운영은 전문성의 결여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만의 기구 운영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수 있음.

- 학교, 학력간의 격차 문제, 학생 갈등 문제, 학부모 편견.
- 별로없음.
- 기존의 기구 및 편제로는 북한과의 정책결정기구 구성하기가 어려움.
- 그러나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당분간 중앙 정부 차원의 그것보다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남한 지방정부들의 사업내용과 방향의 지나친 다양성.

<대응 방안>

- 북한 학생들에 대한 숙식 및 비용 지원.
- 각 문제에 대하여 방안을 찾아 대응.
- 남측이 먼저 남북지방정부와의 교육행정 협의기구 설립을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지방단위의 교사 및 학생 교환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함.
-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방면의 다양한 교류는 동질성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접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유로운 왕래 및 자료교환 보장.
- 연수를 통한 수용
- 남한 주도의 추진 기구 구성.
- 교육재정 지원, 인적 교류(전문가, 교원, 학생), 시설 자원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 교류 방안.
- 통일관련 남북한 당사자들이 자문자격으로 참여.
- 자치단체별 차별성·다양성 인정, 교육행정의 분권화 강화, 재정 지원. 1
- 시도 교육감 수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부문에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를 참여시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

- 남북한 동수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면서 남북한 교육 관료, 교수, 교사, 학부모 대표, 사회 저명인사를 각각 1/5로 구성한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원들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선출에 앞서서 인사의 공개적인 모집과 검토하는 일들이 중요하게 전개되어야 할 순서이다.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 통합적 원칙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북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새로운 편제와 기구를 만들어야 함. 교육행정이 주도하고 일반행정이 지원하는 모양이 효율적임.
-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기구가 주고 지방정부 차원의 그것이 보완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남한 지방정부들의 대북한교육행정협의체의 연합적 조직에 의한 의견의 조율 및 조정.

시나리오 2 : 남한의 지방정부도 북한의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 속에 교육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남북한 지방정부간에 상호 합의된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할 경우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 방안>

- 상호이해 교육, 학생교류 및 체험활동, 상호교육여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공동교재 개발.
- 남한의 어느 지방 정부와 북한의 어느 지방 정부가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때 산업체계가 비슷한 지역끼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그 지방들의 특색에 맞는 교육기관을 함께 육성하고 자료를 교환하고, 학생과 교사 교수들을 교환하는 것은 교육동질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시·도 교육청과 교직원체가 교원양성의 기준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정립.
- 학제 및 교육행정 체제 개편.
-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 협력, 교류 방안 협의.
- 교육제도의 통합 논의.
- 상호 인적·물적 교류, 자료 및 정보의 교류.
- 교사·학생 교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지역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환 가능.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이나 지역의 교육발전 방향 구상.
- 지방정부 수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결정기구의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봄.
- 남북한 학교문화 통합, 남북한 학교기재 및 설비 지원, 남북한 학교 개설 및 조정, 남북한 교원 수급.
- 기구 구성은 조금 달리해야 할 지 모르겠으나 추진 내용은 시나리오 1과 같음.
- 각급학교의 교과서 개발.
- 쌍방의 교육행정관료 및 교육계 인사들의 상호 방문 및 견학 교원들의 일정기간 연수 추진, 학생들의 상호방문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는 문제는 본 사안에 있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업은 교류, 협력을 통한 남북 학생 및 교사의 이해증진 등의 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방정부들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교육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예: 교환 근무 등)

<예상 문제점>

- 여전히 시나리오 1의 문제와 비슷함.
- 아무래도 일반행정의 테두리 속에 있는 만큼 재원의 확보라든가 교육의 자율화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 권력의 적절한 배분 곤란.
- 통제적인 중앙집권적 구조로 환원.
- 일선 현장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
- 중앙정부와의 갈등, 지방정간 차이.
- 교류 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의 조달 및 인적 교류에 따른 행정수요 발생.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교환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이 전체 교류 활동에 배치되거나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
- 교육의 일반행정에 종속될 우려.
- 남북한 학교 시설 차이, 교원 수급 문제, 설비 투자 문제.
- 별로없음.
- 사업추진의 재정문제. 신변보호 문제(일과 이후의 시간 활용문제)
- 교류가 활성화되면, 양측 교육행정기구의 위상 및 일반행정과의 관계에 있어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임.
- 남한 지방정부들의 사업내용과 방향의 지나친 다양성.

<대응 방안>

- 역시 시나리오 1의 경우와 비슷.
- 일반행정 속에 교육행정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상호 교환프로그램의 추진이 절실하고 상호 이해의 첩경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강조하고, 민간차원의 재원확보 및 의견수렴과정을 보장한다.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 교육과 행정의 분리.
- 남한 위주의 분권적인 행정 조직체제 지향.
-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는 장치 마련.
-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 지방정부간 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처, 상호 협의 기구구성.
- 행·재정적 수요의 경우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이를 배려해야 함. 그리

고 교육프로그램 교류의 경우 사전에 교과 영역별로 교류 가능 프로그램의 선별과 실천방안 검토 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 교육 전문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
- 전반적으로 남북한 교육 재정의 현행 상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육 재정 확대의 폭을 줄여가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징적으로 남북한의 학생 규모나 학교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차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 기간을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10년 이상의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으로 중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남북 상호간의 간극을 줄이는 이른바 “ice breaking”에 목적을 두고 제반 사업을 추진해야 함.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구분으로 지방의 책임소재를 확정.
- 초기 단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작업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남한 지방정부들의 대북한교육행정협의체의 연합적 조직에 의한 의견의 조율 및 조정.

3-3. (북한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문제) 현재 북한의 교육재정은 너무 빈약하여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화 공존 상황에서 북한의 부족한 교육재정을 남한측이 지원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 문제점>

- 형평성의 문제(현재 남한도 11년제 무상의무가 아닌 상황)
- 단기적으로는 많은 반발과 재정 조달 문제가 생길 것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일일 것임. // 국민 이해 문제. 특히 퍼주기만 하고 실효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대처방안 찾는 문제.
- 남측의 비정상적인 교육제도는 엄청난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은 국민적 비판을 초래할 것

입.

- 당연히 보수세력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같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여건이 허락하면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 통일 이전의 지나친 지원은 남한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임. 남한의 교육도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양쪽 모두 부실해질 수 있음.

● 세금 증가

-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북한의 수용도 문제이지만 남한과 그 우방에 대한 적대적 내용이 교육내용에 존재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이더라도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재정지원에 대한 재원마련과 재정지원 집행기관 선정의 문제가 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부서간의 주도권행사 욕구가 충돌될 것이다.

북한 지원절차과 방법(현금이나 현물이나)와 이후 관리 및 확인과정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 차질.
- 남한 내에서도 지역적 편차 등이 심한 상황이므로, 실질적 재원의 부족과 반발 예상.
- 평화공존이 교과과정 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지 못할 경우 우리 재정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모순을 당하게 될 것이다.
- 남한 학생·학부모들이 차별 문제 제기.
- 남한의 교육재정 부실, 교육세 등에 대한 반발.
- 현재 남한의 교육재정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교육의 개선을 위해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현재의 교육예산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통일교육기금의 마련이 필요함.(한국교육개발원,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CR94-8), 1994. 예서는 10조원 정도의 통일교육기금 조성 제시) 12

- 북한의 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남북한의 교육 수준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 북한당국이 교육부분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재원을 전용할 우려.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북한당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재정을 전용할 우려.
- 정치,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차이가 극복될 수준에 이를 때에라야 도움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
- 남한 국민의 반발(과도한 세부담)
- 지원 속도와 지원액수, 그리고 남한 경제의 지원 폭 등에 대한 국내의 반감과 북한 주민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 발생.
- 교육재정에 관한 한 남한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님. 평화공존으로 군사비 부분을 교육재정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북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 교육재정의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국내 지지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부족한 교재와 전문교사의 부족.
- 지원의 재정적 뒷받침이 문제가 됨. 지원의 명분 확보가 역시 문제가 됨.
북한의 상응하는 태도가 문제가 됨.
- 남한의 교육재정 역시 너무 빈약한게 현실임. 다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공교육 재정의 그것이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음. 남한에 있어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이 너무 낮아 국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남한 주민들의 부정적 반응.
- 현재 남한의 교육재정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일 뿐 만 아니라 교육의 경우는 쌀 지원처럼 인도적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대응 방안>

- 북한의 무상의무교육기간을 남한 수준에 맞추든가, 지원없이 방치.
- 엄청난 재원을 다각적인 방식으로 조달// 비판적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 재정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 잘 배분하고

평가하는 문제.

-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완전 파탄상태인 바,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방안이 현실적임. 국가의 전면적인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북한지역에 독지가의 교육투자에 대한 유인동기를 개발해야 함.
 - 북한 정부와 민간간의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절충 형태의 교육기관 모델 개발이 필요함.
- 통일기금 형태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재정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 공동으로 사용하게될 교과서에 국한하여 남한에서 인쇄하여 무상으로 북한 지역에 공급하는 정도의 지원으로 제한하면 가능할 것임.
- 목적세 신설, 세계은행 등에서 장기 융자.
- 현금보다는 현물을 지원하는 방안이 차선책이지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기구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현금지원보다 현물지원은 사후 확인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 세수 확보 및 남한 주민의 협조 요청.
-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기획이 철저히 이루어져 남한 내에서도 부족한 교육 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함.
-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
- 남한도 같은 수준의 교육복지제도 정착.
- 통일비용차원에서 분담, NGOs 등의 참여 유도, 국제기구의 참여.
- 북한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통일비용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예산배정 조치 필요. 통일의 성공여부는 교육의 성패에 달림.
- 교육재정의 지원 부분을 일정 정도 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과서, 학용품의 지원, 또는 벽지의 학교신설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수년간에 걸친 국민 계몽과 통일교육기금 마련 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김정일의 외교 정책 변화를 가정할 경우, 국제기구로부터의 재정 지원 유도 방안이 효과적일 것임.

- 간접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유동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 보수 층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북한 지원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 결국 남북한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에 대한 남한 사회의 설득과 이에 따른 생색내기로 북한 주민들을 폄박하는 경우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재정의 확충이 선결문제.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도 국내 지지와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특수교원 양성.
- 지원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후, 예외를 가급적 두지 않고 집행해야 함.(우리의 능력안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hardware, softwre, manware의 영역을 구분하여 최소한의 정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부터 지원해야 함.
-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 제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교육재정의 적정 수준 확보(최소한 GDP 대비 5% 이상)와 더불어 비상한 재정 확보(GDP 대비 6% 이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교육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시장주의’를 완화해야 할 것임.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기구에 의한 지원.
-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교육재원지원이 힘들다고 봄.

3-4. (평화공존단계의 교육통합방안) 평화공존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통합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래 통합방안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선택해서 () 안에 적어 주시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통합 방안도 작성해 주십시오.

1. 교육통합방안의 제1순위

북한 교육에 관한 실태자료의 확보	- 11명
남북한 상호 이해교육의 강화	- 7명
평화와 화합을 위한 교육 실천	- 1명
남북한 교육당국자간의 협의체 구성	- 1명
통일에 대비하는 북한교육 전문가 양성	- 2명
해외 교포 교육에 대한 배려와 지원	- 0명
계	- 22명

2. 각 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북한교육에 관한 실태 자료의 확보 >

- 정확한 실태를 수집·교육
- 남북한 교육자료 교환 프로그램
- 남북한 교육 관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실태조사가 의의가 있음. 일방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추정적인 조사로는 의미가 많지 않다고 봄.
- 탈북자 통한 조사, 중국 등 제 3국을 통한 자료 입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요청, 남북한 교육, 교류강화
- 북한의 정간물, 교육소설 확보, 탈북자를 활용한 교육실태 자료의 계속적 확보
-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자료와 정보의 교류
- 북한자료 공개 확대
- 교육 자료의 상호 교환
- 북한 자료에 대한 열람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한다. 이는 북한교육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북한 전문가의 수적 확산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자료 수집과 공개

-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함
- 서울 중심이 아닌 각급 지자체 교육당국 수준에서 교직자가 북한 교육의 실태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료 요청,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남한의 인사가 직접 참여 관찰
- 교과서 및 교재의 확보·공개
- 북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다방면으로 확보함.

< 남북한 상호 이해교육의 강화 >

- 전국민적 일관교육체계 수립
- 교과서 통합
- 남북한 학생 참여 수학 여행 또는 금강산·개성 견학 및 수행 여행 단 발족, 남북한 교육 이해를 위한 비교연구 기관의 계속적 연구 지원, 남북한 학교 견학을 위한 남북 합의
- 평화교육의 강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강화, 학생과 교사, 교수들의 대표들과 교육연구기관, 교육부의 관리 등이 참여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통일교육은 계속 활성화되어야 함
- 상호 교육자료 및 정보의 공개 및 활용
- 과거 반공일변도의 분단지향적 문화구조의 타파
- 국어 및 국사 교육의 통합 과정 개설
- 남북한 이해에 대한 교육내용을 개별과목과 통합교육과정에 포함시킨다. 각종 매체를 통한 북한의 문화 소개를 강화한다. 남한 거주 북한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별도의 교육과정 구성
- 남북한의 동질성 찾아보기
-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차분한 이해가 필요함.
- 교과서 내용에 포함, 학생 교류, 교육자 교류,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 매스컴을 이용한 국민 계몽
- 사회과 교과서에 “남북한 상호이해” 단원을 설정하여 가르침.

<평화와 화합을 위한 교육 실천>

- 독립된 교과목을 한시적으로 신설
- 양측 학생들의 자유로운 왕래 및 교환 프로그램
- 교육과정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내용 보강, 학교 민주화 및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 활동의 지원, 초·중·고등학생 단체의 재정적 지원 및 감사, 학교 학생회의 활성화
- 교과 내용에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의식 변화를 가능케 하는 평화 교육을 실천해야 함
- 공동교재사용 교과를 최대한 확대, 특히 남북한의 보편적 역사 인식과 민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상호 실천, 학자뿐만 아니라 교사 등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함. 연수 기관의 설치
- 상호 방문과 자매결연 등
- 평화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육 실현, 다양한 평화 운동 교육
-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각종 문화적 접촉을 위한 자료를 개발한다.
- 남북한 교류 증진
- 국제 평화의 필요성 강조
- 당위적인 통일보다 대결과 갈등의식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공멸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항구적 평화의 가치와, 미래지향적인 민족 화합의 의미를 깨우쳐 나가야 함.
- 교재 제작, 학생 교류, 관련 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교육실천, 사후 평가 및 문제점 개선
- 청소년 교류 활성화
- 사회과 교과서에 “평화와 화합” 단원을 설정하여 가르침.

< 남북한 교육당국자간의 협의체 구성 >

- 작은 것부터 실천, 신뢰 구축
- 민간기구들간의 협의체
- 최종적인 남북한 교육 문제에 대한 쌍무적인 관심과 향후 상황에 대한 인식 교환, 향후 재정 및 기재 시설 관리 및 적용 연구
- 남북한 교육 책임자를 중심으로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대표들과 교육연구기관, 교육부의 관리 등이 참여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남북한 교육당국자간의 정보제공과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업무 협의체 구성. 교육 관련 연구기관 간의 자료 교환
- 반민반관 형태의 협의체 구성
- 교육 당국,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층위의 협의체 구성
- 실질적 교류의 통로를 형성하여 교육의 각 부문에서 자료나 정보 등을 필요에 따라 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을 하도록 함
- 단순한 교사간의 교류보다는 정책결정권자의 상호방문과 교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을 증대시키는 형태로 출발하여,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가볍게 서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 발생시 대처
- 교직원체도 포함시킬 것
- 이 단계는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척 수준인 바, 교육당국자의 협의체 구성 전 단계의 상호 교환 프로그램 추진을 목표로 함.
-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의견 교환을 수시로 반복, 나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설 기구를 조직 운영
- 시민단체(NGO)의 활성화
- 남북한 교육 전문가(교육학자, 교과전문가, 현장교사)로 구성.

< 통일에 대비하는 북한교육 전문가 양성 >

- 정확한 실태를 수집·교육
- 북한 교육 연구의 지원
- 통일에 대비하는 북한 교육 전문가들은 현재에도 충분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그 인재풀을 이용하여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양적인 북한 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성을 가지고 북한 교육을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 북한학과 개설이나 북한대학원의 증원 충원, 통일교육원을 이용한 교사들의 북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연수 강화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 정치학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기존의 북한학에서 교육·문화 영역에 대한 관심을 늘리도록 하는 과제, 교사양성과정에서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대학원의 모든 전공별 과정에 특별 과정 신설
- 체계적인 교사 재교육 체제 도입
- 북한교육전문기관의 수립 및 국가 차원에서의 전문가 양성
-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과정과 교수재교육과정에 북한학 및 통일관련 분야 과정 강화. 북한 및 통일분야의 인력 수급정책을 통한 북한학 관련 학과와 북한 및 통일교육관련 학과의 지원과 각종 연구지원사업. 남한 거주 북한 동포의 전문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연수 강화
- 전문대학원 교육의 확충
- 과학 기술 분야의 교육은 객관적 판단과 대안이 구체적이나, 국어, 역사, 정치경제 등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북한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 대학 특히 사범계 대학의 관련학과 설치 및 증원, 대중교육 및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연수원 및 연수 프로그램의 확장
- 폭넓은 동북아학의 입장에서
- 대학교 내에 전문가 양성 연구소나 과를 설립함.

< 해외 교포 교육에 대한 배려와 지원 >

- 해외의 한국 학교들의 행정·재정적 지원
- 민족교육의 측면에서 현행의 남북 갈등적인 입장을 배제한 민족 통합적 논리를 계속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친북 인사라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해외 동포들에게 적용되는 이데올로기적인 구분과 관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남북한의 한쪽을 선택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남북한을 모두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다양하게 갖게 된다는 것으로 파악하는 해외 교포 교육의 민족 포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 및 프로그램의 강화, 해외 교포들을 위한 현지 문화관의 증설 및 신설, 국내 교육 기관과의 학점제 교환 인정제, 한국학 교수들의 파견확대 및 이에 대한 지원, 해외 대학입학 시험과목으로 한국어의 채택을 위한 노력
- 지난 역사에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강요당하거나 편향적 인식을 지녀왔던 해외 교포에 대해 통일의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정서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적 자긍심과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국인 학교 신설 및 지원, 모국 방문 지원, 순환 교사제 운영 등
- 해외 교포의 현지 교육 적극 지원
-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해외동포청과 같은 기구를 두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웹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우수학생의 초청교육 실시
- 자유로운 남북 왕래 보장
- 해외교포사회에 교수, 교사의 파견, 교포학생들의 모국 연수지원등,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해 나가야 함.
- 별로 시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해외 공관, 교육원 등을 통한 이해 증진, 가능하면 재원 기금모금, 해외 교포의 국내방문 체험
- 국내 및 중·일 교포 자녀 교육
- 해외 한인학교 및 외국 대학교의 한국학과 교포재학생들에게 지원.